

연립총남

THE CHUNGNAM REVIEW

통권 41호 2008. 1

Contents



135



142



147

권두언

- 006 200만 도민의 행복이 최우선 이완구/충남도지사

특집 / 함께하는 복지충남 건설을 위한 전략 및 과제

- 008 충남 여성복지의 현황과 과제 이영미
030 충남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성태규
041 충남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고수현
062 저출산시대의 충남 아동복지 현황과 과제 이재완
077 충남 결혼이주민 가족의 현황 및 복지증진 문순영

충남논단

- 100 한·미 FTA체결에 따른 충남농업의 대응방안 신동호
114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사례분석과 과제 이인배

충남의 도시

- 134 바다와 돌이 함께하는 예술·문화 관광도시 웅천읍 조봉운

생태영농 탐방

- 142 회포마을에 닳을째 굴러온 호박미인 유병연



151

해외탐방기

- 150 특화된 도시 개발과 전략 강영주

오피니언

- 172 논산을 국방클러스터 중심지로 김용웅

행정도시와 주변 도시 간 상생발전이 가능하려면 김용웅

- 177 지방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정종관

- 180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거는 기대 성기훈

- 182 **도정소식**

- 197 **연구원소식**

- 210 **RIS소식**

- 214 **RHRD소식**



165



192



200만 도민의 행복이 최우선

충청남도지사 이완구



희망찬 무자년(戊子年)을 맞아 ‘열린충남 2008년 신년호’가 발간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충남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충남발전연구원 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도민 여러분의 큰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그 어느 해보다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일궈냈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태안기업도시가 본격 착공되었고, 국방대의 논산 유치와 당진-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확정 등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중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12월 헤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청정해역을 자랑하던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가 한순간에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도민 모두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기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안 앞바다를 살리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수십만 자원봉사자들의 행렬과 각계각층의 따뜻한 온정과 도움의 손길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서해안이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루빨리 아픈 상처와 고통을 훌훌 털고 일어나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도정을 ‘일등 경제 속에 고품격 문화가 살아 있는 충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이루는 데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민선4기 출범 이후 역점으로 추진해 온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인프라의 구축과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하여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다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의 경우, 그동안 단순히 휴식과 소일거리의 공간이었던 경로당을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경로당 웰빙화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575억을 투자하여 노후된 경로당의 리모델링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경로당의 증·개축·신축 등을 통하여 경로당을 웰빙공간으로 만들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현실화하겠습니다. 또 자립형 경로당 육성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 보급, 지역복지자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활력 있고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또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습시다만, 앞으로 장애인의 생활기반 조성, 이동과 접근성 향상,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 교육과 정보화 수준의 제고, 인권 신장 등을 위해 2012년까지 총4,376억(109개 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보건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지와 벽지, 섬 등에서 실시간으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구축한 'U-Health 원격영상 진료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가동하고 저소득과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내과와 치과, 한방 중심의 진료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의 진료도 병행하겠습니다. 또 행복 보건소만들기 컨설팅 등을 통해 보건소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고,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과 다자녀 모범가정 선발 등 최근 국가와 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계층간에 복지정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연구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5개 분야 66개 사업에 총 4,30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아동과 노인, 여성,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일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도 적극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와 경제, 문화예술 분야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 다가온 2008년 새해를 맞아 충남발전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연구원 가족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충청남도지사 이 완 구

충남 여성복지의 현황과 과제

이영미 |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우리나라 여성복지는 요보호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에 기초해 부녀복지사업으로 발달해 왔으나, 199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로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로 전환되고 여성복지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2001년 여성정책전담부처로서 '여성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출범되었고, 2005년에는 여성부를 모체로 가족정책을 통합한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되었다.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여성복지에 대한 제도적인 발전과 함께, 지방자치제의 진전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여성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설치 및 개편되었으며,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수행은 물론 여성관련법의 구체적 적용과 시행을 담당해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여성복지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하위 행정단위가 아닌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여성의 요구에 근거하여 여성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해 봄으로써 충남의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여성복지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해보고, 향후 충남 여성복지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충남 여성복지의 현황¹⁾

1. 요보호 여성의 복지지원 사업 현황

1) 한부모가정 지원현황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결손된 상태에서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 부자복지법을 제정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충남의 연도별 모자가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도별 모자가정 현황

구분	전체 모자가정		재가보호	
	가구수	가구원	가구수	가구원
2004	2,566	7,050	1,181	3,112
2005	3,207	8,907	1,473	3,924
2006	3,480	9,477	1,630	4,226

충남에서는 2006년에 89명의 모자가구주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평생직장 및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자녀의 능력 향상으로 가난의 대물림이나 빈곤의 악순환을 탈피하고자 모자복지기금을 확보하여 대학입학자녀에 대하여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알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모자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학대로 피난중인 모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들을 위해 미혼모자공동생활 가정을 1개소 운영하고 있다.

1) 출처 : 충청남도, 「2007 충남여성백서」
충청남도, 「2006 충청남도 도정백서」

천안시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사례를 발굴하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역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한부모가족희망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모자 가정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의욕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모자가정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복지재단과 공동으로 후원자를 발굴하여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결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청구소송 및 미혼부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무료법률구조로 한부모 가족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 및 보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1997년 12월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데, 그 적용대상은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인 남편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적대적인 물리적 힘이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받는 여성들이다. 성폭력 피해여성은 1994년 1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적용대상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며 성폭력이란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협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인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여성폭력 긴급보호 및 상담을 위하여 연중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인 「충남여성1366」, 가정폭력상담소 22개소, 성폭력상담소 10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1개소 등 총 33개소가 운영되고, 2006년 상담 실적이 33,979건으로 매년 상담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표2>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여성폭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동안 사적문제로 여겨왔던 여성폭력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 및 여성권의 신장의 문제로 인식하여 상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표 2〉 충남 여성폭력 상담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심리·정서 지원	전문기관 알선	생계 보호	직업 알선	치료 의뢰	수사법적 지원	기타
2003	21,756	20,137	397	95	275	578	104	173
2004	25,319	18,905	3,133	291	246	609	1,649	486
2005	34,342	25,305	4,570	250	437	642	1,934	1,204
2006	33,979	24,967	4,127	240	445	738	2,421	1,041

〈표 3〉 상담소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4	2005	2006
여성긴급전화 1366	1	1	1
가정폭력 상담소	12	17	21
성폭력 상담소	6	7	1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6	6
성매매피해 상담소	1	1	1
성매매일반지원 시설	1	1	1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은 6개소가 운영되어 2006년에는 총 368명의 입소자에 대하여 숙식과 의료지원 및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고,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지원 1개소가 운영되어 입소생 22명에게 의료비 지원과 취업·창업 가능한 직업훈련 및 검정고시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다.

〈표 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개소수	-	1	1	2	2	2	3	6	6
보호인원(명)	-	9	36	72	147	193	212	358	368

〈표 5〉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입소인원(명)	80	47	47	24	21	21	19	13	22

(3) 여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여성폭력의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치료구조 사업을 추진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정 치료사업 9개소에 104명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부부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 성폭력피해자 치료 교정을 위하여 보호시설 및 상담소 6개소에서 229명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상담, 심사회복캠프 프로그램 운영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는 보호시설 입소자 22명에 대해 검정고시, 컴퓨터, 미용 등의 자활교육, 전문심리상담 103회, 인성변화프로그램을 68회 운영하였다.

(4) 기타 여성폭력 관련 사업

여성폭력 피해 보호지원서비스의 수준제고를 위하여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담능력 향상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워크숍을 연2회 개최하고 있으며, 상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상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여성폭력 관련 기관 단체 간 연계형성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2년 9월에 행정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17개 기관 단체의 20명이 참여하여 운영해 오던 ‘충남지역협의체’를 성매매방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20개 기관 22명이 참여하는 ‘여성폭력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기관·단체별 역할분담과 피해자 구제의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여성폭력·성매매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범도민적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여성복지시설의 책임자 42명은 기관·단체 간 연계형성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03년부터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기관 간 정보교류를 위해 시설관계자 회의를 2회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으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 할머니 4명에 대하여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과 함께 생활안정지원금을 매월 74만원씩 지급하였다. 또한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여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의 파악과 설·추석명절 및 광복절에는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꾸준히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 2명에게 간병비 166만원을 지원하였다.

3)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지원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 문제 등이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가정교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한국문화 이해부족, 한국어능력 저하로 인하여 자녀들이 또래에게 따돌림을 받는 등 아동과 부모들의 심각한 고민거리로 부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충청남도 국제결혼가정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표6>과 같다.

〈표 6〉 국제결혼가정 실태조사 현황

구분	출신 국가별								
	계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우즈베키 스탄	캄보디아	기타
2005	1,514	600	347	255	179	51	20	11	43
2006	2,190	823	574	348	275	77	32	25	64

〈표 7〉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및 취학별 현황

구분	가구별 자녀수						취학별 자녀수					
	계	없음	1인	2인	3인	4인이상	계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
2005	1,514	531	457	382	115	29	1,613	1,080	413	33	30	57
2006	2,190	690	734	555	167	44	2,524	1,548	759	76	51	90

충청남도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행복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으로는 부부교실, 고부교실, 가족교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모성보호, 충남국제결혼가정 한마당 축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문화보급사업”으로는 한글교실, 생활예절교육, 요리교실, 우리문화 가족여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및 한국친정 만들기 결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 내에 2007월 10월 현재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3개소(아산시, 공주시, 금산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4)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2006년도 말 충청남도 장애인 등록은 101,815명이며 이중 여성장애인은 38,480명으로 전체 충남장애인 등록인구의 37.4%이다. <표8>을 보면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현황을 알 수 있다.

<표 8> 여성장애인 증가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장애인 등록	60,273	67,701	75,313	83,589	92,634	101,815
여성장애인	19,032	21,371	25,487	29,333	33,746	38,480
여성장애인 증가율	22.53%	16.31%	15.58%	15.09%	15.04%	14.02%

충남에서는 충남여성장애인연대가 2004년 3월 구성되어 출범하여 소외된 여성장애인 위기 개입과 상담 및 지원활동, 여성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정책개발활동, 시민단체와 연계한 각종 활동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여 여성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권리보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6년 ‘제4회 여성장애인 패션쇼’를 개최하여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성장애인 패션쇼는 충남여성장애인 연대에서 여성장애인 회원과 자원봉사자가 모델이 되어 2006년까지 4회에 걸쳐 개최되어 무성(無性)의 존재로 인식되어 오던 충남지역 여성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사회적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사도우미 사업

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지원, 산후조리, 자녀양육 및 중증 독거장애인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 장애인복지관 및 시군에 874백만 원을 지원하여 경증 여성장애인 또는 가사도우미가 2~3인이 1조가 되어 충청남도 내에 150명이 활동하고 있다.

5) 여성노인에 대한 지원

충청남도 내 노인인구는 2006년 말 271,346명으로 전체인구의 13.7%차지하고 있다. 이 중 여성노인은 162,036명으로 전체 노인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를 건강하고 보람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중 희망자 전원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각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를 보급하였다. 2006년 전체 검진 인원은 884명이고 이중 여성노인이 627명으로 70.9%를 차지하였다.

기타 노인생활시설은 2006년 현재 14개소이며, 충남지역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2개소로 확충하여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였다. 노인들의 친교 및 사회활동 참여와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충남 도내 경로당 시설은 5,254개소로 지역사회 내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에서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소당 연간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 취미활동을 통한 소외감 해소를 위해 노인 솜씨 및 장기자랑 대회와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 일반 여성지원 사업현황

1) 영유아 보육 사업현황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과 여성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아동보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충청남도의 취학 전 아동은 2006년에 117,958명으로 도 총인구인 2,000,844명의 5.9%로 앞으로 보육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40.3%인 47,560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표 9〉 연도별 보육시설 현황

구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시설	1,153	1,113	1,074	980	885	823	771
아동수	47,460	44,674	40,498	38,635	35,413	31,585	29,537
시설증감율(%)	3.6	3.6	9.6	10.7	7.5	6.7	10.3

충청남도 내 보육시설은 2006년 1,153개소로 47,460명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가구당 4인 기준 월소득 247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20,212명에게 32,748백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2007년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0세~4세까지의 아동에게 162천원~361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만5세 아동 6,842명, 장애아동 540명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함으로써 보육의 보편화를 실현하였고,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 2,701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여주었다.

2006년 충청남도 내 국공립 및 법인시설과 영아·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등 공공 보육시설의 종사자 1,912명에게 도에서 인건비 27,64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민간 보육시설 747개 시설에는 도에서 교재·교구비 668백만원과 농어촌지역의 370개 시설에는 714백만원의 차량운영비가 지원되었다.

〈표 10〉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2006)

구분	계	국공립	민간보육			직장	가정	부모협동
			법인	법인외	개인			
시설	1,153	35	131	77	503	14	392	1
아동수	47,560	1,997	9,977	4,501	24,945	784	5,338	18

특수시책으로 장애아통합보육을 실시 60개 시설에서 156명의 장애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일반아동은 장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아통합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에는 담당보육교사 특별수당 월5만원, 장애아동 3명 이상 보육시설에는 월 30만원의 시설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아전담시설 46개소, 장애아전담 7개소, 방과 후 전담 6개소, 시간 연장 80개소, 휴일보육 7개소, 방과 후 통합보육 7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해서는 충남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영유아보육의 정보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보육사업의 활성화와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시행하였으며, 2006년도까지 230개 시설이 자발적으로 신청, 참여 70개 시설이 인증을 통과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고 아동중심의 편안한 보육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 관리는 물론 시설정보, 아동정보, 종사자 정보 등 보육통합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보육행정전산망을 2006년 9월부터 운영하였으며, 도내 전 보육시설과 행정기관을 연결하여 보육행정업무를 효율성 증가 및 보조금 지급의 신속, 간결,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본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0~2세의 영아에게 1인당 69~249천원씩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사업을 유아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현황

(1)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가. 여성단체 활동지원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한 여성단체는 13개 여성단체가 168개 지부를 형성 268,56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8개 미가입 단체에 8,868명이 활동하고 있어 모두 277,429명의 여성들이 각 여성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충남여성포럼 운영

2001년 5월에 충남여성포럼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포럼은 정치경제·교육문화, 사회복

지 보육, 농촌 환경 등 4개 분과 135명으로 운영되어 오던 중 2003년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발족 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도우미지원 및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4회 충남여성포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17개 도·시·군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자원활동센터의 여성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모·부자가정, 소외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5,259회 37,364명의 여성자원봉사자들이 7개 분야에서 학습지도, 상담, 밑반찬 지원, 이·미용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의 필요성 증대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와 지역실정이 감안된 맞춤형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자원활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중간지도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안전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도에는 1,426명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고, 여성자원봉사자 대회에서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의 1년간 활동을 결산하고 우수봉사자를 표창하며, 음악회를 열어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표 11〉 여성자원활동센터 등록인원

계	천안 시	공주 시	보령 시	아산 시	서산 시	논산 시	계룡 시	금산 군	연기 군	부여 군	서천 군	청양 군	홍성 군	예산 군	태안 군	당진 군
5,059	2,047	100	172	376	191	134	104	483	60	95	119	133	161	200	363	321

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민간여성단

체를 사업주체로 하되 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운영 규칙’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사업, 여성의 고충상담 및 각종 여성관련 후생복지·문화 활동의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은 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신규설립 시 설립비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보조하고, 연간 운영비 중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7년 현재 50개소가 있으며, 충청남도에는 3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다.

마. 기타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수요와 지역여건에 맞는 교양, 의식, 취미, 기술,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16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여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여성의 건강관리, 생활법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16개 시·군에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행정의 풀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남도 내 여성 통·이장에게 일선 행정참여를 위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여성리더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전훈련을 실시하여 여성후보자들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방의회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정치대학을 운영하여 선거전략 및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 건강가정 지원체계구축

핵가족화 및 저출산과 이혼 등으로 가족의 인원이 줄어들 뿐 아니라 가족의 해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가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충남에서도 2005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천안)를 운영하여 부부상담, 이혼 전 상담, 예비부부 상담 등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2006년에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시범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7년에는 장애아 아동 양육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아 양육자들이 가족의 애경사 등의 참석시에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07년에는 당진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3) 지역여성 문화 활동 지원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면서 도가 운영해온 여성회관의 기능을 개발원에 이관시키고, 기초단위 지자체별로 여성회관, 여성복지관, 여성문화회관, 가정복지회관 등의 이름으로 여성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당진군의 경우, 가정복지회관을 '여성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 현재 도내에는 12개의 여성회관이 있다.

3) 양성평등의 촉진

(1) 성인지 정책형성을 위한 제도 강화

가.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충남에서는 정부의 여성발전 기본법 제8조 제1항, 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연도별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세부과제에 맞춰 충남이 추진할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수립 세부과제별로 관련 사업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고, 또한 제2차 기본계획에 나타나 있지 않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자체과제를 '특수과제'로 하여 9대 핵심과제 46개 시행과제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였다.

나.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1999년 7월 개원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지역 여성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여성정책 개발, 교육프로그램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등 충남여성정책의 산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조직은 원장 밑에 정책개발실, 교육실, 행정실 등 3개 부서가 있고 총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6년에 수행한 정책연구사업으로는 자체기본 과제 ‘충남 국제결혼가족의 실태 및 정착 지원방안 연구’ 등 15건, 현안과제로는 ‘충남 한부모가족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등 9건 등, 총 24건을 완료하였으며, 중앙정부를 비롯한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지방화 시대 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에 성공하였다.

또한 교육 사업으로는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과정’ 등 자체 프로그램 교육, ‘농촌 리더반 교육’ 등 도의뢰 위탁교육 등으로 총 17과정 727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족 돌보미 사업’ 등 현안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하여 충남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외부수탁교육을 통해 교육역량 및 수준향상에 기여하였고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충남여성자원활동센터’ ‘충남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다. 도정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양성 평등적 관점의 정책형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7년 말까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 위촉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6년 말 총 57개 위원회 760명의 위촉직 위원 중 289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여성위원 평균 위촉율이 38%를 달성하였으며, 신규 여성위원을 발굴하여 위촉권고 및 신규 여성위원에 대한 연찬회 실시와 각종 도정 정보를 제공하였다.

〈표 12〉 연도별 여성참여 목표율(위촉직 기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목표율	32%	34%	36%	38%	40%

〈표 13〉 연도별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구분	위원회 수	여성위원 참여현황								
		전체			당연직			위촉직		
		전체	여성	%	당연	여성	%	위촉	여성	%
2003.12	57	1,036	256	24.7	267	3	1.1	769	253	32.9
2004.12	57	1,028	268	26.1	267	5	1.9	761	263	34.6
2005.12	57	1,026	279	27.2	265	5	1.9	761	274	36.0
2006.12	57	1,105	296	26.8	345	7	2.0	760	289	38.0

라.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추진

2004년부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권익증진, 양성평등의 촉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증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06년에는 기획공모사업 8개 분야에 총 15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표 14〉 연도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지원현황

구분	계			기획사업			일반사업		
	분야	건수	사업비	분야	건수	사업비	분야	건수	사업비
2004년	9	32	120,000	6	25	99,000	3	7	21,000
2005년	11	41	150,000	8	35	129,000	3	6	20,500
2006년	12	40	150,000	8	35	135,000	4	5	15,000

마.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운영

공무원의 양성평등 마인드 확산을 위해 여성정책개발원에 선택전문 교육과정과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소양과목으로 양성평등교육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장교육과 시청각교재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표 15〉 연도별 공무원양성평등교육 실적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실적	74명	81명	58명	42명

(2) 양성 평등한 공직사회 제도 정착

가.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도내 여성공무원 현황은 2006년 기준으로 4,181명(26.4%)으로 5급 이상(일반·별정·계약) 30명(2.9%), 6급 이하(일반·별정·계약) 3,460명(31.3%), 기능직 586명(25.3%), 특정직(소

방·교원) 105명(7.3%)이다.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1년 20.4%에서 2006년 26.4%로 6% 증가하였고, 2006년 지방공채 여성합격자 비율은 9급 57%, 7급 27.8%를 차지하는 등 여성공무원 비율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력개발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저변 및 임용 확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1차(2002~2006)년도 여성관리자(일반직 5급 이상)와 이에 상당하는 연구, 지도, 별정, 계약직) 임용 목표제를 추진하였다. 제1차년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결과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9%(2006년 12말 기준)로 2002년에 비해 16명, 1.3%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목표율(9.3%)에는 미달된 상태이다.

〈표 16〉 제1차년도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실적

(단위 : 명,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목표	전체	975	985	998	1,040	1,096
	여성	33	41	44	55	101
	비율(%)	3.4	4.2	4.5	5.3	9.3
실적	전체	856	966	979	985	1,029
	여성	14	21	25	25	30
	비율(%)	1.6	2.2	2.6	2.5	2.9

나.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추진

충청남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임용시험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2항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 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중 7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과 연구사 및 지도사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에 적용되며 시험실시 단계별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자로 결정한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추진 실적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9급	7급	연구·지도직
계	30	21	8	1
2003	1(여성1)	-	-	1(여성1)
2004	11(남성3,여성8)	6(남성3,여성3)	5(여성5)	-
2005	8(남성2,여성6)	5(남성2,여성3)	3(여성3)	-
2006	10(남성10)	10(남성10)	-	-

Ⅲ. 충남여성복지의 과제

1.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필요

여성발전기본조례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제정하게 되므로 이 법에 근거한 조례제정은 지역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지자체 여성정책의 내용을 담보해 줄 수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2006년 12월 현재 모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충남은 2006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기초단체의 경우 일부만 제정하고 있는데 충남의 경우 2006년 10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 단체가 없다.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자치단체가 제정하였다는 것과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의 차이는 자치단체가 여성발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무를 갖는지를 자치단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명문화한다는 것과 대부분의 조례에서 여성정책의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의 의무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며 지방의 여성정책이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성발전조례의 명문 규정에 따른 이행의 의무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김혜영, 2007). 따라서 충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표 18〉 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현황

(단위 : 단체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본청	1	1	1	1	1	1	1	1
자치단체 수	25	16	8	10	5	5	5	31
조례제정 자치단체	21	0	0	0	0	0	0	18
제정비율	84%	0	0	0	0	0	0	58.1%

구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1	1	1	1	1	1	1	1
자치단체 수	18	12	16	14	22	23	20	4
조례제정 자치단체	7	5	0	0	3	1	2	4
제정비율	38.9%	41.6%	0	0	13.6%	4.3%	10%	100%

* 2006년 10월 현재
 2006년 12월 충청남도과 경상북도가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함
 자료 : 김혜영, 2007, 74쪽.

2.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 실시에 대비한 준비 필요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기재정운용’, ‘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 예산회계제도’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모든 정부부처는 회계연도 2010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에 앞서 이미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각 부처의 양성평등 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연구단, 2007).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고가 시, 군, 구 차원에서부터 성별 분리통계에 기초하여 수집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충청남도에서도 특별히 여성 혹은 남성을 위해서 계획·집행되는 예산 뿐 아니라 성중립적인 정책이나 일반주류예산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집행되고 그 효과가 남녀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여성정책기구와 여성공무원의 위상과 권한 제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대부분이 국수준의 여성정책기구를 갖고 있고, 기초단위는 과 혹은 담당(중전의 계) 수준의 위상이다. 행정기구의 위상은 관련업무의 우선순위나 효과적인 집행과 직결되어 있다. 광역의 경우 과 수준에서 여성정책업무 전담기구 설치가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업무를 전담할 과(課)수준의 기구 설치에 미약하다. 충남의 경우 국 수준으로 여성정책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담당공무원의 수도 늘려야 함을 <표19>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19> 광역자치단체 국·과 수준 여성정책 담당부서와 인원

(단위 : 명, %)

시·도명	국명	과명	국인원* (과담당)	시·도명	국명	과명	국인원* (과담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152(35)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95(19)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160(44)	충청북도	-	여성정책관실	24(13)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213(18)	충청남도	-	여성정책관실	33(15)
인천시	여성복지보건국	여성정책과	147(18)	전라남도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110(14)
광주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76(12)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65(17)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양성평등과	116(16)	경상북도	사회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48(16)
울산시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66(15)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107(17)
경기 도	본청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49(11)
	2청	여성국	여성복지과				

* ()는 여성복지관련국 중 여성정책과 또는 여성정책담당 인원임

자료 : 김혜영, 2007. 83쪽, 재수정.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의 증가는 공직에서 성평등의 기본적인 가치적인 실현일 뿐 아니라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계획수립과 집행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양성 평등한 공직사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충남에서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저변 및 임용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1차(2002~2006)년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하였다. 제1차년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결과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9%(2006년 12말 기준)로 2002년에 비해 16명, 1.3%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목표율(9.3%)에는 미달된 상태이다. 이는

5급 공채 임용이 거의 없이 내부승진에 의존하는 지방공무원의 특성으로 인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의 한계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관리직 승진대상인 6급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부족, 그리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다. 도에서는 앞으로 임용목표율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충남 지역여성의 실태와 요구에 근거한 여성복지정책 수립과 집행 필요

이제 지자체의 여성정책은 저예산과 비예산, 행사성 전시사업과 성인지적 관점에 반하는 여성복지 정책의 내용에서 지역여성의 특수성과 구체적 요구에 근거한 여성복지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여타의 지역과는 상이한 점이 많아 중앙의 여성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해 손자녀 양육 가정, 여성농업인, 여성노인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정책대상도 훨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개발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구별되는 지역여성연구소가 지역여성의 실태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앞으로 지역여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연구와 지역의 현장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여성연구소로서의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5. 정책과 예산수립, 집행, 평가과정에 여성참여 시스템 마련

여성은 여성정책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며, 새로운 여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속에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책과 예산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전 과정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참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여성발전위원회, 충남여성포럼,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복지정책을 협의하고 지원에 줄 수 있는 각종 조직들을 활성화하여 성주류화정책의 수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복지 또는 여성정책관련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여성문제와 정책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지역여성들이 실질적인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여성 소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충남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론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본격화되어 중앙정부의 단독정책결정 유형은 점차 감소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유형이 증가할 것이다.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들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청남도 여성복지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확립하고,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여성복지정책과제를 책정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여성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주,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여성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울산과학대학 연구논문집』, 제26권 제2호, 1999.
- 김소연,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인지적 정책추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애령,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A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혜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집행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박윤정, “한국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영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여성정책포럼』, 제8호, 2005.
- 충청남도, 「2007년 충남여성백서」, 2007.
- _____, 「2006년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6.
- 한승준·주재현,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업무의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7권 1호, 200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연구단, 2007, <http://gb.kwdi.re.kr>

충남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성태규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우리의 경제생활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질적 삶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화와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많은 후천적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및 약물 오염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인도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된 장애인은 2000년 96만명(전 국민의 2.04%)¹⁾에서 2007년 3월 201만명(전 국민의 4.02%)으로 거의 2배가 증가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적으로 2003년 장애인 범주가 15종으로 확대된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장애인 절대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관련법이 개정되어 장애인복지에 사회적 관심도 강화되고 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관련법의 내용을 보면,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지니게 되었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신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며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증진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안을 방송국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1) 통계청 내부자료, 2007

및 자립생활지원센터 설립이 가능케 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이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도 장애인의 이동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증진조항이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과거 '재활(rehabilitation)'이라는 소극적 복지차원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independency)'이라는 적극적 복지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충남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고자, 충남 장애인 복지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는 생활안정, 이동,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세부부문으로 구별되지만, 본고에서는 장애인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생활안정과 이동부문에 국한하여 현황 및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충남 장애인복지 일반현황

1. 장애인구

충청남도 장애인구는 2006년 12월 말 현재 101,815명으로 충청남도 전체 인구의 5.09%에 달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충청남도 전체장애인의 17.53%인 17,846명으로 가장 많다.

〈표 1〉 연도별 모자가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등록 장애인 수	전체인구	비율(%)
계	101,815	2,000,844	5.09
천안시	17,846	531,193	3.36
공주시	7,619	129,862	5.87
보령시	7,296	108,526	6.72
아산시	9,689	217,112	4.46

서산시	6,971	152,279	4.58
논산시	8,726	132,814	6.58
계룡시	1,077	36,959	2.91
금산군	3,757	58,369	6.44
연기군	4,587	84,107	5.45
부여군	6,046	80,115	7.55
서천군	4,733	63,105	7.50
청양군	2,340	34,405	6.80
홍성군	5,244	90,242	5.81
예산군	5,533	90,507	6.11
태안군	3,517	64,082	5.49
당진군	6,834	127,167	5.37

자료 : 충남장애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발전5개년 기본계획, 2007.

2007년 3월 현재 충남 장애인구의 등급별 특성을 살펴보면, 6등급이 22.30%인 23,277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2·3·5등급이 비슷한 현황이고 1등급이 10,258명으로 가장 적다.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1~3등급)은 47,171명으로 충청남도 전체 장애 인구의 45.28%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이 64,481명으로 여성 장애인 39,695명보다 62.44% 많다.

〈표 2〉 충남 등급별 장애인구(2007년 3월 현재)

(단위 : 명, %)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계	104,176	10,258	18,301	18,613	14,449	19,279	23,277
비율	100	9.84	17.57	17.87	13.87	18.51	22.30
남	64,481	6,045	10,835	12,225	8,399	11,205	15,772
여	39,695	4,213	7,466	6,387	6,050	8,074	7,505

자료 : 충남장애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발전5개년 기본계획, 2007.

2007년 현재 충청남도 유형별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55,252(53.04%)명으로 다른 장애인구에 비해 현저하게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각(10.22%), 청각(9.83%), 뇌병변(8.76%), 지적장애(8.1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법정장애유형으로 새롭게 추가된 호흡기(0.94%), 간(0.23%), 안면(0.08%), 장루(0.58%), 간질장애(0.39%)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다. 지역별 장애인구를 살펴보면, 천안시가 17.4%(18,209명)로 가장 많으며, 계룡시가 1.1%(1,113명)로 가장 적다.

충청남도 연도별 장애인 등록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50,930명에서 2007년 3월 104,176명으로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충남 전체인구의 약 5.3%에 해당한다.

〈표 3〉 충남 연도별 등록장애인구

(인구 :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3	연평균증가율
계	50,930	60,273	67,701	75,313	83,589	90,306	101,815	104,176	14.9
증가율	25.2	18.3	12.3	11.2	9.9	11.0	12.7	2.3	
천안시	7,291	9,214	10,624	12,337	14,334	15,700	17,846	18,209	21.4
공주시	4,428	4,953	5,445	5,913	6,426	6,855	7,619	7,823	11.0
보령시	4,644	5,183	5,689	6,024	6,359	6,711	7,296	7,409	8.5
아산시	4,606	5,493	6,363	7,115	7,918	8,494	9,689	9,965	16.6
서산시	3,016	3,897	4,422	5,026	5,721	6,172	6,971	7,176	19.7
논산시	4,228	4,897	5,525	6,190	7,000	7,588	8,726	8,905	15.8
계룡시	394	446	568	660	761	884	1,077	1,113	26.1
금산군	1,953	2,265	2,519	2,818	3,098	3,365	3,757	3,844	13.8
연기군	2,299	2,588	2,880	3,255	3,731	4,013	4,587	4,673	14.8
부여군	3,335	3,831	4,214	4,576	5,027	5,385	6,046	6,209	12.3
서천군	2,584	3,112	3,479	3,761	4,085	4,346	4,733	4,816	12.3
청양군	1,233	1,475	1,604	1,781	1,884	2,059	2,340	2,394	13.5
홍성군	2,579	2,952	3,352	3,802	4,157	4,546	5,244	5,362	15.4
예산군	3,036	3,592	3,938	4,348	4,678	5,016	5,533	5,663	12.4
태안군	1,696	2,047	2,269	2,455	2,779	3,109	3,517	3,628	16.3
당진군	3,608	4,328	4,810	5,252	5,631	6,063	6,834	6,987	13.4

자료 : 충남장애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발전5개년 기본계획, 2007.

지역에 따른 연도별 장애인 등록추이는 계룡시가 2000년 394명에서 2007년 1,113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26.1%로 가장 높으며, 천안시 21.4%, 서산시 19.7%로 순으로 나타남. 보령시는 8.5%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 전체의 추정 등록장애인구는 2008년 111,793명에서 2012년 142,262명으로 연평균 5.5%

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등록장애인 인구비율은 2006년 12월 현재 5.09%에서 2008년에는 5.98%, 2012년에는 6.84%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 충남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추정비율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등록장애인 비율	5.51	5.85	6.19	6.51	6.84

자료 : 충남장애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발전5개년 기본계획, 2007.

충남의 시·군별 등록장애인 추정인구를 살펴보면, 계룡시가 2008년 1,206명에서 2012년 1,579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6.1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며, 보령시가 연평균 증가율 4.76%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충남 시·군별 장애인구 전망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계	111,793	119,410	127,028	134,645	142,262	5.45
천안시	19,648	21,088	22,527	23,966	25,406	5.86
공주시	8,357	8,891	9,425	9,959	10,493	5.11
보령시	7,877	8,346	8,814	9,282	9,751	4.76
아산시	10,731	11,496	12,262	13,028	13,793	5.71
서산시	7,719	8,263	8,806	9,349	9,893	5.63
논산시	9,547	10,189	10,831	11,473	12,115	5.38
계룡시	1,206	1,299	1,393	1,486	1,579	6.18
금산군	4,109	4,374	4,638	4,903	5,168	5.16
연기군	5,017	5,360	5,704	6,048	6,391	5.48
부여군	6,638	7,067	7,496	7,925	8,354	5.17
서천군	5,146	5,476	5,806	6,136	6,466	5.13
청양군	2,558	2,723	2,887	3,052	3,216	5.14
홍성군	5,765	6,169	6,572	6,976	7,379	5.60
예산군	6,069	6,475	6,882	7,288	7,694	5.35
태안군	3,904	4,179	4,455	4,731	5,006	5.65
당진군	7,501	8,015	8,529	9,043	9,557	5.48

자료 : 충남장애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발전5개년 기본계획, 2007.

2. 장애인 시설

장애인시설의 전국분포를 보면, 2006년 현재 장애인구 대비 복지시설은 강원도가 장애인 1만 명당 15.4개소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충남은 전국 평균 8.2개소와 비슷한 8.7개소를 나타내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07년 현재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97개소이다. 시군별로는 천안(15개소), 공주(15개소), 보령(12개소), 서산(11개소), 아산(7개소) 등 5개시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61%가 분포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장애인생활시설 20.6%(20개소), 심부름센터 16.5%(16개소), 수화통역센터 16.5%(16개소), 장애인복지관 11.3%(11개소), 직업재활시설이 11.3%(11개소)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 자립생활센터와 의료재활시설은 각 1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다.

〈표 6〉 충남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2007년)

(단위 : 개소, %)

구분(계)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 호시설	단기보 호시설	공동생 활가정	자립생 활센터	의료재 활시설	체육 시설	심부름 센터	수화통 역센터	직업재 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계	11 (11.3)	7 (7.2)	4 (4.1)	8 (8.2)	1 (1.0)	1 (1.0)	2 (2.0)	16 (16.5)	16 (16.5)	11 (11.3)	20 (20.6)
천안시(15)	1	3	1	·	1	·	1	2	2	2	2
공주시(15)	1	1	1	3	·	·	·	1	1	2	5
보령시(12)	1	1	·	1	·	1	1	1	1	2	3
아산시(7)	1	1	·	1	·	·	·	1	1	1	1
서산시(11)	1*	·	2	1	1	1	3	2	·	·	·
논산시(5)	·	1	·	·	·	·	·	1	1	·	2
계룡시(0)	·	·	·	·	·	·	·	·	·	·	·
금산군(5)	1	·	·	1	·	·	·	1	1	·	1
연기군(4)	·	·	·	·	·	·	·	1	1	·	2
부여군(3)	1	·	·	·	·	·	·	1	1	·	·
서천군(5)	1	·	·	·	·	·	·	1	1	·	2
청양군(3)	·	·	·	·	·	·	·	1	1	1	·
홍성군(4)	1	·	·	1	·	·	·	1	1	·	·
예산군(3)	1	·	·	·	·	·	·	1	1	·	·
태안군(2)	1	·	·	·	·	·	·	1	1	·	·
당진군(2)	·	·	·	·	·	·	·	1	1	·	·

자료 : 충남장애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발전5개년 기본계획, 2007.

주: *는 서부장애인복지관 분관 포함

2007년 3월 현재 충남의 장애인복지시설(97개소) 대비 등록장애인구(104,176명)는 1,049명에 이르고 있다. 이 시설당 장애인수를 향후 장애인구에 적용하였을 경우, 2008년에는 104개소, 2009년에는 111개소, 2012년에는 133개소 등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2008년 7개소, 2009년 14개소, 2010년 21개소, 2011년 28개소, 2012년 36개소 등 매년 약 7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충남 장애인복지시설규모 수요추정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추정장애인구	111,793	119,410	127,028	134,645	142,262
필요시설수	104	111	118	125	133
추가시설수	7	14	21	28	36

Ⅲ. 생활안정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대다수 장애인들은 장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전락할 정도로 안정적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지출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각각 16만원과 11만원에 달해 장애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무하며,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산후 조리 및 양육기간 동안 가사부담 경감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충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부부장애인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타 지자체에 비해 기초중증 장애수당지원은 낮은 편이다.

의료비 지원 부문에서도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책이 요구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관련 비용, 재활보조기구 및 보장구 구입비용의 지원이 요구된다. 장애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 병·의원이 부족하고,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등은 급성 증상에 대한 단기 재활을 중심으로 근력이나 운동범위 증가 등 기본적인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재활에 머무를 뿐,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재활치료, 언어치료 등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거환경 부문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택 개선 및 보급, 그리고 개조비용 지원 등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유형별 주택설계도의 개발이나 보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충남에서는 타 시도에서와는 차별적으로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겨울을 지내기 위해 필요한 월동난방비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 준비와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시설로, 충남에는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 의료재활, 주거생활, 이동, 의사소통 보조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가 생활시설의 서비스개선이나 시설 확충에 치중하여 재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로의 통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의 신규설치와 예산지원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농어촌, 도서, 산간지역 등 소외지역은 재활서비스에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기반시설(직업관련시설 이외)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센터가 2개소에 불과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 과제

충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가운데에서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수당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되어야 한다. 모자보건 및 성인병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 관리, 응급의료 기관 인프라 개선,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 등 장애발생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장애예방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할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정보 제공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복지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하겠다. 저소득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을 확충하되, 장애인 복지시설간의 기능을 특화하고 시설 간 활용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재가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도 구축

되어야 하겠다.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의 방향을 생활시설의 서비스 개선이나 시설확충에서 지역사회로의 통합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활시설의 공급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복귀 및 재활지원을 확대하되, 시설 신규설치와 예산지원을 놓아준, 도서, 산간지역의 소외지역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활전문인력에 대한 복지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이동 및 접근 부문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005년 기준 2,148천명²⁾로 추정되며, 이중 약 97.8%가 재가장애인이다. 장애인중 77.7%는 혼자서 외출이 가능한 장애인이며, 465천명이 직장을 출퇴근하고 있으며, 54천명이 학교통학 등을 위해 매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가장 많고, 택시, 지하철 등의 순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전국 장애인중 44.8%가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뇌병변·호흡기 장애인 등의 어려움이 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³⁾ 충남의 뇌병변 장애·호흡기장애인의 비율은 약 9.7%에 이르고 있다.⁴⁾ 저상버스의 경우 2006년 현재 전국에는 890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충남에는 저상버스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셔틀버스 등의 특별교통서비스(STS)의 경우 천안시에서 2005년 11월부터 1대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별 1대씩 16대를 2007년에 시범운영할 예정이지만, 장애인 콜차량의 경우 당진군 등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간 상호 이용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는 미비한 실정이고 운영비 지원도 미비한 실정이다. 충남도는 교통약자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 자동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콜승합차량을 도입

2)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4) 충남도청, 2006 충남 장애인 현황

할 계획으로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교통서비스와 대중교통망, 콜시스템 등 관련시설 간의 연계가 미비하며, 충남도의 특성상 각 시·군의 이동접근을 위해서는 콜차량 및 심부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에는 아직 제약적 요인이 많이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천안시에서 시각장애인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유도블럭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 적용되고 있을 뿐, 보행환경 전체적인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여객시설의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는 되어 있으나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고, 이동접근 관련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체계가 미비하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제도를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비하거나 조례화한 사례는 없어,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 과제

신체적 장애를 지니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동은 커다란 제약적 요인이다.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의 이동편의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장애인 교통정보체계를 정비하고 교통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장애인 교통수단의 이용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에 상응하여, 지방차원에서 장애인 교통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장애인 교통수단 관련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통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적합한 보행환경, 교통편의시설 및 공공건축물에서의 이동편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V. 맺는 말

충남에는 2006년 12월 현재 충남인구의 5%에 달하는 약 10만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똑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단지 신체적으로 불편한 이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도와준다는 시혜(施惠)적 차원에서의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복지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의료적, 재정적 차원에서의 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 없는 일반인의 의식도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충청남도, 충남장애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발전5개년 기본계획, 2007

충남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고수현 | 금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6. 5. 31 지방선거를 거쳐 같은 해 7월 1일부터 민선4기(2007~2010)시대에 접어 든 충남 도정은 이제 한 해 반 정도를 넘기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지난 1995년에 관선 도정시기를 접고 민선기로 전환된 이후 민선1.2기(1995~2002)에서는 주민번영에 초점을 두고, 개성 있는 충남건설을 지향하였다. 아울러 민선3기(2003~2006)에서는 ‘인본복지’와 ‘지식경영’을 도정의 기조로 삼고 비교적 안정적인 민선자치정부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선4기인 현재의 충남도정의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역동적인 변화과정에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우선 연기·공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홍성·예산의 도청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현재의 200만명 정도의 인구가 250만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하여 도민의 복지욕구도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대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 도정방침이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 등을 내걸고 있는 것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정방침이 산업경제부문의 발전과 복지부문의 양대 분야를 내걸고 있다고 해서 바람직한 도정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산업경제와 지역개발부문에 치중된 전략을 견지할 성향이 많고 사회복지와 같이 계량적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부문에는 역량강화의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는 저출산·고령사회가 최대의 정책

이슈가 되고 있고, 충남도의 경우에도 광역시와 달리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노인층의 복지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민선4기가 출범된 지 초반부를 어느 정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충청남도의 노인복지 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응과제를 모색하는 데 직접적인 목적을 둔다.¹⁾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충남도정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향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방정부 단위의 복지정책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별로 세분된 개별적인 복지계획이 아니라 도정의 복지행정 분야 중에서 노인복지분야를 대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²⁾

그렇다면 노인복지부문의 충남도정이 지행해야 할 주요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남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노인복지부문의 현황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단계의 연구자료 분석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첫 단계에서는 전국적인 사회복지 환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과 함께 노인복지사업지침을 기본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상당수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가책임으로 국비를 대부분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방정부인 충남도와 시·군 단위에서 추진 중인 복지정책과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노인복지정책이나 행정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수혜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급여재정은 어느 정도인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어떠한지를

1) 필자는 2006. 7. 1에 발간된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사회복지분야)’에서 지난 민선3기의 충남도정을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과 도청이전이라는 정치·경제적인 차원의 ‘지역개발’ 이슈에 초점을 둔 도정으로 간주하고, 민선4기의 충남도정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개발(communitry development)’과 복지행정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열린 충남, 제35호 참조)

2) 지방정부의 도정이나 시정과제라고 한다면 자치행정, 복지행정, 지역개발행정의 3대 부문으로 구분하거나 문화부문을 더하여 4대 부문의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여건이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정과제가 차이가 나거나 중점추진과제의 우선 순위가 바뀔 수는 있다.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노인복지현황을 충청남도 복지환경국 산하의 복지정책과 업무소관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로복지담당’과 ‘저출산고령화담당’에서 추진 중인 노인복지정책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파악된 현황을 바탕으로 진단과 함께 부문별 과제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노인복지정책이나 행정 중에서 공공부조부문과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보험분야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큰 사회보험부문은 다루지 않았다. 단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노인요양서비스 부문은 같이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II. 충남의 노인복지 현황과 분석

1. 노인인구 및 고령화 분석

1) 노인인구현황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49백만명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5백만명 정도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0년에 전체 인구의 3.1%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 337만명(7.2%)으로 UN에서 규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9.1%에서 2015년 12.9%, 2019년에는 14%인 고령사회(aged society)를 지나고 2030년에는 24.1%까지 높아지게 될 것으로 통계청은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에서 전망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경우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인구 1,974,433명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71,346명(남 109,310명, 여 162,036명)으로 13.7%에 달하고 있다. 이는 당초 통계청이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2005년 말 기준으로 14.4%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치이지만 전라남도 다음으로 고령화 진척도가 빠르다는

〈표 1〉 시·군별 노인 인구 현황(2006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구분			전체 인구 (명)	노인 인구 비율(%)	비고 (고령정도)
	계	남	여			
계	271,346	109,310	163,036	1,974,433	13.7	고령화사회
천안시	36,842	14,388	22,454	523,323	7.0	고령화사회
공주시	20,399	8,304	12,095	128,330	15.9	고령사회
보령시	17,045	6,886	10,159	107,591	15.8	고령사회
아산시	22,994	9,282	13,712	211,560	10.9	고령화사회
서산시	19,773	7,882	11,891	150,889	13.1	고령화사회
논산시	22,291	8,917	13,374	131,466	17.0	고령사회
계룡시	2,390	804	1,586	36,846	6.5	·
금산군	11,779	4,694	7,085	57,552	20.5	초고령사회
연기군	12,494	5,028	7,466	82,747	15.1	고령사회
부여군	17,483	7,139	10,344	79,595	22.0	초고령사회
서천군	14,388	5,779	8,609	62,629	23.6	초고령사회
청양군	8,686	3,652	5,034	34,086	25.5	초고령사회
홍성군	16,339	6,679	9,660	89,555	18.2	고령사회
예산군	17,346	7,222	10,124	89,585	19.4	고령사회
태안군	11,457	4,651	6,806	63,754	18.0	고령사회
당진군	19,640	8,003	11,637	124,925		고령사회

자료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재정리.

점에서 본다면 세부적인 고령화 분석과 함께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

2) 고령화 현상분석

인구학적 측면에서 고령화의 속도를 분석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노인복지대상자의 범주를 정하여 그에 맞는 노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단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정책의 형성과 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만큼 선진 각국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구인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대응한 이른바 ‘골드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그보다 100년 이상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프랑스(1864년)나 스웨덴(1887년), 이탈리아(1927년), 영국(1929년), 독일(1932년), 미국(1942년), 캐나다(1945년) 등에서도 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들 구미 선진국은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가나 사회정책추진에서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령화의 충격(shock)이 그리 심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7%의 고령화 사회에서 14%의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15년이 소요되었으며 캐나다는 65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24년이 소요되었고 우리나라는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20%의 초고령사회로 다가서는 기간도 그 후 7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어서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고령화 정도를 분석해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울산(5.2%), 대전(6.7%), 인천(6.9%), 서울(7.1%), 경기(7.1%), 광주(7.0%), 대구(7.8%), 부산(8.4%) 등의 대도시와 수도권이 전국 평균 9.1%보다 낮고, 전남(17.5%)이 가장 고령화 정도가 높고 그 다음이 충남(14.4%)의 순서이다. 여기에서 충남의 경우 2006년 말 기준의 13.7%에 비하여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중·소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유치되고 있고, 국외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젊은 층이 늘어난 것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충남의 고령화 정도를 시·군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양군이 25.5%로 가장 높으며, 서천(23.6%), 부여(22%), 금산(20.5%)과 함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그 다음은 예산, 홍성, 태안, 논산, 공주, 보령, 당진이 이미 14% 비율을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있다. 그리고 유일하게 특례시인 계룡시의 경우에만 6.5%로 고령화 사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2005년 통계자료에서 대학이 밀집된 천안시가 6.7%에서 2006년 말에 7.0%로 상승한 것을 보면 국방부 등의 군 인적 자원이 많은 계룡시라 할지라도 1~2년 내에 고령화 사회에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2. 노인복지시설·기관 현황과 분석

1)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현황

충청남도의 시·군별 노인복지시설을 크게 생활시설(수용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여 현황을 보면 16개 시·군 전체가 66개소이며, 이 중에서 생활시설이 30개소, 이용시설이 36개소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16개소(생활 3, 이용 13), 부여 7개소, 아산 6개소, 논산과 공주가 각 5개소로 시설이 많은 편이다.

〈표 2〉 시·군 노인복지시설 현황(2006년 12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시·군계	66	30	36
천안시	16	3	13
공주시	5	2	3
보령시	3	3	·
아산시	6	3	3
서산시	2	1	1
논산시	5	3	2
계룡시	·	08년도 신축 1개소	·
금산군	3	1	2
연기군	4	3	1
부여군	7	3	4
서천군	3	1	2
청양군	2	08년도 신축 1개소	2
홍성군	3	2	1
예산군	3	(2곳 신축 중)	1
태안군	·	08년도 신축 1개소	·
당진군	4	3	1

자료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재정리.

이외에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시·군의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이용시설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노인정 형태로 마을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노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지정한 후 지방 의원들이 관심 사업으로 신축을 지원하거나 신규지정 건수를 늘리게 된 것에 원인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말 기준으로 총 5,22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2001년에 비하면 1,000여 개소가 늘어난 것이다.

〈표 3〉 경로당 현황(2006년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개소	5,226	5,097	4,909	4,696	4,495	4,287	4,082	3,887

자료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 노인복지시설 분포

충남도내에 분포된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구분해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37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이 45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경로당 5,254개소를 제외한 53개소,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35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표 4〉 노인복지시설 분포(2006년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시설	전국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로시설	145	5	-	-	-	1	-	-	-	1	2	-	-	-	1	-	-	-
	실비양로시설	132	15	5	-	-	-	-	-	-	2	5	-	-	-	-	2	-	1
	유료양로시설	74	17	2	1	-	-	-	-	-	3	-	-	2	-	4	2	1	2
	실비노인복지주택	-	-	-	-	-	-	-	-	-	-	-	-	-	-	-	-	-	-
	유료노인복지주택	15	-	-	-	-	-	-	-	-	-	-	-	-	-	-	-	-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요양시설	174	10	-	-	1	1	1	2	-	-	1	1	1	-	1	-	-	1
	실비노인요양시설	260	9	1	1	1	-	2	-	-	1	1	1	-	-	-	-	-	1
	유료노인요양시설	103	11	1	1	-	4	1	1	-	-	1	-	1	-	-	1	-	-
	노인전문요양시설	184	7	2	-	1	2	-	-	-	-	1	1	-	-	-	-	-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24	-	-	-	-	-	-	-	-	-	-	-	-	-	-	-	-	-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70	1	-	-	-	1	-	-	-	-	-	-	-	-	-	-	-	-
	노인전문병원	83	7	1	1	-	-	-	1	-	-	1	3	-	-	-	-	-	-
	노인복지회관	183	10	2	-	1	1	1	-	-	1	1	-	-	-	1	1	1	-
	경로당 ¹⁾	55,504	5,254	593	402	332	435	348	446	31	287	310	432	244	274	329	325	186	280
	노인교실	1,099	43	3	-	-	7	7	6	-	1	-	-	6	1	-	1	1	10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노인휴양소	3	-	-	-	-	-	-	-	-	-	-	-	-	-	-	-	-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523	22	5	1	-	3	1	2	-	2	1	2	1	2	1	1	-	1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1	1	-	-	-	-	-	-	-	-	-	-	-	-	-	-	-
	주간보호시설	409	8	5	1	-	-	-	-	-	-	-	1	1	-	-	-	-	-
	단기보호시설	113	4	2	1	-	-	-	-	-	-	-	1	-	-	-	-	-	-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19	1	1	-	-	-	-	-	-	-	-	-	-	-	-	-	-	-

자료 : 200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내부자료.

주 : 경로당은 미신고시설이 포함된 수치임.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유형구분은 2008년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노인 복지법 개정으로 보다 단순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의 충청남도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인구 증가율이나 대전과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외부적인 유입 요인을 고려해보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3) 장사복지시설

(1) 묘지현황

충청남도의 장사복지시설 중 묘지시설은 총 16개소(공설 8, 사설 8)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에 공동묘지가 722개소에 18.5천 km^2 가 설치운영 중이다. 그리고 충남도 전역에 산재된 일반 묘지 중 파악된 것이 8.9천 km^2 가 개인이나 종중 및 종교 단체의 묘지이다.

〈표 5〉 묘지시설 현황(2007년 기준)

(단위 : 개소, 천 km^2)

구분	계(면적)	일반묘지	공설공원묘지		사설법인묘지		공동묘지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충청남도	31.2	8.9	8	1.0	8	3.0	722	18.5

자료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 화장장 현황

충남도내의 화장장은 홍성화장장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화장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충남은 권역이 넓고 수도권과도 가까운 권역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하면 도의 서남부 지역에 화장장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표 6〉 화장시설 현황(2007년 기준)

(단위 : 천 원)

소재지	대표자	화장기수	요금내역(천원)	종사자수	주요시설
홍성 금마면 봉서리 120-13	홍성군수	8기	· 만15세이상 : 120 · 만15세미만 : 90 · 개장유골 : 50 · 사산태아 : 40	9명	납골당, 장례식장, 주차장 등

자료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3) 납골당(봉안당) 현황

화장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존의 매장문화에서의 주된 시설이었던 묘지시설보다는 시신을 화장하고 납골을 봉안하는 납골묘나 납골탑이 선호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지방정부나 재단법인 혹은 종교단체 등에서 대규모의 납골당(봉안당)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과도한 석물사용과 고액의 이용료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2007년 기준으로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 중인 납골당 수는 전체 23개소(공설 15, 사설 8)이며 비교적 그 규모가 큰 시설이 많다.

〈표 7〉 시·군 납골당 현황(2007년 기준)

(단위 : 개소)

소재지	납골당		
	계	공설	사설
시·군계	23	15	8
천안시	1	1	—
공주시	—	—	—
보령시	1	1	—
아산시	1	—	1
서산시	2	1	1
논산시	2	1	1
계룡시	1	1	—
금산군	4	1	3
연기군	2	1	1
부여군	1	—	1
서천군	1	1	—
청양군	1	1	—
홍성군	1	1	—
예산군	2	2	—
태안군	1	1	—
당진군	2	2	—

자료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4) 장사복지시설의 분석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사복지시설은 묘지, 화장장, 납골(봉안)당, 산골 형태의 자연장(수목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유지해 왔고 이는 같은 동양권인 중국이나 일본과도 차이가 있는 관혼상제의 방식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화장문화운동에 기점을 두고 최근 15년간에 걸쳐 급격한 화장율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문화의 확산과 함께 새롭게 대두된 사회문제는 충분한 화장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고, 그로 인한 지역이기주의적이고 왜곡된 넘비현상으로 화장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나 일부 대도시지역 지방정부에서 화장장과 납골(봉안)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치하려는 정책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극심한 마찰을 빚는 사례는 허다한 실정에 있다.³⁾

이렇게 볼 때 충남도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령화 정도나 수도권 인근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장사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화장장은 현재 홍성 화장장 1개소에 불과하므로 증설이 있어야 한다.

3. 노인복지대상자 및 자원 분석

1) 노인복지사업 세부 내용

노인복지서비스는 크게 보면 노인소득보장과 노인의료보장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세분하여 본다면 저소득노인의 최저생활보장사업, 만성질환노인의 요양보장, 건강한 노인의 인력 활용, 노인권리증진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저소득노인을 위한 최저생활보장 사업에는 공공부조대상자로 책정된 노인들에게 급여되는 기초생활보장부문은 공공부조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 성격이 중첩된 영역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파악된 고령인구와 노인복지관련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급여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개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를 분석하고자 한다.

3) 경기도 하남시의 광역장묘단지 유치계획 등으로 빚어진 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 사례나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에 설치될 서울시 추모공원을 둘러싼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 주민 간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한다.

그리고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현 충청남도의 노인복지정책부서인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경로복지담당' 과 '저출산고령화담당' 의 양대 계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명칭에 따라 세분하고자 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분야의 주요사업은 노인복지관련 시설운영비와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노인복지사업별 소요 자원(2007~2010)

(단위 : 건/명, 백만 원)

세부사업 내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7	2008	2009	2010
계	지원대상	346,052	355,179	265,298	368,399
	소요예산	111,382	116,907	107,749	94,938
	국비	34,348	34,045	25,156	17,939
	지방비	79,180	82,562	82,294	76,999
1.노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	6,000	6,000	7,000	-
	소요예산	9,743	12,636	14,733	-
	국비	4,871	6,168	7,217	-
	지방비	4,871	6,168	7,217	-
2.경로연금	지원대상	51,000	50,000	49,000	49,000
	소요예산	24,155	22,000	21,000	21,000
	국비	16,909	15,400	14,700	14,700
	지방비	7,246	6,600	6,300	6,300
3.경로당 운영비	지원대상	5,200	5,300	5,400	5,500
	소요예산	6,344	6,466	6,588	6,710
	국비	-	-	-	-
	지방비	6,344	6,466	6,588	6,710
4.노인교통수당	지원대상	280,000	290,000	300,000	310,000
	소요예산	42,000	43,500	45,000	46,500
	국비	-	-	-	-
	지방비	42,000	43,500	45,000	46,500
5.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대상	22	40	50	50
	소요예산	12,955	12,955	6,478	6,478
	국비	6,477	6,477	3,239	3,239
	지방비	6,478	6,478	3,239	3,239
6.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대상	28	33	40	40
	소요예산	10,035	12,000	6,000	6,000
	국비	6,091	6,000	-	-
	지방비	6,091	6,000	6,000	6,000

세부사업 내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7	2008	2009	2010
7 무료경로 식당운영	지원대상	2,040	2,040	2,040	2,040
	소요예산	1,836	1,836	1,836	1,836
	국비	-	1,836	-	-
	지방비	1,836	-	1,836	1,836
8.저소득장애가노인식사 배달사업	지원대상	1,752	1,752	1,752	1,752
	소요예산	1,314	1,314	1,314	1,314
	국비	-	-	-	-
	지방비	1,314	1,314	1,314	1,314
9.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10	14	-	17
	소요예산	3,000	4,200	16	5,100
	국비	-	-	4,800	-
	지방비	3,000	4,200	4,800	5,100

자료 :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 pp. 387~388 참조.

주 :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은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예정임.

2) 노인복지사업 예산분석

〈표 8〉에 나타난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을 분석해보면 우선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로 사업이 종료되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경로연금은 51,000명에 총 24,155백만원(국비 16,909백만원, 지방비 7,246백만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280,000명에게 총 42,000백만원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서 시·도 및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노인복지시설과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로당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운영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의 비중이 크다.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는 상당수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으로 이전될 계획이므로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⁴⁾

4)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이나 재정운영 지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소요진단은 추정치에 해당한다.

셋째로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저소득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등의 재가노인들을 위해 투자되는 소요예산부문과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영역이 있다.

이외에도 장사복지시설운영이나 도지사 특별시책 혹은 시·군의 자체사업이 있을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소요재정이 미미한 수준에 있다.

Ⅲ. 충남의 노인복지정책 과제

1. 저소득노인의 최저생활보장

1) 기초생활수급노인의 생활보장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학적 연령기준이 아니라 소득기준에 따라 수급권을 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 노인층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인 노인복지영역이 아니라 공공부조정책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의 일부는 노인복지서비스분야와 중첩되는 부문도 있다.

소득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산조사(means-test)과정에서는 시·도의 정서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재량권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충남도는 노인인구가 타 시·시도에 비하여 많고 저소득 농어업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본다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급권자 선정이 필요하다.

2) 저소득노인 기초노령연금보장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존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연금에 속하지만 평소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각출 연금제도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연금재정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연금법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저소득 노인층에게는 새롭게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실제로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2007년 기준으로는 기존의 경로연금제도와 노인교통수당지급제도가 이 제도에 통합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배경으로 새로운 정책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그동안 노인교통수당 지급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지 않았다. 충남도의 경우에도 노인인구가 많아 연간 27만 명 정도에게 신청자에 한하여 개인당 연 15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계좌입금 처리해 왔으며 연간 42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었다.

이에 비하여 경로연금은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조사에서 충족되는 경우에 무배우자 월 3만5천원, 부부동시수급자는 3만원 정도를 지급하고⁵⁾,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의 경우에는 80세 미만은 월 4만5천원,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연간 5만 명에게 204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로 기초노령연금보장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2. 만성질환노인의 요양보장

1) 농어촌 노인의료시설 지원 및 특수시책 실시

노인은 생물학적 노화과정에 있으므로 각종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충남 지역은 천안, 아산 등의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며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규모도 많은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지역에는 인구밀도가 높지 않으므로 중·대규모의 의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농어촌에 위치한 소규모의 의료시설은 의료장비가 노후화되고 경영상의 어려움도 여전하다.

그러므로 대전시나 서울권역의 대도시에 위치한 대규모의 병원과 연계한 화상 또는 영상진료시스템을 지역의 병의원이나 보건소·보건지소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시·도 차원의 특수시책이 요구된다. 특수시책은 중앙정부의 일정 지원을 받거나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저예산을 투입하여 고효율적인 기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울러 차상위 노인세대에 대한 의료급여대책도 홍보를 강화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의료보장이 확충되어야 한다.

5) 2007년 기준으로 1933. 7. 1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화장시설 확충 및 보강

평균수명의 증가에 비하여 건강수명의 증가 속도는 미진하여 노인들 중에는 만성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충남도의 노인복지시설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앞두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지만 이에 대한 도 단위의 자구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의 경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2007년 기준으로 45개소가 있지만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비하여 시설 규모나 그 기능이 열악한 실정이다. 새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를 예측하고 타 시·도의 선진시설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미 설치된 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도 기능보강사업이나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단 1개소에 불과한 화장장 역시 적정 지역을 물색하여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확충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

(1) 보건소의 방문간호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2007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국 체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이 간과된 측면이 많다. 현행 시·군의 사회복지행정체계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2개과 형태로 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노인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렇게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

노인의 특성이 신체적으로 노쇠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정부에서는 보건소의 보건인력이나 간호인력을 마을 단위에 투입하는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 차례 재편을 거듭해 온 사회복지 전달체계이지만 또 다시 재가노인의 욕구에 맞는 시스템으로 재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무소 형태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김영삼 정부시기에 시범사업을 했으나 확산되지 못했던 보건복지사무소 유형으로 재편하여 공공부조업무는 일반 행정직 등이 담당하도록 배치하고 복지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직이 수행하도록 하며,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직과 간호직이 맡게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2) 이동노인복지관사업 도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현재 일부 노인복지관을 통해 운영되는 농어촌 지역 이동복지관은 적은 투자비용으로 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하고도 이용자들이 접근성에 애로가 있어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어촌형 이동노인복지관은 찾아가는 복지(Out-Reach Service)시스템의 장점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정보에 불리하고 복지욕구는 있으나 적극적인 획득 노력이 부족한 전형적인 소극적 클라이언트(Client)에 해당하므로 이동노인복지관을 중형버스에 장착하여 지역에 위치한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유용할 수 있다.

3. 건강한 노인의 인력활용

1) 노인취업부문의 확대

2007년 기준으로 충남도가 추진 중인 노인취업대책으로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노인취업박람회, 시니어클럽 1개소(부여군) 정도가 있다. 충청남도가 전국평균보다 10년 빠른 1990년에 고령인구가 7.9%로 고령화 사회를 지났고 이제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시점이라고 본다면 타 시·도에 비하여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노인인구를 막연히 부양인구로만 편협하게 볼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층(65~70세)을 대상으로 한 취업대책과 일자리유지대책이 있어야 한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담해야 하는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증가하게 되는데 2005년 기준으로 노년부양비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도시와 경기도는 전국 수준인 12.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충남(21.5%), 전남(27.3%), 경북(21.0%) 등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서해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젊은 계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보장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

로 한 고용촉진사업과 시장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으로 단기간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는 만큼 충청남도 차원의 '노인인력활용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을 사회적 부양대상자만이 아닌 자립대상으로 하는 정책전환의 기점이 될 수 있다.

〈표 9〉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2007년 기준)

(단위 : 건, 천 원)

구분	유 형 별 사 업 계 획											
	승인사업 소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6,773	9,525,060	3,928	5,620,753	434	648,485	1,417	2,433,877	741	799,645	223	22,300
천안시	1,360	1,915,636	907	1,360,500	140	217,000	93	242,636	70	80,500	150	15,000
공주시	442	626,764	347	463,914	-	-	95	162,850	-	-	-	-
보령시	320	427,915	154	203,661	39	60,450	78	120,884	36	41,620	13	1,300
아산시	442	610,186	144	216,000	45	69,750	93	182,436	120	138,000	40	4,000
서산시	340	481,083	175	244,983	30	39,900	105	161,700	30	34,500	-	-
논산시	328	464,658	206	300,763	20	19,055	82	121,840	20	23,000	-	-
계룡시	79	106,152	34	42,070	-	-	21	36,482	24	27,600	-	-
금산군	328	464,320	188	243,158	15	23,250	109	180,800	16	18,400	-	-
연기군	411	528,193	240	276,943	11	12,100	150	225,000	10	14,150	-	-
부여군	435	594,701	173	256,040	19	29,415	130	192,949	113	118,935	-	-
서천군	280	427,928	91	118,416	5	7,750	164	280,200	20	23,000	-	-
청양군	224	314,157	115	204,617	5	7,750	33	60,350	41	41,440	-	-
홍성군	282	397,135	135	194,258	18	30,065	65	139,750	64	34,500	-	-
예산군	398	551,972	258	344,472	20	31,000	50	96,000	70	80,500	-	-
태안군	341	490,320	170	250,958	42	62,000	87	130,000	42	48,800	-	-
당진군	763	1,115,700	591	900,000	25	39,000	62	100,000	65	74,700	-	-

자료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 노인자원봉사 및 평생교육의 활성화

(1) 노인자원봉사부문 활성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대책으로는 취업부문 이외에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이 도입될 수 있다. 즉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욕구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고용

촉진과 고용유지를 위한 취업전략이 요구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험을 살려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노인계층에게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물론 노인취미활동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체육시설 등의 공급도 유용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타정신(altruism)이 있으므로 여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려는 욕구에 대응한 사회봉사나 자원봉사부문의 인력활용대책이 요구되어진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나 아동·청소년 교육분야의 자원봉사인력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정책이 요구된다. 머지않은 시기에 노인 인구가 20%가 되는 초고령사회를 겪게 될 충남에서는 타 시·도에 앞선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지원도 요구된다.

(2) 노인평생교육의 확산

노인의 무료함과 사회참여욕구를 평생교육체제를 통하여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는 대책은 사회통합과 세대간 연대감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의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은 일반 성인교육⁶⁾과는 다른 노인교육, 즉 교육노년학(educational gerontology)의 중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의미는 195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된 노화에 관한 연구와 노년학의 하위분야로 정립된 교육노년학에서 발로된 것이며 라벨(J. Label)이 제로고지(zerogogy)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교육학은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 그리고 제로고지의 맥락에서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에 있어서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세대통합교육이나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4.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

1) 노인 안전 및 친화 대책

6) 전통적으로 교육학을 의미하는 페다고지(pedagogy)는 아동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1883년 독일의 교사인 케프(Kapp)가 안드라고지(andragogy)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을 기초로 1970년에 노울즈(M. Knowles)가 그의 저서인 『성인교육의 현대적 실천 : 안드라고지 대 페다고지(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 Andragogy versus Pedagogy)』에서 성인교육으로서의 안드라고지를 개념화하였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징은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고령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고령이면서 동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른바 노인장애인이라는 복합적 개념의 대상자가 된다.

이러한 노인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층에게는 신체적 특성에 맞는 거주공간과 이동대책이 요구된다. 법제상으로는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동건물이나 시설 혹은 다중 집한 장소에는 안전한 시설물을 갖추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는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주거모델이나 생산모델을 개발하여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여군 규암면에 고령친화모델로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요양·일자리·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지만 대전광역시와 인접한 논산시나 공주시, 금산군 일원에도 통합적 노인복지서비스타운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2) 노인학대예방 및 권리증진

생애발달주기에 있어서 아동과 노인 시기는 청장년시기에 비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가족이나 타인들로부터 학대를 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

과거 농경사회나 전통사회에서는 노인들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로의 역할을 해 왔으며 종교나 문화적으로도 존경의 대상으로 위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접한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노인들의 지위나 역할을 유지되지 못하고 젊은 세대들로부터 밀려나거나 심지어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리매김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는 충청남도에서 2004년 6월부터 아산시에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추가 증설이 요구된다.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천안시와 보령시에 배치되어 있듯이 노인보호전문기관도 논산시나 계룡시 인근에 추가로 1개소 정도를 우선 증설하고 추후에는 홍성·예산 지역에도 증설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교육이나 처리업무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강화프로그램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프로그램도 동시에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노인복지부문의 충남도정방향과 과제를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 노인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기초생활보장비를 상향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층이 급여대상자 선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사회의 특징인 만성질환노인의 요양보장을 위하여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재가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문의료시설의 확충도 요구된다.

셋째, 건강한 노인의 성공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취업부문의 호가대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공급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년기에 적합한 평생교육시스템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의 사회적 역할 축소와 함께 대두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권리증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함께 노인과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교육이 대안이 된다.

2. 제언

이제 이러한 노인복지정책과제를 실천하고 구현할 충남도정의 수장이며 리더인 도지사와 개별정책을 집행하는 관리자와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시사점을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은 충남도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이에 걸맞은 복지행정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구상으로는 노인복지과 혹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신설이 요구되며, 후자의 경우는 고령자 중에서 장애 인구가 많다는 차원에서 보면 선호될 수 있는 명칭이다. 아울러 인력 상으로는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고 사회복지철학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고 장기간 보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이나 정책에서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측면의 저소득층 위주

의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의 기획도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권과 권리증진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서남부권에 증설할 필요도 있다. 그 외에도 대도시 인근인 금산이나 논산, 공주 등 지역에 노인종합복지타운(시니어 타운)의 조성도 요구된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16개 시·군과의 밀접한 복지전달체계 유지를 위한 연계정책이 요구되며 대외적으로는 도의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민간복지단체를 활용한 복지인프라 확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도 강구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충남지역사회복지계획(2006-2010)』에서 지향하는 이념인 '충남, 생활복지의 중심'을 달성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수현, 민선4기 충남도정의 사회복지과제, 『열린충남』, 통권 제35호, 충남발전연구원, 2006
- 고수현, 『새로운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6
- 고수현, 『사회복지정책의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2006
- 고수현, 『지역사회복지-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2007
- 고수현 외, 『충청남도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 충청남도, 2007
- 대한민국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6
- 충청남도 기획관리실, 『도정백서』, 충청남도, 2006
- 송두범 외, 『충청남도 인적 자원개발 실행계획』 외 다수, 2005

저출산시대의 충남 아동복지 현황과 과제

이재완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정부는 지난 2006년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투자국가를 설정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와 출산율의 저하는 우리사회의 큰 위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동, 노인 등에 대한 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사회적 분담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즉,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아동복지와 여성친화적인 정책은 에스핑 안데르센에 의해 대표적인 사회투자 프로그램으로 강조되었다(Esping-Andersen, 2002). 사회투자전략의 상징으로 아동복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동기에 불리한 환경에서 자라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한 경우, 성인기의 실업과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기에 불리한 성장조건에 대해 사회적 개입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성공을 촉진하고자 한다. 아동을 단지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보다는 미래의 시민노동자로 규정하고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보육, 의료 등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장한다(김연명, 2007). 최근 정부는 사회투자와 관련하여 아동투자사업으로 모든 아동의 평등한 출발과 잠재역량 발현을 위한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희망스타트 프로젝트(한국형 Head Start)와 아동의 미래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Child Development Account)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정책은 아동기에 집중적인 인적투자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해방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의 중심은 '시설보호중심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한국전쟁이후 요보호아동을 위한 긴급구호의 형태로 가정보호보다는 시설보호가 이루어졌다. 사실 모든 아동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는 시설보호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인 부모와 자녀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서비스(supportive services, 전체아동을 위한 아동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행)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보충적 프로그램(supplemental services)으로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아동지도, 피학대아동보호사업, 가정조성사업, 소득유지사업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특히 보충적 서비스의 하나인 영유아보육사업은 지난 10년 전과 비교할 때 양적·질적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보육사업의 정책목표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두고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2006-2010)인 새싹플랜, 제1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에 담겨있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크게 분류하면, 하나는 국공립시설의 확충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보육비용분담수준의 확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육예산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종해, 2007: 197).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아직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인 보육의 욕구에 대하여, 그 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만 재정부담하는 선별주의정책을 취하여 왔다. 결국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육의 책임을 보호자에게 돌리는 정책으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공급확충에도 불구하고 보육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 아동복지서비스의 경우,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의 기초 및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시설보호 및 요보호아동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른 선별주의적인 보육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2007년도의 아동복지사업은 아동안전 및 권리사업, 가정보호사업, 지역사회아동보호, 아동시설보호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주요한 변화는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 그리고 시설운영관리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총 10개의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무상보육료 지원 등이다.

저출산의 문제가 인구고령화와 맞물리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며, 결국 보편주의적인 아동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사회적 투자로서 이해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이재완·최영선, 2006).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아동복지정책의 경우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아동 스스로 자기주장을 할 수 없음으로 정치적, 사회적 관심에서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양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충청남도의 아동복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발전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충청남도 아동복지 현황

1. 아동인구 및 복지예산

2005년 12월 현재, 충청남도 인구는 190만 3천명으로 지난 2000년 187만 9천명에서 1.3%로 증가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아동인구(0-14세)는 2000년 20.1%에서 2005년 18.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령인구는 2000년 11.9%에서 14.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유년인구의 감소는 저출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2000년에 1.52명에서 2005년에 1.26명으로 감소하였다(이재완, 2006). 따라서 충청남도는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와 아동인구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전국 및 충남 연령별 인구 구성비

(단위: 천명, %)

구분	총인구		아동인구비 (0~14세)		생산가능인구비 (15세~64세)		노령인구비 (65세 이상)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1990	42,869	1,992	25.6	24.3	69.3	67.8	5.1	7.9
2000	47,008	1,879	21.1	20.1	71.7	68.0	7.2	11.9
2005	48,294	1,903	19.1	18.8	71.8	66.9	9.1	14.4
2010	49,220	1,984	16.3	16.3	72.8	68.3	10.9	15.5

자료 : 통계청, KOSIS, 2005.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과 공동체 가치관 퇴색, 가부장제적 및 남성 중심의 가치관 상존, 경제·사회적 불확실성 증대, 여성의 교육수준·자아욕구·사회참여 증대, 자녀효용가치 감소와 자녀의 질적 양육 증대, 임신·출산 건강수준 악화를 지적할 수 있다.

〈표 2〉 충청남도 사회복지예산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합계			373,206,287
일반회계	사회복지	소계	355,106,287 (100)
		노인	65,250,996 (18.4)
		아동·청소년	81,550,465 (23.0)
		장애인	21,982,023 (6.2)
		여성	3,118,889 (0.9)
		복지행정	603,024 (0.2)
		기초생활	179,626,570 (50.6)
		일반운영비	255,450 (0.1)
		기타·지역복지	2,718,870 (0.1)
특별회계	계		18,100,000
	의료보호		18,100,000

자료 : 충청남도, 2006 예산 자료집(이재완, 2006 재인용).

한편, 충남도의 사회복지예산은 6천6백억원(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으로 도 전체예산의 23.8%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 약3천7백억원중 아동청소년복지예산은 약 8백1십억원으로 전체 23%에 이르고 있다. 충남도의 사회복지예산은 빈곤과 아동청소년, 노인복지 분야의 비중이 크고 타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2. 아동복지시설 현황

충청남도의 아동복지시설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입양기관 1개소, 아동양육시설 14개소, 아동자립지원시설 1개소, 그리고 아동상담소 1개소가 있다. 이러한 시설수는 타광역지자체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그리고 아동직업훈련시설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아동상담소의 확충이 필요하다. 즉, 요보호아동의 조기발견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사정하고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아동상담소는 기아, 미아, 가출아동 등의 발견 및 귀가조치하거나, 일시 보호하였다가 아동양육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전단계로 아동상담을 활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표 3〉 시·도별 아동복지 시설 현황 비교

(단위: 개소/ 2006.12.31 기준)

구분	아동입양 기관	아동양육 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 상담소
서울	6	33	3	1	7	2	2
부산	2	20	1	1	1	-	3
대구	1	18	2	1	1	1	3
인천	1	8	-	-	-	-	3
광주	2	9	1	-	1	-	4
대전	1	11	1	1	-	-	4
울산	1	1	-	-	-	-	1
경기	2	26	-	-	2	-	7
강원	1	9	-	-	1	-	5
충북	2	13	1	1	-	-	-
충남	1	14	1	-	-	-	1
전북	1	16	1	1	-	-	3
전남	1	21	1	1	-	-	-
경북	1	15	-	-	1	-	-
경남	1	24	1	1	1	-	3
제주	1	5	-	-	-	-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7 재구성.

한편 충청남도 시·군별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아동복지시설은 16개 시·군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생활시설이 전무한 지역이 7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용시설의 경우, 5개 미만의 지역이 9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아동복지시설의 차이는 결국 지역별 아동복지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있는 아동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4〉 충남 시·군별 아동 복지시설 현황(2006년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시							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아동생활시설	15	3	-	2	1	-	3	-	2	1	1	-	-	1	1	-	-
아동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수능공부방 등)	100	22	5	2	17	14	9	1	9	3	2	5	1	3	4	3	-

자료: 충남도, 충남도정주요통계.

다음으로 충청남도의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2007년 6월 현재, 총 1,164개소로 2004년도와 비교하면, 8.4% 증가하였다. 설립주체별 분포를 보면 민간보육시설 60.9%, 가정보육시설 34.3%, 국·공립보육시설 3.3%,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1.5%이다.

〈표 5〉 충남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 법인외	개인	직장보육 시설	가정보육 시설
시설수 (%)	1,164 (100)	38 (3.3)	134 (11.5)	75 (6.4)	498 (43)	17 (1.5)	401 (34.3)
종사자 수 (보육교사)	4,159	193	828	407	1,973	67	690

자료: 충청남도, 충남보육통계 (2007.6.30).

이중에서 2004년도와 비교할 때(〈표 6〉),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이 각각 22.6%, 21.4%로 증가하였지만 전체보육시설대비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은 전국평균(2006년 6월 기준) 5.2%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은 전국평균 0.93보다 높게 나타났다. 충남도의 특수보육시설은 보면 영아전담 49개소, 장애아전담 7개소, 장애아통합 71개소, 방과후전담 4개소, 방과후통합 62개소, 시간연장형 92개소, 휴일보육시설 4개소이다.

한편, 충남지역의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을 보면, 전체 209개 읍·면·동 가운데 동지역에는 보육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반면, 42개 읍·면에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충남도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시설미설치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어 시설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표 6〉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증가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04	2007	증가율
전체		1,074	1,164	8.4
국·공립보육		31	38	22.6
민간보육	법인	116	134	15.5
	법인외	96	75	-21.9
	개인	464	498	7.3
직장보육		14	17	21.4
가정보육		353	401	13.6

자료: 충청남도, 충남보육통계(2004.12/ 2007.6).

3. 아동복지사업현황

아동복지사업은 아동안전 및 권리에 관한 사업, 가정보호사업, 지역사회아동보호, 시설보호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07).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충청남도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아동안전 및 권리사업은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사항으로,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완전한 주체로서 인정되어야 함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 방임아동 및 실종 등 아동권리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정책으로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아동정책추진을 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의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주요사업(〈표 7〉)은 어린이날 행사,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어린이주간 행사 등이 있다.

가정보호사업은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의 경우, 그룹 홈,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등이다.

지역사회아동보호사업은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급식비 지원, 수능공부방지원 등이 있다. 이중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월 3만원까지 1:1비율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회 진출시 학자금이나 취업, 창업, 주거마련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시설보호는 아동복지시설 15개소 운영, 입양기관운영, 퇴소아동자립비 추가지원, 시설아동사회적응 훈련지원 등이 있다.

〈표 7〉 충청남도 아동복지사업

구 분	아동복지사업
아동안전 및 권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5회 어린이날 행사: 1회(공주시) ·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2개소, 지방 이양): 2개소 · 후원자 · 아동만남행사: 250여명 · 어려운 아동 수련교실운영: 100여명 · 전국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참가: 1회 · 어린이주간 행사개최: 1회
가정보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홈 형태 아동보호: 7개소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만 12세 이하 국내입양아동 130명 · 입양장려금 지원: 8가구 · 이동이용시설처우개선비(지방 이양): 100명 · 소년소녀가정지원(지방 이양): 100명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 7명 ·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1개소 ·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지방 이양): 800명
지역사회아동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지방 이양): 70명 · 아동급식비 지원(지방이양): 14,300명 ·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요보호아동 1,168명 ·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 1,580명 · 결연기관 운영(지방 이양): 2개소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81개소 · 학기중 토 · 일 ·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11,500명 · 아동복지교사 지원 : 12명 ·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15개소
아동시설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운영(지방 이양): 15개소 · 입양기관운영(지방 이양): 1개소 ·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 70명 ·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지원: 641명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개소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한편 충청남도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중앙정부의 보육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 영아(장애아)기본 보조금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부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권장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충청남도의 특수 시책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충청남도 보육 특수시책사업(2007년)

사업명	사업내용
·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500원/일, 250일간 지원
· 장애아통합보육(수당/운영비)	- 일반보육시설 중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보육교사 수당지원(1인당/50천원/월), - 시설운영비(1시설당/300천원/월)
· 민간보육시설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지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 1인당 월 2만원
· 국공립·법인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 보육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 시설당 30만원/월 지원(방과후보육시설 지원대상제외)
·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가 출산, 휴가, 결혼, 병가, 보수교육시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
·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 1인당 5만원/월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무상보육료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영유아보육기회제공 (보육료 전액지원)
· 보육두레 운영	- 부모협동시설 1개소 운영비 지원
·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장애인차량지원	- 장애인전담시설의 장애인 리프트 차량구입비 지원

자료: 충청남도, 2007년도 보육시행계획.

Ⅲ. 아동복지 발전과제

1. 아동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중심의 선택주의적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의 정책들은 사후예방적인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보편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이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회피하는 지경에 처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래없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위험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와 사회부담의 가중 등이다.

이제부터 마음 놓고 출산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책과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즉,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인적자본의 육성을 통한 사회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아동복지가 빈곤아동, 문제아동, 장애아동 등으로 특징되는 요보호아동의 복지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가 복잡·다양화하게 될수록 아동복지의 욕구와 문제는 고도화·다원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방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아동에 대한 모든 사회·경제적 조치들이 아동이익의 최우선의 원칙, 아동생존 및 발달권, 아동참여권 등 아동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2.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간 정책융합과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마련 및 실천에 있어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세웠다. 사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실행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충남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차원의 노력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역할모색과 협력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표 9〉 범 정부적 저출산 대책

구 분	내 용	중앙정부	지방정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	○	-
	- 방과후 학교 확대	○	○
	-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
	-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
	- 입양아동 양육지원	○	○
	- 보육시설확충	○	○
	-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
	-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	○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 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원 확대	○	-
	- 육아휴직지원 강화	○	-
	- 출산,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	○
	- 양성평등,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강화	○	○
	-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조성	○	○
건전한 미래세대육성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
	- 아동·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

자료: 이재완,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방안, 2006.

3. 아동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합리적 조정 및 연계

아동정책은 복지, 보호, 교육, 문화, 체육 등 전 부처에 추진하고 있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아동복지사업의 서비스 공급망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청남도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설들간 긴밀한 협력과 연계없이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과후 보육(교육)의 실태를 보면,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관리하다 보니 지역단위에서는 기능이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표 10〉).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차원의 조정 및 연계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통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표 10〉 방과 후 보육(교육) 현황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보육	방과후 학교
대상아동	저소득 초·중·고생	초(4-6년) 중등(1-2년)	저소득 초·중생	초등학생(1-6년)	초·중·고생
기능	학습지도 및 보호, 급식 등	특기적성교육, 보충학습, 급식 등 종합서비스 제공	학습공간 제공	보육서비스 제공	특기적성교육

4. 아동복지시설의 확충

충청남도 아동복지서비스가 체계화, 전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다양한 시설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아동상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시설도 1개소에 지나지 않고 있어 아동복지인프라가 빈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간 차이도 현격히 나타나고 있어 16개 시·군 중 아동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이 5개미만의 지역이 9개 지역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민간보육시설의 의존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아동복지시설 확충 계획을 세워 다양한 아동복지수요에 맞는 시설인프라를 충남전지역에 균형있게 설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수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며, 기존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시설이용의 접근성과 쾌적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자체 및 직능단체 역할 분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단위)이 아동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이 연계·협력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주체들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자체와 직능단체의 역할을 상정할 수 있다.

〈표 11〉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자체 및 직능단체 역할 분담

구 분	참여기관	역 할
지방자치단체	충남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지원시책 개발 지원 -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부여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지역거점별 아동복지시설 확충(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상담소 등) - 아동수당제도 실시 - 임신부 교통비 지원 - 아동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및 의식개선 노력지방의회
지방의회	광역 및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양육환경조성과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보건 및
보건 및 의료기관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임신, 출산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연계서비스 강화 - 빈곤아동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활동경제단체
경제단체	대전충남경영자총 협회/(사)충남벤처 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보육시설 확충 -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적극적 보장 - 출산, 양육친화 우호적 기업문화 조성 - 일, 가정 양립화 촉진 캠페인 등 홍보
언론계	신문사/방송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보장 및 사회투자정책 차원의 아동복지 정책 홍보 - 출산, 육아지원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방송, 보도 등
교육 및 연구기관	교육청/ 대학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실시 -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정책 의식교육 - 출산, 양육친화적 학내분위기 조성 - 저출산문제 홍보 - 아동의 안전, 권리보장에 대한 조치 - 지역특성을 반영한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복지계/ 사회단체	복지시설/ 사회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문화 조성 - 아동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지역사회 아동복지 캠페인 전개 - (아동)복지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자료 : 충청남도 출산·양육후원협의회, 출범식 및 회의자료 재구성, 2007.

IV. 결론

최근에 아동에 대한 지원을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보는 시각으로 아동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해방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역사회보호 또는 가정에서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고려 없이 곧바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가 이루어졌다. 보통 가정에서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이후에 시설보호가 이루어지는 서구복지선진국과는 반대의 길을 걸은 것이다. 물론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가정보호나 지역사회보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의 순혈주의 의식은 가정위탁보호나 입양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되고 있다. 입양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시설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는 현재의 분출되는 아동의 복지욕구와 보육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

결국 일반 아동의 보편적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그리고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양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에 대하여 인구폭탄으로 인류에게 사회·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인구학자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사회의 각 주체들이 아동양육친화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해야 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지역환경에 맞는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발 노력(다사랑카드 등)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보호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아동보호 및 시설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연명, 사회투자국가, 새로운 사회복지패러다임인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2007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7.
- 김중해, 보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편,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나눔의집, 2007.
- 보건복지부, 2007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7.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6.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7.
- 이재완,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6.
- 이재완·최영선,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양서원, 2006.
- 충청남도 출산·양육후원협의회, 출범식 및 회의자료, 2007.
- 충청남도, 2007 도정백서, 2007.
- 충청남도, 2007년도 보육시행계획, 2007.
- 충청남도, 2007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 2007.
- 충청남도, 도정주요통계, 각년도.
- 충청남도, 예산서, 2006.
- 충청남도, 제1차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2006.
- 충청남도, 충남보육통계, 2004.12./2007.6.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방안 모색, 2006.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 보육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005.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5.
- Esping-Andersen, G.,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 Press, 2002.

충남 결혼이주민 가족의 현황 및 복지증진

문순영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I. 서론

2007년 8월 현재 국내에 머무르는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이웃 100명 중 2명이 외국인인 시대가 되었다. 한국이란 경계를 넘어 다양한 국적의 이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생활과 삶의 공간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인의 배우자로 외국인을 보는 것이 전혀 낯선 광경이 아니게 되었다.

2005년에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 건수의 13.6%에 이르렀다. 국제결혼이 국내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에 5.2%이었던 것에서 2004년에 11.4%로 증가하여 2년 사이 배가하였고, 2005년에는 혼인자 100명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결혼 형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두드러지게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 건수는 2002년도에 11,017건(전체 결혼 건수의 3.6%)이었던 것에서 2004년도에 25,594건(전체 결혼 건수의 8.2%)으로 두 배 이상증가 하였고, 2005년에는 31,180명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9.9%를 차지하여 한국 내 국제결혼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하여 외국인 남성과 한국 여성과의 국제결혼 건수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¹⁾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의 국제결혼 유형은 농촌 지역으로 가면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진다. 2005년에 혼인한 남성 농림어업종사자 중 외국 여성과 혼인한 비율은 전체 국제결혼의 35.9%로 농림어업종사자 혼인의 3명 중 1명이 국제결혼이었다(통계청).

1) 출처 : 충청남도, 「2007 충남여성백서」
충청남도, 「2006 충청남도 도정백서」

이들 여성 결혼 이주민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 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 적지 않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자국에서 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정착한 농촌지역이 노동환경과 생활조건이 열악하여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 역시 대체로 빈곤층에 속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제결혼 여성이주민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나는 혼혈아가 2006년 전체 신생아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추세대로 지속적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한다면 향후 15년 후인 2020년에는 32%가 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농촌의 면지역 초등학교를 조사해 보면 한반에 상당수의 아이들이 혼혈이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혼혈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전정애·표갑수, 2007:96).

이와 같이 국제결혼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미비하였다. 그나마 정부가 이들 국제결혼 가정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문화체험인데, 이마저도 산발적이면서도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많은 국제결혼 가정과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장벽을 극복하며 갈등과 사회 적응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 이혼이나 단독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과 같은 사회 현상을 고려하면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함의는 매우 크다. 또한 향후 이들 2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로서 생산가능 인구에 속하고,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인적자원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이들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로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할 과제들을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충청남도의 국제결혼 현황

충청남도의 국제결혼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전국 국제결혼의 증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에 충남의 국제결혼이 전국 국제결혼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던 것에서 2005년에는 27.1%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충남 자체의 국제결혼이 총 혼인건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4.2%에서 2004년에 10.3%로 약 2.5배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13.1%를 차지하여, 충남 혼인자 100명 중 13명이 국제결혼 가정이 것으로 나타나 충남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결혼 유형의 하나로 국제결혼이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충남의 국제결혼 추이

구분 연도	전국			충남			충남국제결혼 /전국국제결혼 (%)
	총혼인 건수	국제결혼		총혼인 건수	국제결혼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1	320,063	15,234	4.8	11,113	466	4.2	3.06
2002	306,573	15,913	5.2	10,421	534	5.1	3.36
2003	304,932	25,658	8.4	10,551	822	7.8	3.20
2004	310,944	35,447	11.4	11,418	1,173	10.3	3.31
2005	316,375	43,121	13.6	12,108	1,590	13.1	3.6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www.kosis.nso.go.kr)

충남의 국제결혼을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듯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국제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이후 모두 86%를 넘고,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의 결혼은 15%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국제결혼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65.7%에서 2005년 72.3%로 증가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충남이 약 13%~22% 정도 높다. 이는 충남이 농촌지역이 많아서 국제결혼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표 2〉 충남의 국제결혼 유형 변화

구분 연도	총합	한국남성 +외국여성		한국여성 +외국남성		전국 비율 (한국남성+외국여성)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1	466	409	87.8	57	12.2	65.7
2002	534	481	90.1	53	9.1	69.2
2003	822	752	91.5	70	8.5	77.6
2004	1,173	1,027	87.6	146	12.4	72.2
2005	1,590	1,378	86.7	212	13.3	72.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www.kosis.nso.go.kr)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들을 출신 국가별로 구분하여 보면,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 총 1,514명 중에서 중국이 589명(38.9%), 베트남 347명(22.9%), 필리핀 255명(16.8%), 일본 179명(11.8%), 태국 51명(3.4%), 우즈베키스탄 20명(1.3%)로 나타나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표 3〉 참조). 이들을 거주 지역별로 분포를 보면, 면 지역이 1,001명(66.1%), 읍 지역이 339명(22.4%), 시 지역이 174명(11.5%)로 나타나 대 다수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충남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신국가별 현황 (2005년말 기준)

합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연변	캄보디아	기타
1,514	589	347	255	179	51	20	17	11	11	34
100(%)	38.9	22.9	16.8	11.8	3.4	1.3	1.1	0.7	0.7	2.4

자료: 김종철, "충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현황 및 지원대책," 「아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현황과 정책 간담회」자료, 2006, p34

충남의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표 4〉에서 보여주듯이 30세까지가 41.5%, 31세~40세 41.2%, 41세~50세 15%, 50세 이상이 2.3%로 40세 이하가 총 82.7%로 젊은 여성들의 비율이 높다. 이들이 살고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읍이나 면의 농촌 지역인 것으로 염두에 두면, 충남의 농촌지역이 노령화되고 젊은이가 공동화되는 경향을 조금은 완화하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은 이들 이주여성들은 총 여성 인구의 0.15%로 큰 인구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적으로도 0.06%~0.45%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여군이 166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이 당진군 160명, 천안시 및 공주시가 각각 144명, 금산군이 130명, 서산시가 122명으로 비교적 많이 100명이 넘게 거주하는 지역인 것에 비하여 계룡시는 8명으로 이주 여성의 거주 비율이 아주 낮다.

〈표 4〉 충남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의 연령 분포(2005년 말)

(단위 : 명)

시군별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 인구 ¹⁾						여성총인구 ²⁾
	30세까지	31세~40세	41세~50세	50세 이상	계	비율(%) (/여성인구)	
30세까지	629 (41.5)	623 (41.2)	227 (15%)	35 (2.3%)	1,514 (100%)	0.15	981,283
천안시	51	66	23	1	141	0.06	255,870
공주시	65	52	24	3	144	0.22	64,757
보령시	23	25	4	1	53	0.1	53,598
아산시	32	33	13	1	79	0.08	102,573
서산시	35	63	20	4	122	0.16	74,489
논산시	45	44	24	2	115	0.17	67,575
계룡시	3	5	0	0	8	0.05	17,375
금산군	64	42	24	0	130	0.45	28,936
연기군	32	22	12	0	66	0.16	41,829
부여군	52	87	26	11	166	0.41	40,871
서천군	25	19	8	1	53	0.16	32,541
청양군	26	24	8	0	58	0.33	17,517
홍성군	34	44	11	5	94	0.20	45,959
예산군	16	32	6	3	68	0.15	45,461
태안군	16	32	6	3	57	0.18	31,859
당진군	94	46	18	2	160	0.27	60,073

자료: 1) 김종철, "충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현황 및 지원대책," 「아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현황과 정책 간담회」자료, 2006, p35 재구성

2)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복지계획」, 2006, p55

이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녀가 있는 가정이 64.9%이고, 이들 중 자녀 1인 가정이 30.2%, 자녀 2인 가정이 25.2%, 자녀 3인 가정이

7.6%, 자녀 4인 가정이 1.9%이었다. 2000년 한국의 출산율이 1.47이었던 것에서 2005년에 1.08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 국제결혼 가정은 이와는 달리 상당히 충남지역의 인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40세까지의 가임여성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30세 이하의 여성비율이 41.5%이므로 향후에 자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남 농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저지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충남지역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수 및 자녀의 학력별 분포

시군별	자녀수 분포						자녀의 학력별 분포					
	0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계 (가구)	취학전 (명)	초등학 교(명)	중재 (명)	고재 (명)	대재이 상(명)	계(명)
계	531	457	382	115	29	1,514	1,080	413	33	30	57	1,613
비율	35.1	30.2	25.2	7.6	1.9	100.0	63.1	25.6	2.0	1.9	3.5	100.0
천안시	43	40	39	13	6	141	78	23	5	2	4	112
공주시	71	43	22	7	1	144	78	23	5	2	4	112
보령시	22	13	16	2	·	53	31	16	·	·	4	51
아산시	30	28	20	1	·	79	46	21	·	2	2	71
서산시	22	40	39	19	2	122	114	55	4	6	4	183
논산시	42	37	19	15	2	115	82	31	4	6	5	128
계룡시	3	3	2	·	·	8	3	3	1	·	·	7
금산군	38	40	37	8	7	130	114	47	2	1	1	165
연기군	26	20	18	2	·	66	39	20	1	1	1	62
부여군	61	44	48	10	3	166	101	58	1	5	17	182
서천군	20	17	11	3	2	53	40	8	6	·	2	56
청양군	9	19	19	9	2	58	62	26	2	2	1	93
홍성군	34	27	24	7	2	94	82	17	·	·	5	104
예산군	23	27	15	3	·	68	53	12	1	·	·	66
태안군	15	16	22	3	1	57	52	19	·	·	2	73
당진군	72	43	31	13	1	160	105	34	1	3	5	148

자료 : 김종철, "충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현황 및 지원대책," 「아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현황과 정책 간담회」자료, 2006, pp.36-37

그리고 이들 가정 자녀의 연령별 분포는, 취학 전 자녀가 1,080명 6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초등학생이 413명으로 25.6%, 중학교 재학생이 33명으로 2.0%, 고등학교 재학생이

30명으로 1.9%, 대학교 재학생이 57명으로 3.5%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자녀수가 많은 지역은 서산시 1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여군이 182명, 금산군이 165명, 당진군이 148명, 논산시가 128명, 천안시와 공주시가 각각 112명, 홍성군이 104명으로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과 자녀들의 수 및 분포를 종합하여 볼 때, 충남의 농촌 지역에서 이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핵심적 구성원이 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성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발생시키는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지원과 이들 이주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적인 풍요와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택하여 온 이주 여성들이 농촌지역에 장기적으로 자리 매김 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Ⅲ.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생활 적응에서 겪는 문제

우리 사회에 정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어서 이들에 대한 복지 욕구를 조사한 연구들은 극히 소수이다. 더구나 충남의 경우에는 이들 가정의 거주 및 인구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간단한 조사만이 이루어져서 이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 따라서 충남 지역 국제결혼 가정의 복지욕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국제결혼 가정 사례를 다룬 몇 편의 연구논문, 그리고 국제결혼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상담 자료나 홍보 및 세미나 발표 자료,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국제결혼 여성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욕구들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강원도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조사한 강유진(1999)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여성 이주민들이 '생활습성, 언어 장벽 등 문화적 차이' (29.9%), '고향에 대한 그리움' (27.7%), '남편과의 성격차이' (11.5%)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의 풍습에 관한 교육' (38.1%), '요리'

(29.9%), ‘기술교육’ (27.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전남 공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아동 19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을 조사한 정은희(2004)의 연구에서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적 지원 사항을 알아본 결과,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 (11%), ‘전통문화나 요리강습의 요구’ (11%), ‘언어교육’ (11%), ‘영주권 및 선거권 인정’ (11%)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동사무소나 시청 등으로부터 생활혜택에 관한 정보제공’ (5%), ‘지역신문배달’ (5%),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5%), ‘한국문화안내’ (5%)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적은 사례수와 조사 대상 인원 중 21%가 응답을 하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국제 결혼한 여성들에게 절실한 사회적 지원이 어떤 것들인지는 엿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 외에도 여성 이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 워크숍이나 심포지움, 세미나, 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통하여도 이들 여성들의 욕구를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숍」(2003)에서는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충격’, ‘정보소외로 인한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부족’ 등이 국제결혼 여성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주관으로 열린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에서 이금연(2003)은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①언어습득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②가정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 ③사회시스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④정보소외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 기회의 어려움, ⑤사법권 및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⑥귀화시험의 어려움, ⑦문화적 갈등, ⑧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⑨기타 사설알선업자들의 여권 압류 및 감시 등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움(2004)에서는 ‘가정폭력(상습적 구타)’, ‘성적학대와 인격모독’, ‘경제적 빈곤의 문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국사회 적응문제’, ‘임신·출산의 어려움과 육아문제’,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물이해(제3세계 여성들이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다)’, ‘체류문제와 관련한 신분상의 불안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전국적 실태조사는 비교적 최근 1-2년간에 진행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적 많은 수의 국제결혼 여성을 대상²⁾으로 하였던 설동훈 외(2005)의 조사에서는 빈곤³⁾과 의료보장⁴⁾의 문제가

2) 전국적으로 1,082명의 국제결혼 배우자를 조사.

3)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었음.

4)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중 어떤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23.6%이었음.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소, 읍·면·동 사무소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의료보장서비스 이용의 장벽 제거, 가정폭력의 경험, 불안정한 결혼 상태 등에서 기인하는 정신·심리적인 치료와 상담서비스,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동훈 외의 또 다른 연구(2006)에서는 외로움(22.3%), 문화차이(14.6%), 자녀문제(13.8%), 경제문제(12.1%), 언어문제(11.5%), 가족갈등(3.5%), 주위의 시선이나 태도 등을 의식하는 것(3.1%), 음식이나 기후(3.0%) 등이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결혼 이주민들이 실제로 체험한 정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두 번째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한국어 교육’과 ‘취업교육·훈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다음으로 ‘컴퓨터·정보화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선(2007)의 연구는 비록 경기도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외국인 부인의 서비스 욕구로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절실히 요구되는 서비스로 ‘한국어 교육’이, 다음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훈련 및 교육’과 같은 고용관련 서비스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동거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발표 자료들, 그리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제결혼 여성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①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언어교육, ②인권침해(가정폭력 포함)해소, ③취업에 필요한 서비스(교육, 상담, 알선 등), ④문화 교육, ⑤빈곤해소, ⑥의료보장, ⑦임신 및 출산,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서비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IV.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일제하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결혼이 시작이었으며, 한국전쟁 때 미군으로 대표되는 유엔군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런 결혼은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여서 이들 결혼의 대상자였던 한국 여성과 자녀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사회적으로 논의되어 만들어진 적은 없었다. 그 때문에 한국

인과 아시아인의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정부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서 단지 몇몇의 선구적인 NGO들이 이들의 긴급한 욕구를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 전적으로 그들의 몫으로 방기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들 국제결혼 가정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몇 곳에 지나지 않는 NGO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들의 경험하는 차별이나 인권보호, 복지욕구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제3세계 여성 배우자에 대한 한국남편들의 횡포, 학대, 인권유린 등의 사례들이 외부로 보고되면서 국가 위상이 저하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출신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되었다. 더하여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가 이주 여성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확대되었다. 이렇게 되자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결혼 이주민 여성의 한국어 교육 및 전통 문화체험,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원 등의 사업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범사업들로 이미 심각해지고 있는 결혼 이주민 가정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고, 정부 부처간의 중복적 사업 설정으로 예산의 낭비와 유관부처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2006년 4월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 대책은 ‘차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란 기본방향 아래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 유관부서 모두가 참여하여 마련되었다

〈표 6〉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영역	정책 세부 내용 요약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①결혼중개업체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②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③인신매매 등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④재외공관에 여성인권담당관 배치 검토 ⑤결혼비자 발급 서류 절차 표준화 및 사전 사증인터뷰 제도 도입 검토 ⑥외교 채널을 통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⑦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①배우자 신원보증 해지신청 요건 강화 - 여성의 의견청취, 사실여부확인 ②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③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요청 완화 - 시민단체 등의 사실 확인 등 ④사실혼 부모 출생자녀 및 외국인 모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⑤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 - 1366 핫라인, 전용 쉼터 등 마련 ⑥무료법률 구조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①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 On/Off Line 동시 구축 ②한국생활적응 및 정착지원 - 한국인 가정과 자매결연, 한국어 교육 및 교육방송지원 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①다문화교육추진체계 구축 - 교육과정개선 ②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지원 기능강화 -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생활 다언어 리플렛 작성, 이중 언어 학습지원 등 ③교사역량강화 ④집단따돌림 예방 ⑤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이용, 농어촌지역 멘토링 제도 도입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①기초생활보장 및 건강증진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적용, 모·부자복지법적용, 건강검진서비스 시범실시 및 무료진료지원 ②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출산도우미, 산전 후 지원, 영유아양육비지원 등 ③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 진출 지원 - 취업상담 및 알선 강화, 전문 인력 활용분야개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①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②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③공무원 교육 실시 ④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추진체계 구축	①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②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③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인력양성 ④법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 지방정부가 정책네트워크 구축

	정책 세부 내용 요약	주관부서	협력부처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구축	국제결혼당사자보호, 언어문화이해교육,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전달체계(결혼이민자 지원센터)구축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부, 복지부, 정통부, 행자부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감독, 생계·의료지원 및 생활정보제공	복지부	법무부, 여가부, 지자체
	인신매매 성적의 국제결혼방지, 체류자격 불안정해소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지원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지자체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노동부	여가부
	불법행위단속	경찰청	법무부
	업무관계자 교육	중앙인사위	전 부처, 지자체

결혼이주민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표 6>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제결혼 과정에서부터 혼인 이후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정 폭력에 대한 지원,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회·경제적 지원,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생활지원,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등으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과 추진체계가 구성되었다. 특히 이 정책안은 내국민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결혼이민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국적 취득 전이라도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과 긴급복지지원의 수혜대상자,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직접 서비스 전달체계인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의 전국적 망 구축, 취업알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지금까지의 결혼이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들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혼인 해소 후의 여성들과 국적취득 전에 아이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여성, 우리나라에서 영주자격증을 가지고 살고 있는 화교와 같은 외국인 국적자를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 안이 이주민을 우리사회에 통합 하는 기제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제안된 사업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치료책 중심으로 구성된 점, 사업의 주관부서와 협력체제로 각 사업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료화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그 간의 결혼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체계를 그대로 두고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어느 정도나 발휘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 등은 여전히 의문스럽다.

V.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의 국제결혼 이주민 지원 사업

정부의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에 따라 2007년에 충청남도가 도내의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을 위하여 실행한 사업들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충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및 국제결혼 여성가족화합 축제,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결혼이민자가정의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 교육,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무료진료 등의 사업들에 약 1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각 사업을 주관한 부서들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로부터 도의 새마을과, 경제정책과, 보건위생과, 농촌개발과 등으로 소관 부서가 여러 곳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진행한 사업들의 내용들도 교육이나 문화행사, 보육료지원 등으로 대체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사업의 진행은 크게 도가 직접 수행한 사업, 도내 16개 시·군에 지원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한 사업, 도내의 민간기관의 사업에 지원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업의 실행이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사업 내용은 큰 차별화 없이 다소 중복적임을 알 수 있다.

<표 7> 2007년 충청남도 이주민 사업 총괄

사업내용	주관부서*	대상	예산액 (천원)	비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무료진료사업	보건위생		155,000	기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복지정책	자치단체	104,250	국고
국제결혼가정 한마당 축제	복지정책	민간단체	30,000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복지정책	자치단체	199,800	
결혼이민여성지원사업	여성가족정책	민간단체	30,000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지원	여성가족정책	자치단체	388,800	
혼인귀화여성농업인교육지원	기술보급	자치단체	9,000	
외국인근로자화합한마당지원(한가위)	경제정책	민간단체	10,000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	경제정책	자치단체	10,000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농업정책	자치단체	208,250	국고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재구입	여성가족정책	도운영	10,000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여성가족정책	자치단체	134,000	기금
외국인 화합한마당축제지원	도의새마을	민간단체	50,000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지원	도의새마을	자치단체	40,000	
합 계			1,379,100	

도내의 16개 시·군이 2007년에 이주민들을 위하여 수행한 사업들과 예산은 <표 8>과 같았다. 국제결혼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은 5억 6천만 원이라는 최고로 많은 예산을 사용한 당진군에서부터 3천 2백만 원의 가장 적은 예산을 집행한 계룡시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이 수행한 사업의 내용은 지자체간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국제결혼이주민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국제결혼 가정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지원,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축제, 국제결혼가정의 행복가꾸기사업, 국제결혼여성 및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한국전통문화 체험 등의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었고, 지자체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국제결혼여성들을 친정에 보내주는 프로그램(논산시, 계룡시, 홍성군), 국제결혼지원금(보령시, 연기군, 부여군, 청양군), 국제결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의 사업들이 있었다.

<표 8> 충청남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 이주민 사업 총괄

시군구	사업내용	소관행정부서	대상	예산(천원)				비고
				총액	국고부담	도부담	시/군부담	
천안시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행사지원 및 도 행사참석	여성복지		7,200	·	2,160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국어교육)	여성복지	민간단체	70,000	·	·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복지	민간단체	70,000	·	21,000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외국인여성 적응프로그램)	여성복지	민간단체	14,553	35,000	17,500 4,366	·	
	국제결혼가정 자녀지원	여성복지	민간단체	2,300	·	·	·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지원	보육복지	민간단체	140,400	·	1,150	·	
	외국인근로자위탁운영	지역경제	민간단체	10,000	·	23,040	·	
	외국인근로자센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역경제	지자체운영	1,400	·	5,000	·	
	외국인근로자위탁운영	지역경제	민간위탁운영	180,000	·	·	·	
	합계			495,853	·	·	·	
공주시	국제결혼가정자녀학업자료지원	여성정책	사회보장정책	21,500	·	6,450	141,050	
	국제결혼가정지원	여성정책	지자체운영	50,000	·	1,500	3,500	
	결혼이민자가정영유아 무상보육료지원	여성정책	민간단체	140,000	·	28,080	112,320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정책	민간단체	24,319	·	7,296	17,023	
	국제결혼가정 우리문화보급	여성정책	민간단체	24,318	·	7,295	17,023	
	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여성정책	민간위탁	43,438	34,750	·	8,688	
	온누리안 쉼터운영(국제결혼가정)	여성정책	민간단체	10,000	·	·	·	

공주시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여성정책	민간단체	44,800	44,800	·	·	(기금)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여성정책	민간단체	67,200	·	·	·	
	합계			425,575	·	·	·	
보령시	국제결혼가정꾸미기 참여자 보상	사회복지	행사실비보상	7,169	·	2,151	5,018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무상보육료	사회복지	민간단체	55,800	·	11,160	44,640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사회복지	민간단체	7,168	·	2,150	5,018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	농정관리	기타보상금	66,000	46,200	5,940	13,860	
	혼인귀화여성농업인교육지원	농업기술	국외여버	2,000	·	600	1,400	
	혼인귀화여성농업인교육보상	농업기술	행사실비보상	4,000	·	1,200	2,800	
	국제결혼지원금	사회복지	사회복지적수혜	50,000	·	·	·	
	국제결혼행복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	민간단체	3,169	·	951	2,218	
	외국인적응능력 프로그램지원	주민생활지원	민간단체	4,000	·	2,000	2,000	
	합계			199,306	·	·	·	
아산시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지원	보육관리		82,800	·	16,560	66,240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정책		27,737	·	14,837	12,900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우리문화보급사업)	여성정책		3,000	·	900	2,100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여성정책		44,876	34,750	1,430	8,687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정책		21,444	·	6,433	15,011	
	혼인귀화여성농업인교육(재료)	기술지원		4,000	·	1,200	2,80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운영	고용증진		10,000	·	5,000	5,000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여성정책		44,800	·	·	·	(기금)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여성정책		7,000	·	3,500	3,500	
	합계			245,657	·	·	·	
서산시	외국인여성 어울림마당	새마을	민간단체	1,000	·	·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참가자보상금	가정복지	행사실비보상	5,435	·	1,631	3,804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가정복지	민간단체	47,480	·	14,244	33,236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	농업관리	기타보상금	66,000	46,200	5,940	13,860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	농업관리	민간위탁	8,375	5,682	·	2,513	
	합계			128,290	·	·	·	
논산시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복지	민간단체	147,600	·	29,520	118,080	
	국제결혼 이민여성 친정나들이	여성복지	행사실비보상	10,000	·	·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복지	민간단체	62,472	·	18,741	43,731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교육도우미)	농정기획	기타보상금	66,000	46,200	5,940	13,860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지원	서비스연계(주민생활지원)	민간단체	4,000	·	2,000	2,000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부부교실등)	농정기획	민간위탁	8,375	5,862	·	2,513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보건위생	의료및구입비	9,400	·	·	·	
	합계			307,847	·	·	·	

계룡시	국제결혼가정교육 실비참석수당	가정복지	행사실비보상	2,000	·	600	1,400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가정복지	민간단체	10,993	·	3,298	7,695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지원	가정복지	민간단체	5,400	·	1,080	4,320	
	외국인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가정복지	민간단체	4,000	·	2,000	2,000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가정복지	민간단체	10,000	·	·	·	
	합계			·	·	·	·	
금산군	국제결혼가정 관련참가축제	여성복지관리	행사실비보상	5,000	·	1,500	3,500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여성복지관리	민간단체	43,410	34,728	·	8,682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여성복지관리	민간단체	57,983	·	17,395	40,588	
	외국인주부 우리문화익히기	여성복지관리	민간단체	15,000	·	·	·	
	외국인주부 자녀 버팀목되어주기	여성복지관리	민간단체	30,000	·	·	·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청소년복지	민간단체	205,200	·	41,040	164,160	
	합계			·	·	·	·	
연기군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가족보건관리	의료및 구입	3,000	·	·	·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유아복지	민간단체	70,200	·	14,040	56,160	
	국제결혼지원금	부녀복지	기타보상금	60,000	·	·	·	
	국제결혼가정학업자료지원	부녀복지	사회보장적수혜	10,000	·	1,800	8,200	
	국제결혼가정행복가꾸기 사업	부녀복지	민간단체	26,796	·	8,038	18,758	
	혼인귀화여성농업인 교육강사수당	농촌지도개발	일반운영	1,000	·	300	700	
	혼인귀화여성농업 교육교재	농촌지도개발	일반운영	3,000	·	900	2,100	
	혼인귀화여성농업인 교육참가보상	농촌지도개발	행사실비보상	2,000	·	600	1,400	
	외국인노동자복지센터지원	지역경제관리	민간단체	5,000	·	·	·	
	합계			180,996	·	·	·	
부여군	여성결혼이민자 보건위식 향상사업 (건강교실운영)	예방보건	일반운영	800	·	·	·	
	여성결혼이민자 우리고장둘러보기(급량비, 입장료등)	모자보건	행상실비	642	·	·	·	
	여성결혼이민자 전통음식체험하기(음식재료구입)	모자보건	행사실비	900	·	·	·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교실운영 간식비	모자보건	행사실비	336	·	·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아동	사회보장적수혜	59,301	·	17,790	41,511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보육료지원	여성아동	민간단체	122,720	·	36,360	86,360	
	미혼자국제결혼 지원금	주민새마을	기타보상	48,000	·	·	·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 교재제작	주민새마을	일반운영	4,000	·	2,000	2,000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농정기획	사회보장적수혜	66,000	46,200	5,940	13,860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도우미수당(목변경)	농정기획	기타보상	66,000	46,200	19,800	·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부부교실등)	농정기획	민간위탁	8,375	5,863	2,512	·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여성아동	민간단체	72,720	·	36,360	36,360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의약방역	의료 및 구입	180	·	45	135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목변경)	여성아동		12,000	·	6,000	6,000	

부여군	국제결혼가정자녀학업자료지원	여성아동	사회보장적수혜	6,251	·	1,916	1,916	
	국제결혼가정 행복한가정가꾸기사업참가등록비	여성아동	행사실비보상	5,000	·	5,000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아동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	21,437	·	6,000	9,437	
	합계			·	·	·	·	
서천군	국제결혼가정행상 및 교육참가보상	여성아동복지	행사실비보상	1,996	·	·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아동복지	민간단체	30,337	·	9,101	21,236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보육료지원	여성아동복지	민간단체	72,200	·	14,400	57,600	
	혼인귀화여성농업인 교육강사수당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	일반운영비	700	·	210	490	
	혼인귀화여성농업인교육자료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	일반운영비	2,000	·	600	1,400	
	혼인귀화여성농업인교육자료재료비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	재료준비	1,200	·	360	840	
	혼인귀화여성농업인교육참석자급식비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	행사실비보상	600	·	180	420	
	혼인귀화여성농업인 한국전통문화체험활동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	민간단체	1,500	·	450	1,050	
	합계			·	·	·	·	
청양군	농촌총각국제결혼추진비	여성복지	국외여비	2,000	·	·	·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복지	민간위탁금	20,783	·	6,235	14,548	
	국제결혼가정 자녀 학습자료 지원	여성복지	사회보장적수혜	17,400	·	·	·	
	농촌총각 국제결혼추선	여성복지	민간행사보조	25,000	·	·	·	
	합계			65,183	·	·	·	
홍성군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도우미 수당	농정기획관리	기타보상	66,000	46,200	5,940	13,860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여성복지	민간단체	41,287	·	12,386	28,901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주기	여성복지	민간단체	10,000	·	·	·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보육료지원	아동복지	민간단체	147,600	·	·	·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도의 새마을	민간단체	4,000	·	2,000	2,000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행정혁신(자치행정)		1,500	·	·	·	
	합계			270,387	·	·	·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행복한가정가꾸기사업	여성복지관리	민간단체	26,110	·	7,833	18,277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무상보육료지원	여성복지관리	민간단체	95,400	·	19,080	76,320	
	여성결혼이민자모임 교육강사료	보건관리	운영수당	400	100	100	·	200기금
	여성결혼이민자모임 도우미 강사료	보건관리	운영수당	1,120	·	280	280	560기금
	여성결혼이민자건강검진	보건관리	민간위탁	5,366	·	1,341	1,342	2,683기금
	합계			·	·	·	·	
태안군	국제결혼한마당축제	가정복지	행상운영비	1,000	·	300	700	
	국제결혼한마당축제	가정복지	행사실비보상	7,000	·	2,100	4,900	
	국제결혼가정 행복한가정꾸미기	가정복지	민간단체	6,000	·	1,800	4,200	
	국제결혼가정 우리문화보급	가정복지	민간단체	3,500	·	1,050	2,471	
	국제결혼가정 자녀학습지원	가정복지	민간단체	3,484	·	1,045	2,439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여성복지	민간단체	93,600	·	18,720	74,880	

태안군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지원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4,000	·	2,000	2,000	
	합계			118,584	·	·	·	
당진군	외국인 우리문화체험행사	기획관리	민간행사보조	8,000	·	·	·	
	필리핀 여성 이용 초등학교 영어교육	기획관리	교육지원비	144,000	·	·	·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보육료지원	여성정책	민간단체	189,000	·	37,800	151,200	
	국제결혼가정 행복한 가정 꾸미기 사업	여성정책	민간행사보조	65,047	·	19,514	45,533	
	결혼이민자 교육도우미 수당	농정관리	민간단체	66,000	46,200	5,940	13,860	
	혼인귀화여성 농업인교육지원	지도개발(농촌진흥)	민간단체	6,000	·	1,800	4,200	
	결혼이민자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문화관광)	민간단체	30,000	·	·	·	
	여성결혼이민자녀 방문학습자료지원 (과목경정중)	여성정책	사회보장적수혜	17,178	·	5,153	12,025	
	여성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사업(과목경정중)	여성정책	민간단체	33,000	·	9,900	23,100	
	결혼이민자부부교실위탁	농정관리	민간단체	8,375	·	5,863	2,512	
	합계			566,600	·	·	·	

* : 예산서의 세항을 근거로

자료 : 각 지자체별 2007년 세출예산(본예산, 추경예산) 재구성

사업의 추진 행정기관도 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 업무를 맡은 부서, 지역경제발전 및 농정관리를 맡은 부서, 주민생활지원국 등으로 다양한 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의 실제 진행은 대부분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거나 민간위탁의 형태로 이루어 졌다.

상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나 16개 시·군이 각 행정기관별로 경쟁적으로 이주민 사업에 참여하고 현상은 예전에 비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주민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 들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이민자 가족 사회통합방안에 의해 충남도와 16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 사업들이 지역적인 차별성이 없이,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축제 등의 사업 들이다. 비록 사업의 진행을 충남도나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하 거나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으나 사업의 내용은 변 화가 없다. 이는 이주민에 대한 지방의 사업들이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나 이해 없이 중복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주민들의 복지욕구나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주민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처한 환경이 다르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여건이 다르므로 지자체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고, 지역사회의 여건분석 등을 통하여 이주민의 욕구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야만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을 제외하고는 1회의 선심성 행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16개 시·군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결혼이주민가족의 행복가꾸기 사업’은 예산서에 ‘1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1회의 행사 진행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모적인 형태의 사업 수행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주민들을 지역사회로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이들이 생활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관이나 행정부서의 실적은 될 수 있지만 예산의 낭비인 것이다.

셋째, 정부의 통합 안에는 이주민과 관련하는 공무원이나 교육자, 사업주 그리고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교육의 추진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도와 16개 시·군이 수행한 사업들에서는 여성 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학습교육만 있을 뿐, 그들의 가족이나 사업주, 관계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이민자 관련 사업과 관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교육은 전무하다.

넷째, 사업의 대상이 정주를 목적으로 이주한 ‘이주 여성’에게로만 국한되어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이주민인 화교나 외국인근로자 등이 배제되고 있다. 천안시나 아산시와 같이 산업단지들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결혼이주민보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숫자가 더 많고 이들의 정주 비율이 높다. 이대로 간다면 안산시처럼 이주민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예컨대 외국의 코리아타운이나 차이나타운처럼 외국인집단 거주지역이 발생하여 계토화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나 대책은 전무하다.

Ⅶ. 결론 : 충남지역 이주민사업을 위한 개선과제

21세기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노동도 북아프리카·중동에서 유럽으로, 중남미·카리브해에서 미국으로, 동남아에서 북부지역으로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다인종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취업, 결혼, 학업 등으로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본 글은 이주의 세계화속에서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의 실태와 이들이 한국사회 적응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지원노력을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점검하여 보았다.

최근 한 2년간 중앙정부가 이주민들을 한국사회로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정부에서도 한국어 교육,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 보육료지원, 문화체험 및 축제, 사회보장성의 경제적 지원 등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빈곤 등의 문제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특히 배타적 단일민족 신화 등으로 이전까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전무하였던 우리로서는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지역적 차별성이 없는 점, 1회성의 휘발성의 사업, 인식교육의 부재, 사업대상에 있어 자녀가 있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문제 해결방안의 기초 단위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은 여전히 이주민들을 지역사회로 통합하는데 장애가 되는 점이다.

이에 향후 충남도가 상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결혼 이주민의 복지증대와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무엇보다도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의 다양한 이주민들의 욕구에 맞추어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여성결혼이민자, 국제결혼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욕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보육 및 양육 환경, 자녀학습 수준 등에 대한 연구 조사와 이들 출신 국가별 특성,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주민에 대한 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이 중복성과 일회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NGO,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외국인근

로자센터, 다문화 교육기관, 상담소 등과 연계·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이 재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NGO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위계적 형태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에서 협력과 연대가 추진되어야 하고, NGO들 간에도 개별적인 사업전개로 인한 활동의 중복이나 서비스 누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자간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역 내 이주민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각 기관·단체의 특성화된 영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서비스가 상호간에 조정·연계되어 비용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다문화 교육의 내용 및 대상층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민과 관련한 논의와 지원정책에서 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레토릭은 '다문화 주의' 혹은 '다문화적 상호이해'이고, 이런 사회의 건설은 법과 제도상으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의 마련뿐만이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남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된 교육의 내용은 이주민을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동화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었었고, 그 대상도 이주민가 이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대부분이다. 다문화 공생사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를 내국인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이 이주민 관련하는 사업주, 공무원, 민간단체 등의 실무자들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주민을 위한 정책들의 실행 효과를 담보 할 수 있다. 비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바로 성과를 낳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다인종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다름이 차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특성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국제결혼 이주민에 대한 사업 대상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주 노동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경우에는 한국사회가 가진 부계혈통의 전통 때문에 이들이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면서 갖는 문제점들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경우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대안 모색이 이주민사업의 큰 틀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근로를 목적으로 한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도 국내 노동력의 대체로서가 아니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들을 이들의 거주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거주 기간이 짧은 시기에는 한국에 적응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들이 필요하므로, 한글교실, 요리교실, 한국전통 교육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오랫동안 거주한 이들에게는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국사회와 다른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다문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100만 명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이주민들을 ‘도와주어야 할 노동자’나 ‘한국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 혹은 ‘국제결혼을 하였지만 적응이 힘든 이주여성’의 범주에서 바라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생활인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호’와 ‘도움’이라는 것은 이들과 우리 사이를 여전히 중간 지대 없이 둘로 갈라놓고 이주민을 타자로 배제하는 분리적 사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민을 도움이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이웃’으로 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의 정책들은 그와 같은 취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유진,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제4권 2호, 1999, pp.61-80.
- 김종철, “충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현황 및 지원대책,” 『아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현황과 정책 간담회』자료, 2006.
-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2006.
-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2005.
- 이금연,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대전포럼(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2003.
-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평등과 연대를 향해」, 충남여성개발원, 2003.
- 이주·여성인권연대 「국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족의 문제와 대책」, 2001.
- 위훈(안양전진상 복지관 이주여성센터 위훈),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2003년 6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2003.
- 전정애·표갑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지원대책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1집, 2007, p.96정기선 외.
-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 정은희,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제13권 제3호, 2004, pp33-52.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숍」, 2003.
- 한국염,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원원전락은 가능한가?”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정책 “다시보기”」자료집, 2006.

한·미 FTA체결에 따른 충남농업의 대응방안

신동호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서론

금번 체결된 한·미 FTA는 상품·투자·서비스·경쟁·지재권·무역구제·노동·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체결은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미국시장에서 우리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온 재화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산업의 경우 재화의 생산비용 절감과 함께 가격하락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 교역장벽의 철폐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생산재화의 수요를 대체시켜 국내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로 우리 경제는 성장이 촉진될 측면도 있고 동시에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지역경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제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경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즉, 한·미 FTA의 영향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의 경우 한·미 FTA체결로 인해 축산, 과수, 곡물, 채소, 특작 등 농업 전 분야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관세철폐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미국 농산물이 수입되면,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대체시켜 결국 농가소득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충남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며, 특히 축산 및 과수산업의 비중이 높아 관련 농가를 중심으로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한·미 FTA가 충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충남

농업의 일반현황, 농업구조 및 대미 무역구조 등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농업부문의 주요 협상결과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 비중은 1995년 28.0%에서 2005년 44.9%로 크게 증가한 반면, 1차산업의 비중은 14.1%에서 8.4%로, 3차산업은 68.5%에서 46.7%로 감소하였다. 아울러 2차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0%씩 성장한 반면, 1차산업과 3차산업은 각각 1.4%, 4.5%에 성장에 그쳤다.

II. 충남의 농업 현황

1. 일반현황

지역 내 총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충남의 산업구조를 보면 최근 10년간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1차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2차산업

이처럼 충남의 산업구조가 2, 3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 농업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충남의 농가인구는 2000년 538,718명에서 2005년 446,022명으로 연평균 3.7%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평균 -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경지면적 역시 동 기간 중 연평균 0.8%씩 감소하고 있으며,

〈표 1〉 국내 산업구조 변화

(단위: 백만원, %)

지역	산업구분	1995		2000		2005		연평균 성장률 (95~05)
		총부가가치	산업비중	총부가가치	산업비중	총부가가치	산업비중	
전국	총부가가치	438,016,770	100.0	577,970,942	100.0	645,772,047	100.0	4.0
	농림어업 1차산업	22,638,824	5.2	23,750,741	4.6	23,033,401	3.6	0.2
	제 조 업 2차산업	115,433,855	26.4	151,029,545	29.3	203,363,595	31.5	5.8
	서비스업 3차산업	299,944,091	68.5	339,877,770	66.0	419,375,051	64.9	3.4
충남	총부가가치	18,762,587	100.0	28,962,820	100.0	36,209,310	100.0	6.8
	농림어업 1차산업	2,654,037	14.1	3,157,719	12.2	3,049,486	8.4	1.4
	제 조 업 2차산업	5,252,191	28.0	10,081,660	39.1	16,257,793	44.9	12.0
	서비스업 3차산업	10,856,359	57.9	12,543,616	48.7	16,902,031	46.7	4.5

주: 2000년 기준가격

〈표 2〉 충남의 경지면적 및 고령농추이

(단위 : 명, ha, %)

구분		2000년		2005년		연평균증가율('00~'05)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농가	인 구 (A)	4,031,065	538,718	3,433,573	446,022	-3.2	-3.7
	65세이상인구(B)	876,009	119,176	999,306	134,670	2.7	2.5
고령농비중(B/A)		21.7	22.1	29.1	30.2	-	-
경지면적		1,888,765	256,838	1,824,039	249,591	-0.7	-0.8

자료 : 통계청

특히 농촌지역이 이미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는 사실로 고령농이 동 기간 중 연평균 2.5%씩 증가하는데 힘입어 그 비중이 2000년 22.1%에서 2005년 30.2%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농가소득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가소득은 2001~2005년 기간 중 연평균 8.8%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05년 현재, 충남의 농가소득은 32,215천원으로 전국평균 30,503천원보다 약 8.9%가량 높은데, 이는 경기, 제주, 경남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충남의 전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외소득 29.5%, 이전소득 11.7%, 비경상소득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충남농가의 농업소득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표 3〉 충남 농가소득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농가소득 (a=b+c+d+e)	농업소득(b)		농외소득(c)		이전소득(d)		비경상소득(e)	
		금액	금액	비율(b/a)	금액	비율(c/a)	금액	비율(d/a)	금액	비율(e/a)
2005	충 남 (A)	33,215	13,239	40.0	9,820	29.5	3,918	11.7	6,238	18.8
	전 국 (B)	30,503	11,815	38.7	9,884	32.4	4,078	13.4	4,725	15.5
	A/B(%)	108.9	112.0	103.3	99.4	91.0	96.1	87.3	132.0	121.3
2001	충 남 (A)	23,671	11,453	48.4	7,353	31.1	4,865	20.5	n.a	n.a
	전 국 (B)	23,906	11,266	47.1	7,829	32.7	4,811	20.1	n.a	n.a
	A/B(%)	99.0	101.7	102.7	93.9	95.1	101.2	101.9	n.a	n.a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5년 현재, 품목별 비중이 가장 높은 농업부문은 축산업으로 전국대비 16.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곡물 15.4%, 과일 9.9%, 채소

및 특작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육두수 및 생산량 비중을 감안할 때 일부 품목은 전국적으로도 충남지역이 주산지인 것으로

〈표 4〉 전국 및 충남 농축산물 생산량 및 사육두수 현황

(단위: 두, M/T, Ton)

구 분		전 국	충 남	전국대비 비중(%)
축산	쇠 고 기	1,818,549	236,999	13.0
	돼 지 고 기	8,961,505	1,636,243	18.3
	닭 고 기	109,627,646	18,414,205	16.8
	낙 농	478,865	77,569	16.2
	소 계	120,886,565	20,365,016	16.8
과일	사 과	367,517	38,989	10.6
	배	443,265	105,457	23.8
	포 도	381,436	42,163	11.1
	감 굴	637,961	-	0.0
	복 승 아	223,701	16,257	7.3
	소 계	2,053,880	202,866	9.9
곡물	대 두	183,338	15,477	8.4
	감 자	178,833	77,246	43.2
	보 리	118,313	1,231	1.0
	맥 주 보 리	74,494	-	0.0
	팥	5,575	263	4.7
	메 밀	2,243	17	0.8
	녹 두	1,482	68	4.6
	옥 수 수	73,470	3,825	5.2
	소 계	637,748	98,127	15.4
채소 및 특작	양 파	1,023,331	15,894	1.6
	고 추	395,293	33,491	8.5
	마 늘	374,980	30,214	8.1
	인 삼	14,561	2,761	19.0
	토 마 토	438,991	72,456	16.5
	팔 기	201,995	49,012	24.3
	땅 콩	6,604	1,097	16.6
	소 계	2,455,755	204,925	8.3

자료: 통계청 및 농림부

나타났는데, 과일 및 특작물의 경우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딸기, 배는 전국 2위에 해당하며, 고추, 사과, 포도는 전국 4위, 마늘은 전국 5위를 기록하였으며, 돼지와 한우는 사육두수 기준으로 각각 전국 2, 3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품목 중 특히,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실류와 한우, 돼지 등의 축종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전망됨에 따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 대미무역구조

충남 농산물 전체 수출액은 2001년 약 1.2억\$에서 2006년 약 1.6억\$로 연평균 5.6%씩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대미 수출액 역시 동 기간 중 연평균 11.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 전체농산물 수출액 중에서 대미수출액 비중은 2001년 18.8%에서 2006년 25.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충남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임을

가리킨다.

2005년 현재,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출동향을 보면 충남의 전체수출액 103백만\$ 중 인삼이 65.5%에 해당하는 67백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일 21백만\$(20.0%), 화훼 8백만\$(7.5%), 김치 4백만\$(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대일 수출액이 전체수출액의 23.3%에 해당하는 24백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22백만\$(21.8%), 중국 10백만\$(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남의 수출품목은 인삼, 과일, 화훼, 김치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국도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등 소수의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취약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미수출의 경우 대미 전체수출액 22백만\$ 중 인삼이 55.8%에 해당하는 13백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과일 7백만\$(32.1%), 화훼

〈표 5〉 충남 농산물 대미수출 비중 추이

(단위:백만\$,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증가율 (‘01~’06)
미국(A)	22	20	17	22	32	39	11.8
전체(B)	119	101	84	116	122	156	5.6
A/B(%)	18.8	19.6	20.2	19.2	26.0	25.0	-

자료 :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표 6〉 충남 주요 농산물의 국가별 품목별 수출실적(2005년)

(단위:천\$, %)

구분	일본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기타	합계
채소	1,851	167	0	697	6	2,721
김치	3,645	439	0	70	191	4,345
과일	34	7,191	242	13,128	75	20,670
화훼	1,830	2,103	3,722	69	0	7,724
인삼	16,633	12,508	5,642	31,882	778	67,443
합계	23,993 (23.3%)	22,408 (21.8%)	9,606 (9.3%)	45,846 (44.6%)	1,050 (1.0%)	102,903 (100.0%)

자료: 충남도청 농정과

2백만\$(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삼의 경우, 미국은 기존 미국산 화기삼의 가격경쟁력 외에 무공해 청정인삼이나 산양삼 등 새로운 개념의 인삼을 생산하여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며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향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특정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품목을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품목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축산의 경우 2005년도 충남의 수출실적은 삼계닭 14천\$에 그쳐 농산물의 수출 규모와 비교할 때 무시할 만한 수준인데, 이는 축산물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농산물보다 낮기 때문이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축산물의 경우 북한(금강산 관광)이나 이라크(파병 군납용)를 제외하고는 수출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Ⅲ. 한·미 FTA와 충남 농업경제

1. 지역관점의 주요협상 결과

농업부문의 주요협상 결과를 보면, 우선 쌀 양허제외를 관철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터 제공, 관세철폐 장기화, 계절관세, 셰이프 가드 도입 등 품목별 민감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쌀 및 관련제품은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민감품목 및 고관세 적용품목은 관세철폐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요인을 농산물 셰이프 가드를 도입하여 완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민감품목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급증 시 농산물 특별셰이프 가드를 적용하고, 아울러 15년 이상의 장기

〈표 7〉 농업부문 한·미 FTA 협상결과

주요업종	품 목	국내 관세율(%)	양 허 내 용
축 산	쇠 고 기	40	15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 가드
	돼지고기(냉장)	25	10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 가드 (냉동육은 2014.1.1자로 철폐)
	닭고기(냉동)	20	12년 관세철폐
과 일	사 과	45	후지 : 20년 관세철폐, 23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 10년 관세철폐
	배	45	아시안 품종 : 20년 관세철폐 기타 : 10년 관세철폐
	포 도	45	수확기 : 17년 철폐 비수확기 : 5년간 철폐
	복 승 아	45	10년 관세철폐
곡 물	대 두	487	25천톤, 3%
	감 자	304	7~15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 가드
	보 리	5	
	옥 수 수	5	
	쌀		관세철폐 대상 제외
채 소 및 특 작	양 파	50	15년 관세철폐, 18년 세이프 가드
	고 추	50	
	마 늘	50	
	토 마 토	45	종류별 즉시~15년 관세철폐
	딸 기	45	
	인 삼	222.8 ~ 754.3	18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 가드
	참 깨	630	15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 가드
	땅 콩	230.5	

자료: 외교통상부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해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조정과정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품종은 관세철폐를 장기화하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상당수의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를 확보 하는 등 당초 예상되었던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협상이전에 예측되었던 것 보다는 그 피해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국내 농산물의 경우 평년의 5%만 과잉 생산되어도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부 농가의 경우 채소류 같은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한·미 FTA체결이 충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체결로 인한 농업피해는 충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지역 내 총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충남의 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4%로 전국 평균인 3.6%보다 약 2.5배가량 높을 뿐만 아니라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 역시 전국 평균인 8.1%보다 약 3배나 높은 24.1%에 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에 따른 충남농업의 피해는 다음과 같다. 생산액 기준으로 그 피해액은 연평균 약 1,0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피해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축산업으로 생산액 감소규모가 연평균 약 710억에 달하며, 다음으로 과일 약 163억원, 곡물 약 114억, 채소 및 특작 약 34억원 등의 순으로 추정된다.¹⁾

연평균 생산액 감소규모를 품목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부문 중 쇠고기의 생산액 감소규모가 연평균 약 288억원으로 가장 크며, 돼지고기 약 247억, 닭고기 약 119억, 낙농 약 56억원 등의 순으로 추정된다. 둘째, 과일부문에서는 연평균 사과 약 64억, 배와 포도 약 46억, 복숭아 약 7억원 등의 순으로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셋째, 곡물부문에서는 대두의 피해가 가장 커 연평균 약 92억원 가량의 생산액감소가 예상되나, 감자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피해는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채소 및 특작부문에서는 인삼의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약 10억원으로 가장 크며, 딸기 약 8억, 토마토 약 7억원, 고추 약 4억원 등의 순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상의 피해예상규모는 분석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고 추정된 결과이므로 실제 농업부문의 한·미 FTA 협상결과를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쇠고기, 감귤, 고추, 마늘, 양파(이상 15년), 인삼(18년), 배, 사과(이상 20년), 포도(17년)등 민감 품목들이 대부분 장기철폐로 타결이 되어 실제 피해액은 상기 결과를 하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1) 농촌경제연구원(2006)은 일반균형연산모형을 토대로 관세철폐시기에 따른 전국농업생산의 연평균 감소액을 추정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동 연구원이 제시한 전국단위의 생산감소액 중 충남지역의 농업품목별 비중(전국대비 사육두수 및 생산량비중)을 고려하여 충남의 생산감소액을 추정함

〈표 8〉 충남 농업의 주요 품목별 생산감소액 추정

(단위: 억원,%)

품목군		연평균 생산감소액	전국대비 충남지역 사육두수 및 생산량 비중(%)
축산	쇠 고 기	288.5	13.0
	돼 지 고 기	246.9	18.3
	닭 고 기	118.9	16.8
	낙 농	56.4	16.2
	소 계	710.7	—
과일	사 과	64.2	10.6
	배	46.4	23.8
	포 도	45.8	11.1
	감 꺾	0.0	0.0
	복숭아	7.1	7.3
	소 계	163.5	—
곡물	대 두	92.0	8.4
	감 자	10.8	43.2
	보 리	8.0	1.0
	맥 주 보 리	0.0	0.0
	팥	2.9	4.7
	메 밀	0.2	0.8
	녹 두	0.3	4.6
	옥 수 수	0.1	5.2
	소 계	114.2	—
채소 및 특 작	양 파	0.3	1.6
	고 추	4.4	8.5
	마 늘	2.1	8.1
	인삼	10.4	19.0
	토 마 토	7.1	16.5
	딸 기	8.0	24.3
	땅콩	2.2	16.6
	소 계	34.5	—
합 계		1,022.9	—

Ⅳ. 한·미 FTA체결과 충남 농업·농촌의 대응방안

1. 충남농업의 기본과제

1) 한·미 FTA에 대한 이해 증대

한·미 FTA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로 인한 지역별·품목별 영향에 대한 과학적·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도내 농업주체들간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하는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2)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농업·농촌 종합대책 재검토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여가와 휴식의 장 제공, 전통과 문화, 국토환경보전이라는 다면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 생명산업으로서 보전할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최고정책 관리자의

관심과 국민의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별, 시군별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협의기구 또는 대책반을 마련하여 충남 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내재적 자원에 근거한 지역경쟁력 확보

한·미 FTA로 인한 수혜업종이 전자정보 및 자동차산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충남 서북부지역과 상대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높은 여타 지역과의 경쟁력 격차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다만, 충남은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별로 지역특화산업이 선정되어 있고, 이의 육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 이는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시군별로 내재적 농업·농촌자원에 근거한 지역산업정책 수립측면에서 기존의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도차원의 낙후지역 배려차원에서 도 조례로 마련된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하다.

2. 충남 농업·농촌의 대응방안

1) 구조조정 방안

◆ 맞춤형 영농구조 개선

충남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다. 다만,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은 우선 개별 농가별로 경영주체, 소득규모, 생산품목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한 이후, 이를 토대로 농가유형별로 영농형편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전업농에 대해서는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되, 은퇴·경작포기·파산신청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를 인수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업구조조정을 유도한다.

◆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화품목의

발굴 및 육성

충남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계수가 높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작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해 할 것이다. 지역농업의 핵심 작목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시장수요 및 소비자 선호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후, 지역의 입지조건과 비교우위성을 검토하여 유망작목을 발굴하되, 이를 지역특산물로 한정하지 말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 농산물 시장 전체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은 수도권과 대전이라는 거대 소비시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근교농업에 유리하며, 관련 시설·엽근채류 품목을 발굴·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 산·학·관·연 연계에 의한

농업 경영체의 지원

농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종개발, 재배기술, 규모화, 시설현대화, 생력화, 수확 후 관리기술,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정부가 부담하기 보다는 산학관연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역할 및 기능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규모화와 노동투입비용절감을 위해 농작업의 공동화나 기계화를 추진하는 등 생력화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품 혁신지원으로 새로운 품종개발, 틈새시장 개척, 고부가가치형 농산물 가공, 수확후 관리기술 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마케팅 혁신 지원으로서 농산물 전자상거래, 생산과 판매를 연계한 수직계열화 방향으로 농업경영구조를 전환해야하며, 끝으로 산업 융복합화 차원에서 농촌관광과 특산물 판매 등을 상호연계하는 6차 산업화를 도모해야 한다.

2) 단일 특화 브랜드 집중육성을 통한 명품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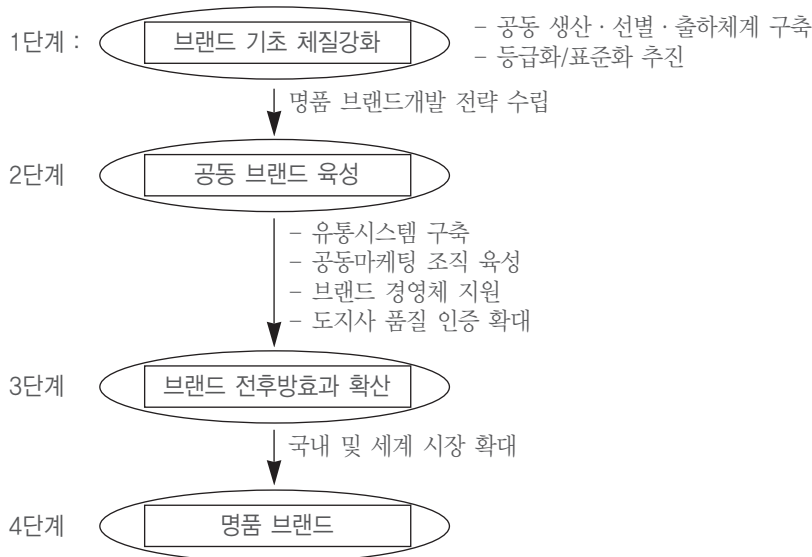
도 및 시·군, 농협, 농민들과 함께 합심하여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과도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신선도 유지 등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농산물 수출의 확대

무엇보다도 충남 농산물 수출 1위인 인삼의

‘수출주력 상품화’가 시급하며, 이미 낮은 관세로 개방되어 있고 전업화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화훼, 시설채소, 김치 등도 수출 상품화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 농산물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농업단지의 규모화·전문화를 도모하여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컨설팅 실시, 전담 지도사 배치, 재배지 검역서비스 제공, 물류비와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해외시장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시키고 국제 농산물박람회나 식품전시회 등의 참가방식을 개선하여 충남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한다. 셋째, 산지



[그림 1] 도내 농산물 명품 브랜드 구축 단계

의 예냉·선별·포장·수송 등 수출물류 시스템을 일관적으로 연계하여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넷째,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관련 제도인 농산물 수출보험, 관세환급, 자조금 제도 등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끝으로, 농산물 수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과수, 축산 등 피해부문의 지원

한·칠 FTA체결 이후 과수부문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식량작물이나 축산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품목 중심의 개별적, 임시방편적 지원에 불과하므로 도 차원에서 과수 및 축산부문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도입을 중앙정부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축산 및 과수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과 품목에 대해서 도차원의 별도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재정지원은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품목별 경쟁력 강화

콩, 보리 등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대체작목

으로 전환하고,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부문은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내산 존립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쇠고기는 우수브랜드 육성 및 고급육 생산기술의 확대를 통해 품질고급화를 꾀함과 동시에 쇠고기 이력추적사업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시켜야 한다. 둘째, 돼지는 환·배기 및 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 및 자연순환농업 정착으로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여 질병억제와 생산성향상을 병행한다. 셋째, 닭, 오리는 포장 시 작업장 명칭을 표시하고 사육단계에서 HACCP를 도입하는 등 유통체계 개선으로 신선도와 위생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낙농은 조사료 유통시설지원 등 생산기반을 확대시켜 생산성 향상 및 관리비를 절감을 도모한다. 다섯째, 과일류는 당도 표시기준 마련과 생산·재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제고한다. 여섯째, 채소류는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우량품종 보급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일곱째, 곡물, 임산물 등은 생산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함과 동시에 친환경·안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을 개발·보급한다.

끝으로 인삼은 미국산 화기삼(花旗蔘)과

품질차이 때문에 수입이 급증할 우려는 적으나, 가공원료, 인삼엑기스 형태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므로 생산, 유통계열 확대, 지리적 표

시제 도입,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국내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현대화된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표 9〉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품 목		대 책
축산	쇠 고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고급육 생산기술 확대로 품질향상 도모 • 충남도 자체브랜드인 '토바우(Tobawoo)'의 브랜드 파워강화 • 모든 한우에 이력추적제 적용
	돼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현대화(질병감염 및 폐사율을 억제) •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닭 · 오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도입 - 생산·유통·소비 전단계에 걸쳐 신선도 및 위생수준 향상 - 소비자 신뢰도 제고
원예	과 실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재배시설의 현대화 품질경쟁력을 제고 - 사과(키 낮은 사과원), 배·복숭아(밀식과원), 포도(비가림시설) 확대 • 수출형 전업농 육성 및 수출전문단지 조성
	채 소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기술개발 및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 - 고추는 기계화에 적합한 신제품 개발 - 마늘은 중구 갱신을 향상 • 대단위 주산지 조성 및 산지유통시스템 구축
	인 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유통계열 확대, 지리적 표시제도입, 안정성 확보 • 신제품 개발 및 생산·유통시설이 현대화된 수출전문단지조성
곡물·임산물	콩 · 감 자	• 생산우수단지 조성 및 브랜드 경영체 육성
	호 두 · 밤	• 생산기반 정비추진 및 친환경·안전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참 고 문 헌

- 권용대, 한·미 FTA 협상이후 충남농업의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정책포럼, 2007.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년도.
 박경·신동호, 한·미 FTA에 따른 충남지역경제 효과와 대책, 충남발전연구원, 2006.
 산업자원부, 한·미 FTA의 산업영향 평가 및 발전전략, 2007.
 신동호, 한·미 FTA가 충남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7.
 이정환, 한·미 FTA의 영향과 대책의 방향, GSNI Report, 2007.
 외교통상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결과, 2007.
 재정경제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2007.
 정부 각 부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국회 한·미 FTA특위 보고자료, 2007.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사례분석과 과제

이인배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본격적인 여가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은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농촌관광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발전의 방법으로 농촌은 도시민에게 휴식·휴양과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민은 민박, 농산물 구입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침체되어 있던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서 농촌관광을 추진하여 성공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농업·농촌이 침체되는 가운데 농촌관광이라는 새싹이 자라는 중이며, 농민들의 자각, 도시민의 여가의식 성숙,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2002년에 18개 마을, 2003년에

는 26개 마을, 2004년에는 32개 마을 등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활동 등 농촌관광의 붐을 일으켜 도농 교류에 의한 마을의 소득증대는 물론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2 ~ 2016년까지 850개소를 목표로 2006년까지 190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신규로 84개 마을을 조성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추세이다. 또한, 2004년부터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는 별도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단위 추진체계의 정비를 기반으로 권역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은 2002년부터 9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단위의 고유한 농촌 전통테마를 발굴·보존하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999년 5월부터 ‘팜스테이(farm stay)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까지 243개 마을을 지정하였고,

참여농가는 총 3,421가구이며, 연간 2백만 명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다(강신겸, 2007).

이처럼 농촌관광을 농업·농촌진흥을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지역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욕적인 시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농촌관광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영형 농촌관광, 지역내 산업의 복합화, 네트워크의 형성과 마케팅 등 농촌 스스로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농촌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농협과 학계, 기업체, 한국농촌공사 및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서도 많은 연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에 대한 정부 및 민간, 학계, 관련기관 등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고, 농촌관광에서 산학협력의 사례 분석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농촌관광의 산학협력 정책을 추진하는데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농촌관광의 동향과 제도 변화

1. 농촌관광의 개념과 특성

1) 농촌관광의 개념

농촌관광(Green Tourism)은 ‘자연이 풍부한 농·산·어촌 지역에 있어서 그 자연, 문화, 사람들간의 교류를 통하여 즐기는 체재형의 여가활동’을 의미하며, ‘농촌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여유 있는 휴가’라고 정의된다. 농림부에서는 ‘농·산·어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하는 도시민과 농·산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을 농촌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촌관광의 개념은 각 나라마다 다르며, 각 나라의 농촌환경과 자연자원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에서는 ‘농촌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최소의 투자로 농촌지역을 도시민의 관광 수요에 대응케 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박정운, 1999).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산·어촌에서 그 지역의 자연, 문화, 인간적인 만남으로서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조록환, 2003).

한국관광공사(1996)에서 정의하는 농촌관광은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업 전시관, 자연학습관, 지역특

산물 판매, 체육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거나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신겸(2002)은 농촌관광은 '도시민들이 농촌다움이 보존된 농촌에 머물면서 그곳의 생활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는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농촌관광은 '농·산·어촌의 자연환경과 그 지역의 특산물, 전통문화생활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휴식과 체험 등의 여가활동 및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농·산·어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이라 할 수 있다.

2) 국내 농촌관광의 특성

농촌관광 관련 사업이 정부의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관광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마을단위 기반 정비사업이라는 큰 원칙에서는 비슷하지만 각 부처의 장점을 살려 나름대로 사업을 차별화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마을단위를 개발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의 연계성이 높은 마을단위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별 농업인 또는 경영자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취약지구개발계획, 취약구

조 개선 기본계획, 문화마을조성계획 등이 대부분 정주기반을 정비하는 계획이었으나 마을단위 농촌관광 개발 사업은 기존 마을단위 정비 사업을 관광 목적에 맞게 변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 지원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여가·체험·교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마을 여건에 따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농·림업, 역사, 문화, 자연생태 등 특색있는 메뉴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개발·보급토록 하고 있다. 국내외 실천사례에서 정부·지자체 사업, 시책 및 금융·세제 활용, 마을 또는 지역경영, 특히 경영기법, 리더십 등의 경영교육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 점은 진일보한 면이 있다.

셋째, 시·군 차원에서 타 분야 시책·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유도하여 마을가꾸기를 추진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생활환경 정비 및 축제 등 지역의 주요 이벤트와의 연계도 강조하고 있으며, 관광활동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가공·판매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연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농업·농촌체험·교류활동의 소득사업화를 위한 소규모 2차(가공), 3차(판매) 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넷째, 마을(지역)에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중앙단위에서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이른바 공모방식을 취함으로써, 일선 자치단체 내지는 마을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하드웨어는 사업모델 제시를 위한 시범마을 조성을 중심으로 유관사업을 연계하되 개인이 아니라 지역이나 마을, 지자체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를 일괄 보조(포괄 보조)함으로써 마을 특성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이나 일선 시·군에 재량권을 대폭 부여한 것도 큰 변화이다. 지원요건은 마을 내, 지역 내 합의와 파급효과를 중시한다.

다섯째, 이 정책 사업들은 추진 방식과 사업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여러 부처가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 부처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 자율에 의한 사업추진을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농촌의 물리적인 시설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관광소득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가속화시키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각 부처별로 농촌관광과 관련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모든 정책이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농촌관

광이 활성화되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박윤희,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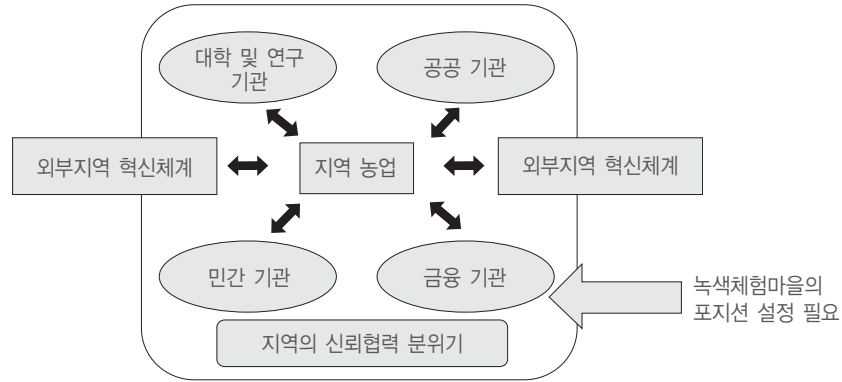
2. 농촌관광과 지역협력체계

1) 농업과 지역혁신

지역농업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농업 혁신활동이 일정 지역을 단위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특정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통해 사업전개,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정부교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지역농업 혁신시스템은 대체로 다음의 그림과 같은 지역 구성체의 유기적 관계를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클러스터의 성공조건으로서는 전문화된 생산체계, 지역의 생산 및 학습네트워크, 적절한 연구개발 및 교육기관의 존재, 양질의 인적자본(문제해결 역량 소지자), 기업과 공공기구 사이의 협력, 혁신성 등이다.

결국 이들 성공조건은 최적 조합을 통한 녹색체험마을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조직리더가 자연스럽게 육성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성공요소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혁신 요소의 성격 규명과 역할, 사업의 성격 규명과 지원체계, 조직원과



[그림 1] 지역농업 혁신시스템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녹색체험마을 진흥을 위한 조직리더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조직리더의 교육방안과 기구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2) 농업인 교육훈련의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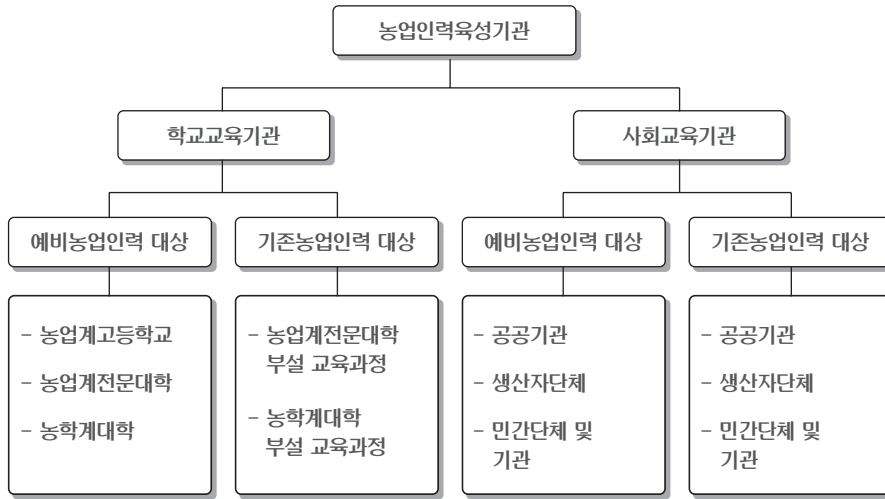
농업교육의 주안점은 농업경영교육, 전문기술교육 등을 통해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어린이, 농고생 등 농업 예비인력에 대한 농업·농촌 비전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을 이끄는 농업 저변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기존 농업인력 육성은 학교 교육기관과 사회 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은 농학계 대학 및 전문대학의 부설 교육원, 사회교육은 주로 민간위탁 교육기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등 공공기관에서도 예비 농업인력과 기존 농업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다시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크게 교육전문기관, 일반교육단체 및 환경단체로 구분되며, 환경단체는 다시 생산자 교육단체와 소비자 교육단체로 재분류할 수 있다. 교육훈련 내용을 보면, 기존 교육의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지식농업 실현을 위한 지식·기술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 지도자과정 등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세부추진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의 우리 농업을 주도할



[그림 2] 농업인력 육성기관의 분류(교육대상별)

자료 : 박문호, 농업인 민간위탁교육 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지식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식농업 인력육성 교육과정」 확대 및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자영농고생 선진농장 실습교육과 농업인 신지식기술 현장체험교육 및 세미나과정을 개설하였다.

둘째, 창업 예비농 및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농정시책 및 전문분야별 기술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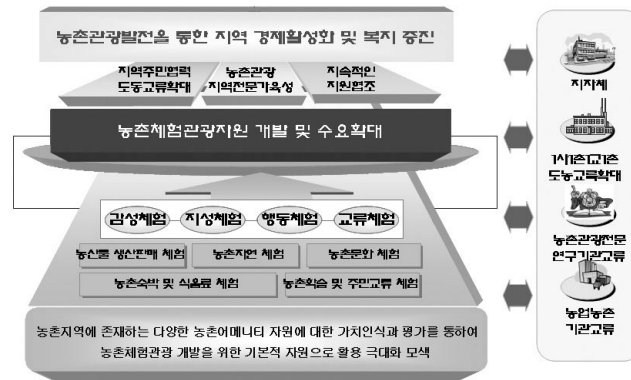
셋째,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 및 성숙단계의 교육 강화 차원으로 정보화,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실시, 영농학생 전진대회 수상자 해외 연수과정 등을 신설하였다.

넷째, 농외소득 증대, 도농교류확대 및 농업·농촌 이해 증진을 위한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설하였다(박문호, 2001).

3) 농촌관광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농촌관광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협력과 도농교류확대, 농촌관광 지역전문가 육성, 지속적인 지원협조 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농촌체험관광자원 개발과 수요확대가 이루어진다.

농촌관광발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



[그림 3] 농촌관광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자료 : 윤유식, 홍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홍성군 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 3차 워크숍자료 재인용, 2007.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1사1촌1교1촌 도농교류 확대, 농촌관광전문 연구기관과 교류, 농업농촌기관과의 교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윤유식, 2007).

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추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특색있는’ 도시와 농·산·어촌을 자치단체, 주민,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재설계, 재창조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지역은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인적·물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내 운영시스템 구비와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 하는 지역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자치단체가 개성있고 특색있는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살기좋은 지역 기본모델로 참조할 수 있도록 지역만들기 테마별로 다양한 모델유형을 개발하였다. 2006년도에는 지역의 수요가 높은 9개 기본모델을 우선 개발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래 개별부처별로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인 지역모델 중 9개 기본모델로 체계화 하였다. 자치단체에서는 9개 기본모델과 기본모델별 특화형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지역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서 주체는 마을주민, 정부, 시민단체, 대학, 기업, 언론 등을 포함한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반드시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표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9개 사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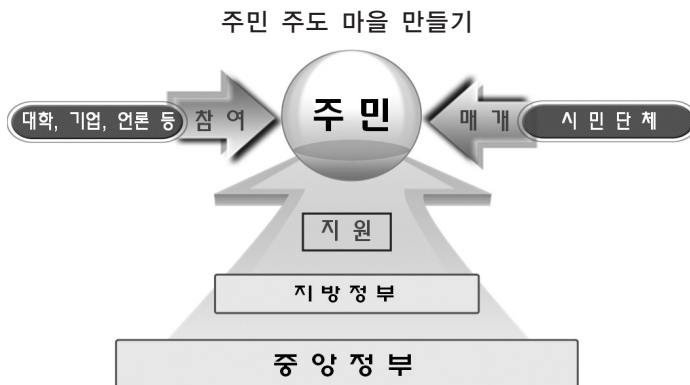
기본모델	주요 내용	특화형 예시
산업형	• 지역소재 산업 지원을 통한 마을조성·발전	• 향토산업형, 외부기업유치형 등
교육형	• 교육특화를 통한 커뮤니티 강화	• 학교교육형, 평생학습형 등
정보형	• 지역에 풍부한 정보인프라 구축	• 정보화마을형, U-village형 등
생태형	• 양질의 환경 및 생태를 자원으로 활용	• 수변공간형, 녹색교통형 등
전통형	•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활용	• 전통마을형, 전통시장형 등
문화형	•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지역의 특화발전	• 문화예술지향형, 문화산업창출형 등
관광형	•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 스포츠형, 가족리조트형 등
건강형	• 건강시설 및 문화조성을 통한 지역 재창조	• 건강장수형, 휴양형
가족형	• 보육, 요양, 돌봄 등을 중심으로 한 여건조성	• 돌봄네트워크형 등

자료 : 행정자치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치단체 우수지역 선정 추진계획, 2006.

한다. 주민주도의 지역 만들기만이 지속성을 담보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원자로서 참여하고, 시민단체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지니며, 대학,

기업, 언론 등은 전문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행정자치부, 200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유형별 계획에서 관광형 지역 만들기는 지역주민이 주도하



[그림 4]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 바람직한 민관협력을 위한 개념도

자료 : 행정자치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연구』보고서,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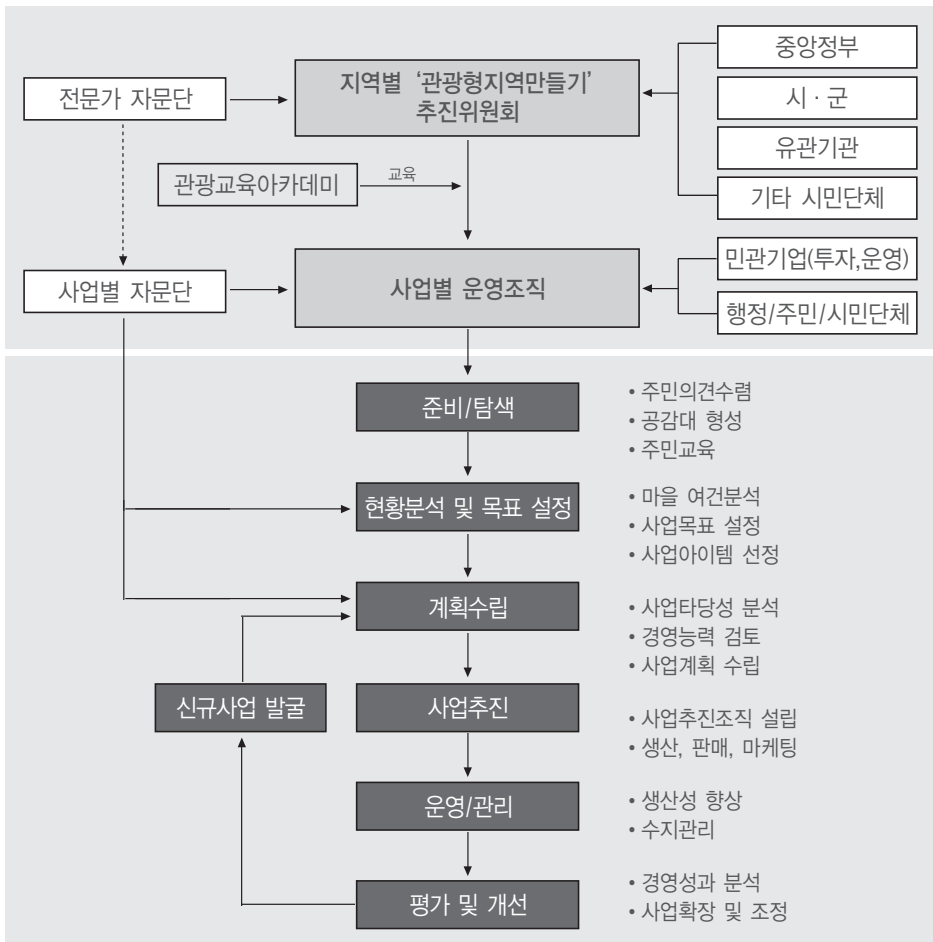
〈표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방식

구 분	목적 및 구성
정부와 민간부문간 협력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협력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민간단체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안내해설자, 관리운영인력 등) 교육 및 훈련 - 조사 및 연구, 홍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지역기업 상공인과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쉽, 재정지원(스폰서십) - 민관합동(제3섹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분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휴 :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전략적 제휴 - 파트너쉽 : 참여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부여 - 대표집단 : 주민, 환경단체, 관련기업 등 조직의 대표자 모임 - 공공부분주도형 : 공공이 주도하여 민간부문 조직화 - 독립기관/조직 : 정부+기업, 민간단체가 참여한 독자적 개발, 운영조직의 성격, 민간부문간의 연대 속에서 개발, 지도, 조정, 자원조달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자본동원능력을 보완해 주는 수단으로써 적정한 정부 지원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중심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단 과거처럼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성과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 지역주민이 부족한 기술과 정보 및 재정지원을 위해 정부가 정책지원을 통해 개입해야 하며, 특히 인프라와 관광시설 개발을 위한 직접보조와 융자지원 확대 - 외부 자본유치에 무조건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개발자본을 유치하고 주민과 정부 및 민간 자본이 공동으로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는 관광개발 방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및 시·도 사업의 선정 체계, 사업추진과정(process), 예산집행 및 정산 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 -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도모 - 사업시행체계를 '선지원 후계획'에서 '선계획 후지원' 방식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협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공동관심사를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표출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참여자 또는 기관의 역할과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 자매결연, 회원제 사업, 이벤트 개최 등 도시소비자 및 각종 단체와 도농교류 네트워크를 형성 -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지역문화, 마케팅, 서비스, 회계, 시설관리 등에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

자료 : 행정자치부, 살기좋은 지역 기본 모델 요약 정리, 2006.

고 행정은 지원하는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계획과정 및 경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한다. 관광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민간 기업과 개인, 주민조합, 제3섹터 기업 등의 참

여가 있다. 대규모 관광시설인 경우 별도의 지역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 만들기 차원에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그림 5] 추진체계 및 기구

자료 : 행정자치부, 살기좋은 지역 기본 모델, 2006.

주민조직, 협의체 또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관광형 지역만들기 관련 재원은 공공투자 또는 민간투자로 조달하며 이에 적합한 운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공공투자인 경우 행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관광 사업을 전담하여 기획·운영·관리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시설 조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공에서 투자하여 설치하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공설민영(公設民營)사업을 활성화하고 운영을 담당할 민간단체(NPO)를 육성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행정자치부, 2006).

Ⅲ. 농촌관광을 위한 교육 및 산학협력 사례 분석

1. 농촌관광의 지원제도

농촌관광을 지원하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앙의 각 행정부서별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향후 지역활성화 혹은 지역의 환경변화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각 행정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특히, 농림부 농촌진흥과에서는 녹색체험마

〈표 3〉 부처별 농촌관광 관련 추진정책

행정부서	추진내용
농림부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관광휴양 자원개발, 문화마을 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농진청)
행자부	아름마을 가꾸기,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마을정비, 빈집정비, 정보화마을 추진, 오지/도서 개발, 소도읍개발 사업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환경부	생태마을
문화관광부	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문화재청	전통민속마을, 전통문화마을, 유교문화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녹색체험마을 진흥을 위한 조직리더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을 지원을 위한 녹색체험마을 정책 총괄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체험마을 정책 입안 및

정책수립, R&D예산, 예산 및 사업시행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녹색체험마을 사업조정 및 투융자 계획 수립, 타 농림사업의 연계지원과

〈표 4〉 녹색체험마을 운용체계

구 분	위원회 및 법인	목적 및 구성
녹색체험마을 지원·검토 위원회	농산업 녹색체험 마을 지원 및 검토 중앙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녹색체험마을을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조정, 예산·제도의 심의·의결을 행함 • 구성 : 산·학·연·관 관련자 10명 수준으로 운영
	녹색체험마을 시·도 지원 및 검토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시·도 지역농업 녹색체험마을 클러스터의 발전방향 수립 및 시·군별 녹색체험마을 클러스터간의 사업조정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마을과 군 등의 지역경계를 넘어선 자연경관 등의 이용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 구성 : 산·학·관·연 관련자 10명 수준으로 구성
	농산업 녹색체험 마을 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의 임무는 실제 사업의 실시 주체로서 마을 단위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내·외 참여 유도 및 파트너십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녹색체험마을 사업운영을 총괄
	녹색체험마을 협회(추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기능을 추구함. 즉, 사업에 대한 행정의 대행과 교육 등의 기획 및 시행 등을 실시
조직형태	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1 : 사단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 형태2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농림사업의 시행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으나 설립의 주체가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지칭 • 형태3 : 공기업형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녹색체험마을 사업의 참여주체를 네트워크화하고 이들의 자발적 활동을 위한 종합지원 창구역할을 수행
	비 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1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위원회형 녹색체험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기존의 농정심의회와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사업의 기능을 수행 • 형태2 : 참여주체가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협의회형 - 지자체 및 해당 산업 관련 단체(기관)장과 지역내·외의 관련 연구기관, 대학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적 모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녹색체험마을 진흥을 위한 조직리더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정리, 2006.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셋째, 녹색체험마을 지원·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는 녹색체험마을과 관련된 상위정책의 심의 및 시·도 지원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상의 수행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농업 녹색체험마을 정책총괄을 위한 과단위에서의 별도조직과 전담지원을 위한 「지역농업녹색체험마을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시·도 및 마을단위의 정책추진자 및 사업자들이 신속하고 빠른 정보공유와 업무의 추진을 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방대한 지방조직에 대한 활용과 지금까지 축적되어져 온 노하우를 이용하여 녹색체험마을을 지원한다. 특히 R&D 부문에 대한 총괄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경영정보관실에서 녹색체험마을 사업의 연구관을 임명하고 특성화대학 커리큘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정책과 클러스터 정책 및 녹색체험마을연계를 통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농정에 있어서의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녹색체험마을 육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녹색체험마을 진흥을 위한 구성주체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그리고 자연경관 및 체험여행 코스개발에 있어서 인근 시·군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체험마을 지원 및 검토 중앙위원회(농촌진흥청)에서는 사업선정, 제도개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녹색체험마을 시·도 지원 및 검토위원회를 두고 이는 관내 녹색체험마을 사업계획의 심의, 지원과 우선순위의 조정 등을 수행하면서 하부조직으로서 녹색체험마을 사업단을 운영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을 담당한다. 이를 추진하는 정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2. 충청권 농촌관광을 위한 교육과 산학협력사업 사례

1) 충남 청양군 그린투어 경영대학 교육사업

청양군은 농촌관광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인력자원의 발굴과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농촌관광 마을가꾸기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및 도시민들의 관광욕구 충족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실시한 청양군 그린투어 경영대학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성격 : 농촌관광 지도자 양성과정
- 주최·주관 : 청양군
- 교육장소 : 청양군내 군포 청소년수련원

- 교육인원 : 50명(대상 : 희망농업인)
- 교육기간 : 2007. 11. 6 ~ 11. 16
(기간중 7일간)
- 교육과목 : 이론 및 현장학습, 분임토의
- 교육생 모집 : 읍·면장 추천에 의한 선발과
모집정원 초과시 청양군 선발
- 교육대상자 선발인원 : 50명
- 교육지원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그린-컴
시범마을 지원 및 희망(기 신청대상) 지역민
 - 농촌관광에 관심이 있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 선발방법(지원자가 모집정원 초과 시)
 - 교육지원자가 정원초과시 각마을 지도자
: 1순위 리장, 2순위 지도자, 부녀회장
 - 농촌마을별 3명이내 선발원칙
 - 위의 기준에 의해서도 정원 초과시 접수
선착순 선발
- 수료증 발급 기준
 - 총수업시간의 80%이상 참석자
 - 수료증은 교육주관 기관장 명의의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2) 충남 청양군 상갑리 주민과 마을리더 교육 및 견학

상갑리는 마을리더 및 주민의 농촌관광
의식 변화를 위하여 수차례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
지 마을리더가 14회, 마을지역주민이 16회를
실시하였다. 이는 농촌체험관광에 있어서 리
더와 주민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하여 시사해 준다.

상갑리는 농촌관광마을로서 활성화를 위하
여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삼성경제연구
소, 농촌진흥청, 청양군,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협중앙회, 농림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농협, 농촌관광 유관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이 주관·주최하는 다양한 교육과 선진지역
견학을 추진하였다(이인배 외, 2005).

3) 한국관광공사 충청권 사업단의 충청그린 프로젝트 사례

한국관광공사 충청권 사업단에서는 1.5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범충청권 산·학 협력사업
으로 지역 관광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충청
그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농촌
관광수용 태세 개선등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관광혁신기반을 조
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스트
FTA’ 시대, 농촌의 新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산
업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을 제고하
기 위하여 충청그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충청그린 프로젝트는 타운홈피 운영을 통한

〈표 5〉 상갑리 마을리더 및 주민의 농촌관광 관련 교육이수 및 선진지 견학 현황(2003년~2005년)

일 시	장 소	내 용	비 고(주관)
2003. 2.11~12	남제주군농업기술센터 어망아방 잔치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연찬	농촌진흥청
5.16	유성 스파피아호텔	- 한국문화와 농촌관광발전 및 전략 세미나	농촌생활연구소
9.24	서울 AT센터	-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 심포지엄	농촌생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9.29~10.1	농촌생활연구소	- 농업인녹색관광과정 교육	농촌생활연구소
11.4~5	경주 세심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자 연찬	농촌진흥청
12.17~18	농촌진흥청	- 농촌전통테마마을 홈페이지 운영	농촌진흥청
2004. 2.10~14	일본	- 농촌체험관광 해외연수	청양군
2.24~5.4(12주)	영농기술자협회 교육회관, 현지	- 녹색관광 최고지도자과정	전국농업기술자협회
3.30~31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옛날솜씨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평가 - 농촌다운마을가꾸기 실천전략 - 독일 산악마을의 지역개발사례 - 옛날솜씨마을 체험프로그램참여	농촌진흥청
7.8	농협중앙회 충남본부	- 팜스테이마을 친환경농업 실천협의	농협중앙회
2005.5월	농협중앙회 교육원(안성)	-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
5월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 팜스테이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 - 친환경농업 실천방안	-
9월	홍성문당마을 교육관	-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농림부
9월	농협연수원(수안보)	- 친환경 컨설팅 보고회	농협중앙회
계	총14회		

자료, 이인배 외,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5.

주최측과 참가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우수 활동팀 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가자 참여도를 제고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내용

○ 기 간 : 2007. 7. 4 ~ 8. 30

- 현장 활동

· 1차 : 7. 9(일) ~ 7. 15(일)

· 2차 : 7. 23(일) ~ 7. 29(일)

- 사업평가보고회 및 우수팀 시상식 :

9. 14(금)

○ 장 소 : 충청권내 34개 농어촌 체험마을
및 관광농원

(대전 : 1개 체험마을, 충남 : 29개
체험마을, 충북 : 4개 체험마을)

○ 주요내용

- 1.5차 산업 육성 현장 활동 : 농촌마을
수용태세 점검 및 현장 개선활동 등
- 참가자 설명회, 우수팀 시상식 및 사업
평가보고회

○ 주 최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후 원 : 충남북 농업기술원, 대전농업기술
센터, 충청관광진흥협의회, 충청
관광발전진흥협의회

○ 참가자 : 충청권 관광전공 대학생 10개대
학 216명 / 지도교수 11명(4인
1팀 * 56개팀)
(대전광역시 : 2개교 29명, 충청
남도 : 6개교 91명, 충청북도 :
2개교 96명)

○ 기타

- 참가팀별 활동내용 및 농촌마을 특색을
담은 UCC 제작 독려, 향후 농촌 체험마
을 홍보컨텐츠로 활용

- 농업기술원/기술센터 공동 마을별 현안
사업 파악 후 활동 핵심 과제 선정

- 안전관리 대책

- 참가자 전원 현장 활동기간 상해보험
가입
- 참가자 대상 설명회 시 농업기술원/기
술센터 주관 안전교육 실시
- 현장활동기간 중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수시 : 협력단, 농업기술원 공동)

충청그린 프로젝트의 개최 성과는 충청권
1.5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기반을
마련하였고, 충청권 10개 대학, 대전농업기술
센터, 충남북 농업기술원, 34개 농촌마을과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농촌관광의 중심지로서 충청권 농촌관광산
업에 경쟁력을 제고하여, 충청권 지역민의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와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의 시장활성화 촉진기반을 조성하였
다. 더불어 충청권 농촌관광의 고부가 가치화,

한국관광공사 충청권협력단

- 사업기획 및 총괄
- 참가자 모집 및 홍보
- 부대행사 기획운영
- 사후 평가

농업기술원/기술센터

- 참가자 설명회 개최 지원
- 현장 활동 지도
- 심사위원회 참가
- 현지 활동관련 안전 관리

충청관광진흥협의회

- 참여마을 추천/심의
- 홍보지원
- 기타 행정지원

[그림 6] 참여 기관별 역할분담

충청 관광홍보와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지식을 활용한 체험마을 홍보, 마케팅 아이디어 제출 -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체험마을 브랜드 개발
수용태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태세 및 안전 점검 - 현장 개선 활동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소재 발굴 및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 - 연계 관광지 답사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내용 및 성과 중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림 7] 참가자 주요 활동내용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관광전공 대학생과 현장교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농촌마을의 주요 현안사업인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따른 관광객편의시설 확충하고, 농촌관광상품유통 및 홍보지원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강화 하여 지원하고, 홍보자료 제작, 홈페이지 제작, UCC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07).

〈표 6〉 충청그린투어 프로젝트 주요 실적

구 분	실 적		비 고
참가규모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대학 - 지도교수 11명 - 학생 52개팀 207명 		
참가규모 (농촌마을)	○ 34개 마을		
현장활동 실적	농촌마을 관광수용태세 개선	372건	
	마을 홍보활동	226건	
	신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자원 발굴	231건	
	농촌마을 홍보 UCC 제작	19건	
	1사1촌 유치	1건	논산 고정리 민속마을
	대학/농촌 마을 MOU 체결	1건	우송대/당진 동물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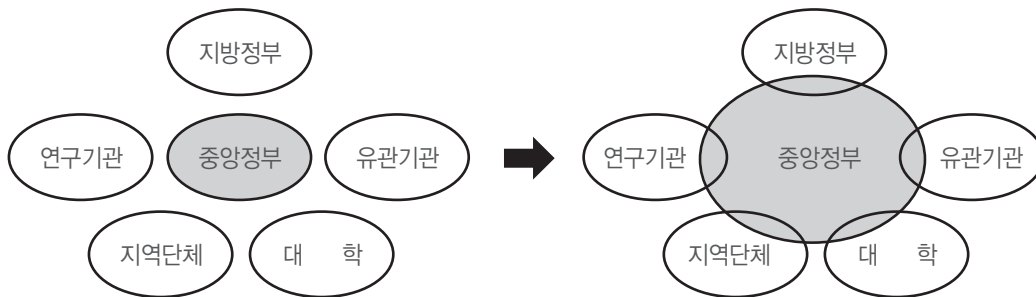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관광공사, 관광분야 대학생 역량강화사업 충청그린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2007.

Ⅳ.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의 과제

1. 농촌관광 사업의 통합적 협력 관계 시스템 구축

앞의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관광의 산학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유관기관, 지역단체, 대학 등은 각각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아래의 개념도와 같이 현재 농촌관광에서 교육과 인력양성, 도농교류, 1사1촌 자매결연, 컨설팅 등과 같은 산학협력 사업들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지역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의 통합적인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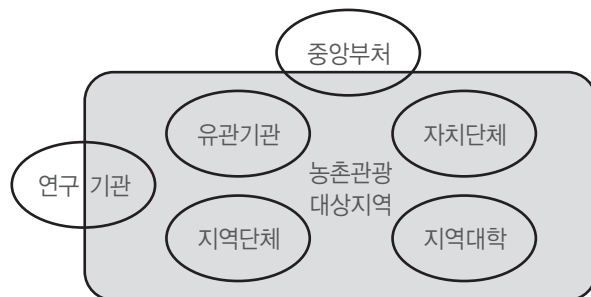
[그림 8] 농촌관광 통합협력시스템 구축 개념도

따라서 이들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산학협력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이 주체가 되든지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산학협력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농촌관광과 연계한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사업 추진

농촌관광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역의 단체나 유관기관까지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교류와 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기관들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체제 구축이 미흡한 편이다.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개념도와 같이 실질적으로 농촌관광과 연계된 지역의 모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농촌관광 대상지역내에 있는 유관기관은 더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농촌관광의



[그림 9] 농촌관광의 지역유관기관 협력 개념도

인력양성,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농촌관광인력 양성사업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사업으로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3. 참여 기관별 역할 및 기능분담과 전문가 참여 촉진

농촌관광은 결국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대학 등을 통한 협력이 중요하다.

농촌관광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자문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촉진이 필요하다.

앞의 사례연구에서 살펴 본, 이번 한국관광공사 충청권협력단의 사업과 같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협력사업이지만 한국관광공사, 농업기술원·기술센터, 충청관광진흥협의회 등이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한, 대학에서는 지도교수들이 학생들의 현장 활동 지도와 실제적인 농촌마을 방문을 통하여 활동을 점검하고, 격려하는 참여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은 ‘충청 그린 프로젝트’에 참가한 활동보고서를 심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농촌관광사업은 기관별 통합과 네트워크 구축뿐만이 아니라 기관별 역할과 기능분담,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을 때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4. 농촌관광 관련 지역 대학 인력지원의 지원체계 마련

현재까지의 농촌관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농업기술원 등의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지역의 우수인력인 지역 대학내 농촌관광 관련 학생들과 교수, 대학내 연구소 등의 참여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지역의 농촌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령화된 농촌인구 구조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내 관광 및 농촌개발과 관련된 대학의 인력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학 인력 활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도별 인적자원개발센터와 대학, 지역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농촌관광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 우수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역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농촌관광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현재 농촌관광의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는 각 시도와 시군별 자치단체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여 외부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하여 인력양성 교육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이다.

앞의 사례에 한국관광공사 충청권협력단의 '충청 그린 프로젝트'와 같이 유관기관에 대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입체적으로 농촌관광의 산학협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사례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 강신겸, "농촌관광의 가능성과 발전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2.
- _____,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형 농촌관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_____, 농촌관광, 대왕사, 2007.
- 논산시, 논산시 농촌관광발전계획 수립, 2007.
- 박문호, 농업인 민간위탁교육 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박정운, "농촌관광개발의 주민참여 행동에 관한 유형-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윤호,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 등급화 방안", 『한국형 농촌관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윤유식, 홍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홍성군 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 3차 워크숍자료, 2007.
- 이인배외,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5.
- 조록환, "농촌관광사업 지역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003.
- 한국관광공사, 관광분야 대학생 역량강화사업 충청그린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2007.
- 행정자치부, 살기좋은 지역 기본 모델, 2006.
- _____,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치단체 우수지역 선정 추진계획, 2006.
- _____,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보고서, 2007.

바다와 돌이 함께하는

예술 · 문화 관광도시 **웅천읍**

조봉운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웅천읍의 현황

웅천은 마한 때부터 서서히 부락형성이 있었던 내포(內浦)의 들이다. 백제 때는 寺浦縣(사포현)에 속해서 농경지에 정착하는 백제유민들로 크게 마을이 이루어 졌다.

신라 때는 소포현에 속해서 西林郡(서림군)의 領縣(영현)에 속했으며 어민들의 마을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 고려 때는 현종 9年(1018)에 架林縣(가림현)에 속했다가 한때 왜구의 침입으로 차츰 황폐화되어 갔다. 잦은 왜구의 침입에 초토화되었던 마을이 34대 恭讓王(공양왕)때부터 藍浦(남포)에 鎭(진), 縣(현)이 생기면서부터 군사를 주둔시켜 왜구를 철저히 몰아내고, 흩어졌던 주민들을 소집함으로 다시 재건한 지역이었다. 조선 태조 6年(1397)에 兵馬使(병마사)를 두어 縣事(현사)를 겸하게 하였으며, 세조 12年(1446)에 남포현에 속하여 이때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道琛禪師(도침선사)의 말에 따르면 憂國(우국) 人物(인물)이 많이 배출되며 또한 道學(도학)이 문힐 곳이라 하는데, 熊川(곰내)의 주위에 번지는 산과 들이 선비의 내음을 훈훈하게 하는 內浦(내포)의 외곽 지역이었다. 세조 후에 충청수사영의 검사영이 황교리 「구진」에 있어서 수군의 군선이 드나들었던 곳이기도 하고, 고종 32年(1895)에 남포군에 속해서 熊川(웅천)의 이름을 따서 熊川面(웅천면)이라 하여 관동외에 18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年 행정구역 개혁때 古邑面(고읍면)의 외성 외 8개 동리과, 新安面(신안면)의 杜鳴里(두명리), 습의면(習衣面)의 碧洞(벽동)과 深田面(심전면)의 東幕里(동막리)를 병합하여 웅천면이라 하고 冠堂(관당), 獨山(독산), 小篁(소황), 篁橋

(황교), 竹淸(죽청), 九龍(구룡), 廬川(노천), 杜龍(두룡), 大川(대천), 大昌(대창), 城洞(성동), 水芙(수부), 坪里(평리)의 13 개리로 개편하여 관할하면서 보령군에 속하게 되었다.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되어 보령시가 된 후 1995년 3월 2일 보령시 조례 제138호로 웅천면에서 웅천읍으로 승격되었다.



보령시와 웅천읍의 위치

웅천읍의 면적은 62.1km²로 보령시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가 18.5km², 대지가 1.5km², 임야가 34.9km², 기타 7.2km²이다. 가구수는 3,321가구로 이 중 농가는 1,318가구로 37.9%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8,27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6명이 더 많다. 웅천읍을 통과하는 도로는 고속도로 1개 노선(5.4km), 국도 21호선(7.5km), 지방도 606호선, 607호선이 25.3km, 군도가 6호선, 8호선이 6.4km로 총 44.6km에 이른다.

대천해수욕장에서 남쪽으로 10km 지점에 위치한 무창포해수욕장은 낭만적인 정취와 분위기가 넘치는 곳이며, 한 달에 4~5차례씩 일어나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전국에 알려져 유명해진 곳이다. 백사장에서 1.5km 떨어진 석대도까지 바닷물이 갈라져 나타난 바닷속 길을 걸으며, 해삼, 소라, 낙지 등 해산물을 맨손으로 건져 올리는 재미는 무창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이제는 여름해수욕장으로서만이 아니라 풍부한 해산물의 진미와 바다낚시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고, 웅천에서 무창포에 이르는 해변도로 주변이 울창한 해송으로 이루어져 아름다움을 즐기는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곳이다.



바닷길 체험

무창포 앞바다는 대천 앞 바다와 함께 여름철 최대의 보구치 산지로 알려져 있다. 이곳의 낚시

충남의 도시 11 - 보령시 용천읍

는 포구의 방파제 가장자리에서 낚시를 할 수 있으나, 대개는 배낚시를 한다. 뱃길로 15분 거리의 석대도, 30분 거리의 황죽도, 직언도, 1시간 30분 거리의 용섬 등이 중요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이 중 석대도는 보구치가 유명하다. 우럭과 놀래미도 많으며, 워낙 고기가 잘 잡혀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다.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는 9월-10월에 개최되는 축제로 가족들과 함께 천수만에서 잡히는 싱싱한 대하와 전어를 맛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는 지역 먹거리 축제



전어의 특징

제철 먹을 거리는 잘 자은 보약 한첩에 버금간다.
가을의 초입인 9월은 여름철 무더위에 잃어버렸던 입맛을 되찾는 계절이다. 특히 바닷가에서 나오는 음식이 제철이다.
'볼 도다리, 가을 전어'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을에 먹는 전어의 맛이 일품이란 뜻이다. 봄에 산란한 전어는 여름을 관통하면서 토실토실 살을 찌워 가을에 절정을 이룬다. 이 때문에 씹을때 고소하고 감칠맛이 감도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충청도,경상도,함경도에서 전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맛이 좋아 사먹는 사람이 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어(鰻魚)라고 했고,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에서 '가을전어 대가리엔 참깨가 서말' 이라고 말했을 만큼 예부터 인기 메뉴였다. 또한 '집나간 머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돌아온다' 라고 했듯 냄새 또한 입맛을 되찾게 해준다.

대하의 특징

'본초강목'에 대하는 신장을 좋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 양기를 왕성하게 돕원주는 1등급 정력제라 치켜 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종각은 먹지 말라'** 는 말까지 생겼다. 대하는 큰새우라는 뜻이지 특징 종류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쿠링호일을 깔고 그위에 굵은 소금을 얹는다. 다시 대하를 올린다음 뚜껑로 덮고 가열하면 빨갛게 익어가는 대하를 볼수 있다. 대하탕도 별미다. 담백하면서도 일찌한 국물맛은 꽃게탕과 색다른 느낌을 준다.



이다. 대하·전어 축제를 가족과 함께 어우러진 고향같은 축제분위기로 치르기 위해 축제기간 중 다양한 이벤트와 갯벌에서 조개와 대하를 잡는 체험행사를 펼친다. 그리고 대하·전어 축제가 무창포의 특산물인 대하와 전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인 만큼 저렴한 가격, 정량제공, 정찰제, 친절환 서비스, 청결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객이 불편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고 있다.

2. 웅천읍의 비전

바닷길이 열리는 경이로운 땅!

무창포해수욕장은 낭만적인 정취와 분위기가 넘치는 곳이며, 한 달에 4~5차례 바닷길이 열리는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바닷속 길을 걸으며 해삼, 소라, 낙지 등 해산물을 맨손으로 건져 올리는 재미는 무창포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아늑하고 낭만이 가득한 무창포해수욕장!

서해안에서 가장 먼저 개장된 무창포해수욕장은 바닷물의 염도가 높고 철분함량이 많은 모래로 형성되어 있어 예로부터 관절계통 질환자의 모래찜 민간요법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무창포 낙조는 보령의 볼거리 중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전국 으뜸 석공예!

남포오석으로 유명한 전국제일의 석공예단지로 60여개의 공장에서 비석, 상석, 건축자재, 돌장식품 등 각종 석제품이 활발히 생산되고 있다.

3. 웅천읍의 발전방향

소도읍육성사업을 통한 집중적인 개발 추진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소도읍육성사업을 통해 웅천읍을 특화하고 민·관 및 사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개발을 도모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과 함께 주변 어촌을 아름다운 어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해수욕과 더불어 독살체험 등 다양한 어촌체험관광지로 육성

웅천의 석공예를 중심으로 한 예술문화체험도시로 육성

전국의 석공예 전문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전시할 수 있는 석공예공원(조각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석공예단지의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예술의 거리를 조성

웅천천 주변을 정비하여 시민의 체육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천변도로를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웅천천을 활용한 생태학습공간 조성 및 시민체육과 휴게공간으로 조성

4. 웅천읍의 주요 개발사업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보령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웅천읍을 비롯하여 남포, 주산, 미산, 성주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이며, 웅천읍에는 약 20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응모계획에 따라 보령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업으로 응천읍 성동2리에 참샘복원 및 주민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5천만 원이 지원되고, 이후 평가에 응모하게 된다.

응천읍 소도읍육성사업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된 지역은 정부에서 100억원을 4년에 걸쳐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안사업으로 석재산업활성화(석재공업지역 정비, 석재공원 조성), 관광어장조성사업(해상가두리낚시터조성), 관광도로조성(마을입구 소공원조성, 가로수 정비), 시가지 가로정비사업(석재경관도로, 걷고싶은특화거리 조성), 교육환경정비사업(공부방설치 및 개보수, 학교담장정비사업), 교육지원사업(장학금지원, 교육도우미, 교육컨텐츠개발), 아름다운어촌만들기(어촌정비사업, 독살체험프로그램개발), 관광열차운행사업(차량구입 및 개조, 열차공원조성, 이벤트개발), 석재예술축제(축제행사프로그램개발) 등을 계획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응모하게 된다.

무창포해수욕장 체험관광어장 조성

바다길이 열리는 시즌과 연계하여 다양한 생태학습이 연계될 경우 보령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체험관광어장의 조성을 통해 해양레저와 교육이 결합된 차별화 관광 상품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석대도 인근 어장에 독살 및 낚시터 등 체험장을 조성한다.

무창포 석대도지구 관광지 조성

무창포해수욕장 및 석대도를 연계한 관광지 확대 및 생태관광 루트 개발을 위해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을 91,583㎡에 민간자본 1,362억 원을 유치하여 관광지로 조성한다.

노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설명소방방재청에서 노천 재해위험지구를 유실위험지구로 지정하였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재해예방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88억 원을 2011년까지 투입하여 설계,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한다.



현장설명

5. 맺음말

웅천읍은 무창포해수욕장과 웅천석재공예 및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활용한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간의 연계 및 지역주민과 시청 및 민간이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때만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무창포 해수욕장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고, 석재 및 주변의 자연환경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웅천읍 주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함께하고 있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석재공예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예술경연장 및 전시장 그리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과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와 교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웅천읍의 천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다시 옛 명성을 찾는 웅천읍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회포마을에 넉쿨째 굴러온 호박미인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회포마을 —

유병연 |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국장

이름 그대로 회포마을은 대호방조제가 만들어진 지기 이전에는 작은 포구에서 배가 돌아오는 포구였으나, 지금은 간척지가 되어 드넓은 농경지가 되었다. 뒤로는 해발 302m의 망일산이 펼쳐져 있어 오르면 서해바다

가 한눈에 들어온다. 망일산에 오르려면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간 망일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해의 조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그래서 2004년 농협중앙회 회포마을 팜스테이

마을 선정, 서산농업기술센터 전통음식체험장 제1호 지정, 2005년 행정자치부 회포정보화마을 지정, 2005년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우수 농기업 선정, 2007년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등 발전을 해가고 있다.

이 같은 마을의 발전에는 최근명 대표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최 대표는 2001년 서산시 신지식인 1호, 2001년 충남 농어촌 발전대상 수상, 2002년 서산시 시민대상 수상, 2003년 농림부 장관상 표창, 2005년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최 대표가 지금의 호박 하나로만 연매출 3억 원을 올리기 전까지는 몇 차례의 숨 가쁜 고비를 넘겨야 했다. 30여 년 전인 1970년대 중반 군 복무시절 우연히 젓소목장에서 한 노인이 젓 짜는 모습에 매료돼 군 제대 후 낙농업에 투신하였다. 최 대표는 처음 10두의 젓소로 출발하여 이후 50두의 목장으로 키워 나갔다. 한참 번성하던 목장은 1990년 초 우루과이라운드 수입개방으로 인해 쌀 수입 우유가 밀려오면서 우유는 남아돌았고, 가격은 떨어졌다. 이후 최 대표는 낙농업에서 손을 떼고, 젓소 목장의 초지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시작한 토종닭 방사를 통해 넓은 목장에서 키운 만큼 활동

성이 많아 육질이 여느 닭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한창 많을 때에는 1만수의 닭을 사육했고, 상품도 이만하면 괜찮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성공을 자신했지만 2년이 지나지 않아 유통문제에 부딪혀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토종닭 사육은 지금 가능성이 많은 품목 중에 하나이다. 우리 국민은 현재 가축을 통한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비좁은 장소에서 대량생산이 병에 약해 반드시 항생제를 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무게를 늘리는 사육은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는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육계 시장에서 시민들은 점점 육류를 줄이고 가능한 비싸더라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골 토종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유통이라는 문제는 쉽지 않다. 이후 최 대표는 대호방조제 간척지에 왕우렁이 양식 사업에 뛰어 들었지만 또 다시 유통 소비부진의 문제에 부딪혀 이 사업도 접어야 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느타리버섯 작목반을 구성하여 그 동안 부진을 만회하였지만 연작 피해를 보게 되었고, 무균 재배사 없이는 버섯사업도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 최 대표는 무균 재배사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연작으로 인한 버섯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고민이 깊어졌고, 1997년 어느 날 버섯판매를 위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올라간 최 대표의 눈에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호박을 만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호박은 가을에 수확하는데 전국에서 일시에 호박이 많이 나오다 보니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만약 가을에 수확한 호박을 봄이나, 여름에 먹을 수 있도록 저장 기술만 갖고 있다면 부가가치는 몇 배가 될 것이라고 생

각을 했다. 지난날 어머니들이 호박을 판 후 사랑방 선반위에 두고 이듬해 봄이면 죽을 끓여 주던 생각을 한 최 대표는 이러한 전통 저장방식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한 것이 버섯 재배사이다. 최 대표는 보다 많이 호박을 저장할 수 있도록 버섯 재배사를 선반 형식으로 리모델링한 뒤, 호박 장기 저장법 연구에 돌입, 10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온도와 습도, 환기 등 3박자를 갖추어야만 호박을 오래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 온도 12~15℃, 습도 60~65%, 에틸렌가스농도 0.01ppm이

하 등의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호박을 85%까지 저장 가능하다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다.

최 대표는 호박 유통에 있어서도 또 다른 노력을 하였다. 1997년 당시 약 9,900㎡의 밭에 호박을 심어 당시 가을 호박이 한 개에 3,000원 정도 했다면 봄에 내놓은 호박은 1만원에서 2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호박 생산 후 이듬해 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내놓았으나 문제는 상인들이었다. 일단 제품이 확실하고 봄에 호박이 있다

는 희소성까지 합쳐진 만큼 비싼 가격에 잘 팔릴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상인들끼리 단합해서 생각한 만큼 가격을 쳐주지 않고, 반대로 소비자에게는 비싼 가격에 파는 광경을 목격하고, 많은 고민 끝에 전자상거래로 눈을 돌려 중간 유통마진을 줄이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9년 농촌진흥청에서 무료로 농업인 1호 홈페이지를 개설 각종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후 고객을 기다렸다. 그러나 고객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개설 후 1년이 지나서야 첫 고객이 들어 왔고, 여기에 언론의 웰빙 바람과 맞물려 고객의



문의와 주문이 이어졌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 검색창에 “호박”을 치면 참샘골 농원이 검색되었고,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해 주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잘생긴 호박만을 판매하던 것을 어느 날 여성 고객 한 분이 홈페이지에 그냥 호박도 좋지만 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객이 항상 옆에 두고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호박제품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가공식품이고, 가공식품 개발시 상품성이 없던 못생기고 작은 호박도 처리가 가능해 졌다. 그리고 2003년 “참샘골식품”이란 상표를 등록하고 대중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최 대표가 심혈을 기울인 상품은 호박죽으로, 서산시로부터 받은 특화사업 지원금과 자신의 자금을 합쳐 호박죽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식품업을 허가 받기 위한 수질검사, 성분검사, 위생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와 시행착오를 통해 허가를 득하여 판매를 시작하였다. 농민들이 가공식품으로 진출할 때 복잡한 인허가 조건의 단순화시키고, 안전성을 높이는 대책의 필요성은 농가 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요즈음

각종 농어촌 개발 사업에서 농민들이 식품가공업을 선택하고 막상 검토단계부터 허가사항 등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볼 때,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농민의 목소리는 절실하게 들린다.

최대표의 가공 식품업으로의 진출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고객과 농민의 선택폭을 늘렸다는 것이다. 고객은 호박죽, 호박죽, 호박국수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민은 생산품의 모양과 크기에 관계없이 판로가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둘째, 이제까지 최 대표의 개인농장에서 판로를 개척하던 것이 마을 전체로 확대되면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시에 증가되었던 것이다.



셋째, 2007년부터는 그 동안 내수에 머물렀던 것이 수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공식품은 보관과 이동이 편리하여 먼 곳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올해 500박스(1,800만원 상당)를 뉴욕으로 수출하였으며, 일본 시장에도 시제품이 전달되어 검토 중에 있다. 넷째, 참샘골의 대부분의 제품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한다.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면 직접 고객과의 대화가 가능할 뿐더러 물류비나 인건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제는 호박과 가공식품의 판매 비율이 2:8로 가공식품의 판매가 절대적으로 많아진 상황이다.

2003년부터 고객의 제안으로 시작한 농촌체험은 호박과 제품을 사먹는 단계를 뛰어 넘어 도농교류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도시민이 직접 농장을 찾아와 아이들과 직접 호박을 따보고, 호박음

식도 만들어 보는 체험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얻어 1년에 약 1,500여명이 방문을 한다. 팜스테이마을, 전통음식체험장, 녹색농

촌마을 등 이제는 체류형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다. 가까이에는 대호방조제, 망일산 서해 조망, 낙시터 등 주변지역과 어울려 정주형 관광 농촌으로 변화하고 있다.

회포마을에서 생산하는 호박은 일명 땃돌 호박이다. 땃돌처럼 둥글납작하며, 애호박에 비해 성숙하다고 해서 늙은 호박이라고도 부른다. 가을 수확철이 되면 주황색 빛깔이 나고 겉이 단단해진다. 잘 익은 호박 일수록 당분 성분이 많다. 고혈압, 당뇨는 물론 출산한 여성의 부기를 빼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최신식 가공시설을 갖춰 호박즙도 용도에 따라 산모용, 일반용, 다이어트용 등으로 다양화하

는 한편 호박국수 등 신제품을 개발해 시판하고 있다. 최근에는 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조언을 받아 한서대 김해경 교수팀과 함께 고구마호박죽을 개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호박 하나로 연간 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최근명 대표는 분명 성공한 농업인이다. 그래서 2005년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우수농기업에 선정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번의 실패를 딛고 성공을 거둔 것이다. 우리 농업은 늘 실패를 동반한다. 실패

했다고 좌절하면 거기서 끝난다. 농가부채가 증가되고, 도시로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수입농산물은 물밀듯이 들어오는 현실에서 농산물 가격은 오르내리기가 널뛰듯이 반복되고 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생각의 전환은 길을 만들어 준다. 세상이 변화하는 만큼 농민도 변화해야 한다. 아니 한발 앞선 변화를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성공한 농촌마을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마을 리더가 있다는 것이다. 리더는 항상 자기를 희생하고 공정



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마을에는 공동의 재산이 많다는 점이다. 마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데 이 경우 마을 공동재산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세 번째, 마을이 어디에 있든 중요하지 않다. 어떤 마을이든 성공한 마을은 그 마을 나름대로 장점을 잘 살린다는 점이다. 어촌이든, 산촌이든, 오지든, 도시근교이든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네 번째, 마을의 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추진력을 보였다는 점이다. 정부나 자치단체도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농촌의 잠재적 가능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끝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리더를 신뢰한다는 것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여론이 분화되고,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은 무

리가 따르기 때문에 중도에 멈추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우리의 농업, 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농업을 도시의 산업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우리 농업은 오랜 전통의 문화를 계승하고, 도시민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휴식처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질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인간의 생존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결코 다른 나라에게 우리의 식량을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의 농업이 소중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농민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회포마을 대표전화 041-663-8180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해외연수

특화된 도시 개발과 전략

강영주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치바(Chiba)

; 신도시 개발과 컨벤션 산업

: 마쿠하리 메세

1. 개요

- 헤이데이 원년(1989년) 메세 오픈 이래 일본IBM, BMW, NTT, 후지츠, 샤프, 세이코, 월드비즈니스 가든 등 300여개 회사가 입주함
- 마쿠하리 메세는 평성 9년(1997년) 국제전시장 11개 홀이 오픈하여 컨벤션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음
- 전체 메세 수입금은 년 약 47억엔
- 회의장, 이벤트홀, 레스토랑, 매점, 비즈니스센터를 직영하여 수수료 수입
- 정규직원(약 40명)이외는 거의 외주로 운영
- 외국투자유치는 없고, 담당자의 자료로는 흑자라고 하지만 경영에 매우 어려움이 보임
- 향후(약 2년후) 동경에 컨벤션센터 설립시 동경에 인접한 마쿠하리컨벤션센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 치바현 신도시 개발과 컨벤션

- 치바현은 나리타 국제공항에 인접해 있다는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여 신도시 건설과 기업유

치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

- 특히, 컨벤션 비즈니스에 집중 투자하여 급속하게 성장시킴. 그러나 토요타 자동차 전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한계
- Convention 시설은 연간 140회 정도 이용되고 있으나 Convention 비즈니스 자체는 적자를 면치 못함
- 단, 지역 내 타 산업, 특히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연관 사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자에도 불구하고 県 정부의 도움으로 Convention 시설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함
- 전시장 이용기업과 Convention 비즈니스 유치가 성공의 관건 ;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 동경에도 Convention 시설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사업에 특화하고자 함.

- Convention 비즈니스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추세에 있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종류의 국내외 회의, 기업모임, 전문가 회의, 또는 이벤트를 전 세계적으로 유치하여 시설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흑자를 낼 수 있음. 흑자를 내기 위한 경영체제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도 홍보 마케팅과 세계화된 시각과 경영능력을 갖춘 CEO의 확보가 관건임.



2

팜스프링스(Palm Springs)

: 도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

: 팜 스프링스

1. 개요

- 캘리포니아 팜 스프링스는 면적 246.3km², 인구수 45,731명, 인구분포는 주로 백인 78.3%(흑인 3.9, 원주민 0.9%, 아시아인 3.8%, 하와이인 0.14, 라틴 9.8, 기타 3.1), 연평균 기온 23℃로 온난하면서 건조한 기후, 연평균 강우량 150mm 정도임.
- 역사적으로 보면 Cahuilla 부족을 비롯한 7개의 인디언 부족들의 생활 터전이었으나, 1853년 정부조사팀에 의해 광천수와 야자나무 숲이 발견됨으로써 관광지로 개발이 시작됨



- 미네랄 온천수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최초의 호텔이 1886년 건립되었고, 1938년 시정부 통합 및 설립됨으로써 팜 스프링스 도시명이 사용됨
- 1967년부터 건설개발붐이 일어나 호텔과 주거지가 개발되어 온천휴양지인 겨울 리조트 도시로 각광을 받음
- 그러나, 최근 온천휴양지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어, 황무지사막을 개간하여 골프장들을 개간하고 있으며, 카지노 유치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음
- LA지역과 팜 스프링스 사이에 대단위 풍력시설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미래지향적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좋은 사례임

2. Palm Springs의 도시 활성화

- Palm Springs는 20여년전만해도 지상의 낙원으로 인식된 작고 아늑한 사막도시
- 한때 LA지역의 연예인, 운동선수, 중산층등이 소음, 스모그 등 각종 공해와 교통체증을 피해 이주했던 도시로 약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성장
- PGA기준에 맞는 세계적인 골프장, 테니스장, 고급호텔과 각종 피서시설을 개발해 부유한 은퇴자와 노인들을 끌어드리는 데 성공했음
- 그러나 현재의 Palm Springs는 점차 침체하고 있음. 문제는 젊은 층 인구가 부족해 도시가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고, 특히 부유층과 중산층이 Arizona와 New Mexico 등 신흥 개발지역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도시경제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임
- 즉, 중산층의 exodus ⇒ 도시기반약화 ⇒ 투자저조 ⇒ 새로운 기업유치에 실패 ⇒ 도시재정악화 ⇒ 도시인프라시설노후 ⇒ 부동산가치하락 ⇒ 중산층의 추가적인 exodus의 악순환 계속



- 문제는 기존 중산층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과 LA지역으로부터 중산층 유인에 실패해 도시침체가 가속화(인구감소, 지역생산 감소, 소득감소)되고, 이 점이 기업/상업 활동의 저조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도시낙후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임. 시정부는 민·외자유치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큰 진전 없음
- 한국기업들이 Hotel, Resort 시설, 그리고 Golf Course 등에 투자할 것을 원함; 이를 위해 zoning reg의 완화 등 적극 지원 용의
 - Palm Springs는 한때 크게 번창하던 도시도 불과 10수년 동안에 침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 도시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이 부재한데서 비롯됨. 특히 임금수준이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재하면 젊은 전문가집단의 고급인력을 유인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음. 이들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그러한 도시경제기반위에 고소비성향의 노인들이 거주해야 경제가 살아날 것임. 소비나 관광중심의 도시로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Palm Springs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부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만 공을 들이는 등 최근까지만 해도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음

3

실리콘밸리 산호세(San Jose)

;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도전

: 실리콘밸리

1. 개요

실리콘밸리 개관(2006년기준)

- 면적 : 1,500 평방 마일
- 인구 : 243만명
- Job : 115만개
- 평균 임금 : 69,455달러
- 연령분포 : 0-9세 15%, 10-19세 13%, 20-44세 42%, 45-64세 21%, 65세 이상 9%.
- 교육수준 : 성인의 82% 고등학교 이상, 41% 학사학위이상 소유
- 인종구성 : 백인 40%, 아시아계 33%, 히스패닉 23%, 흑인 3%, 기타 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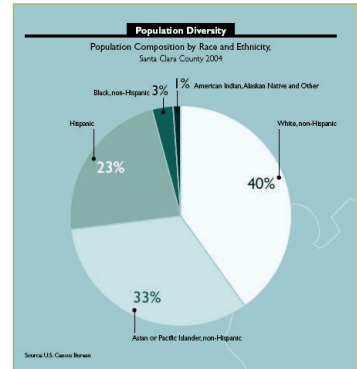
[그림 1] 실리콘 밸리 지역

1) 실리콘밸리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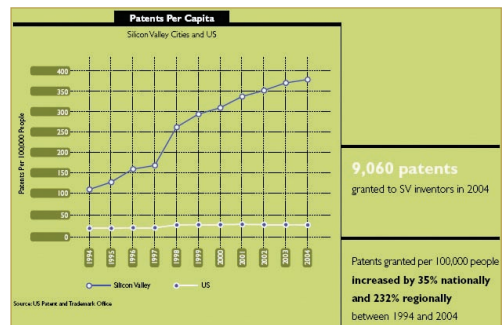
- 실리콘 밸리는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시티 사이에 위치한 산타클라라(Santa Clara)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 폭 10마일과 길이 30마일 지역에서 출발
- 최근 실리콘 밸리 지역경제의 팽창으로 인접 산마테오(San Mateo), 알라메다(Alameda),

그리고 산타크루즈(Santa Cruz) 카운티의 일부지역까지
실리콘 밸리에 포함

- 실리콘 밸리의 전체 면적은 1,500 평방 마일에 이릅니다
- 실리콘 밸리의 인구는 243만 명으로 2004년에 비해 2005년에 0.9% 증가함.
- Job은 115만개, 평균 임금 69,455달러, 연령분포는 0-9세 15%, 10-19세 13%, 20-44세 42%, 45-64세 21%, 65세이상 9%임. 교육수준은 성인의 82%가 고등학교 이상, 41%가 학사학위 이상 소유. 외국계 이민자는 인구의 38%, 2004년도의 이민자는 27,433명, 국내 이주자 24,665명임. 인종은 백인 40%, 아시아계 33%, 히스패닉 23%, 흑인 3%, 기타 1%임(2006년 기준).
- 실리콘 밸리는 20세기 중반까지 살구와 호두나무로 유명한 농촌지역으로서 2차 대전 말 이후에도 산호세(San Jose)를 중심으로 소규모 식료품 제조와 공급지로서 기능
- 기후가 매우 양호하고 쾌적하여 스탠포드대학 리서치파크가 자리 잡고 있는 팔로알토(Palo Alto)를 시작으로 산호세까지 무수한 기업들이 들어서 있음
- 팔로알토에는 휴렛팩커드, 마운틴 뷰(Mountain View)에는 페어차일드, 산타클라라에는 인텔, 그리고 쿠퍼티노(Cupertino)에는 애플 본사를 비롯한 다수의 관련 기업들이 입지
- 최근 북부 실리콘 밸리 지역의 지가상승과 공간부족으로 신규기업들이 점차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남부 산호세 지역으로 모여들고 있는 추세
- 또한 산호세에는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출신의 단순 저임금 노동자들이 점차 늘고 있음
- 특히 실리콘 밸리 지역 중심에는 명문 스탠포드 대학교가 자리잡고 있으며, UC 버클리 대학교가 인접해 있어 핵심 연구기술의 제공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산실이 되고 있음
- 실리콘 밸리는 미국내 가장 혁신활동이 활발한 지역임. 2006년 4년만에 처음으로 취업수가 증가하였으며, 1인당 수입 또한 증가를 계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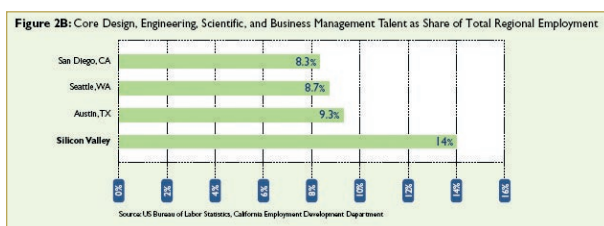


[그림 2] 실리콘밸리의 인구구성



[그림 3] 인구10만명당 특허취득 수

- 실리콘밸리에는 전미 벤처자금의 26%가 투자되고 있음
- 인구십만명당 특허취득 건수가 1994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4년 총 특허취득 건수는 9,060건(동년 한국 총 특허취득 49,068건)에 달함
- 실리콘밸리 종업원의 부가가치 생산은 전미평균의 두 배를 상회함
- 5년여에 걸친 산업경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 2002년부터 2004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산업에 따라 일자리수의 변동폭이 다르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는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임금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보다 고급기술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 특히 전자제품 제조업과 컴퓨터하드웨어 제조,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제조업의 일자리 수가 현격하게 줄어든데 반해 소프트웨어와 바이오메디칼 등은 미미한 변화를 보였으며 이노베이션 서비스 등은 오히려 증가함
- 핵심 디자인, 엔지니어링, 과학 및 기업경영 전문가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그림 4] 지역취업자 중 핵심 디자인, 엔지니어링, 과학, 기술서비스 취업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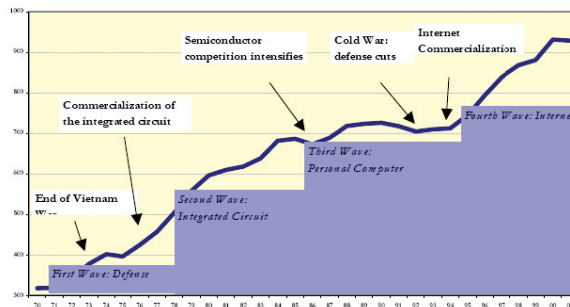
- 개방적 혁신네트워크에 기반한 실리콘 밸리의 높은 생산성은 전국생산성 보다 높게 나타남. 2004-2005년 간의 부가가치생산성 증가도 전국의 2배 이상을 기록함
- 생산성 이점은 실리콘 밸리의 높은 평균임금으로 귀결 2006년 현재 평균임금이 69,455\$에 달함

2) 실리콘밸리 클러스터 형성의 역사

- 실리콘 밸리가 혁신 클러스터로서 발전하게 된 ‘최초 계기’는 첨단 전자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장 상품화에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에서 찾을 수 있는 바, 그 중심에 스탠포드 공대학

장으로 있던 프레드 터먼(Fred Terman) 교수가 있음

- 터먼은 자신의 라디오 기술을 팔로알토 시를 중심으로 정착시키고, 제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¹⁾를 추진함으로써 빌 휴렛과 데이비드 팩커드에 의한 휴렛팩커드사 설립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
- 실리콘 밸리의 초기형성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계기는 태평양전쟁에 따른 주요 방위산업체의 설립과 관련기업의 성장임
 - 특히 록히드사의 설립은 팔로알토의 중소규모의 전자업체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
 - 이 같은 방위지출과 군납조달은 1951년 입주가 시작된 스탠포드 인더스트리얼 파크와 결합해 실리콘 밸리 형성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
- 실리콘 밸리는 <그림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네 개의 주요 기술혁신 물결을 통해 형성·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림 5] 실리콘밸리 역사와 고용성장

자료: Collaborative Economics(2000).

- 1950년대 국방 분야, 1960-70년대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의 상업화, 1980년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퍼스널컴퓨터 개발,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가 실리콘 밸리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주도

1) 터먼 교수의 프로젝트는 팔로알토시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스탠포드대가 자신의 명성과 부합하는 하이테크놀로지 연구조직과 기업들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영구임대해 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인 최초 기업은 휴렛팩커드이며, 이스트만 코닥, 제너럴 일렉트릭(GE), 쇼클리트랜지스터연구소 등이 속속 이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이후 스탠포드 인더스트리얼 파크(Stanford Industrial Park)로 성장하게 됨.

- 특히 매 시기의 기술혁신 물결은 다음시기의 실리콘 밸리 경제를 배태하였으며, 지역 내 산업구조와 배합을 변화시킴
- 동시에 매 시기마다 뛰어난 인적자원, 부품 공급업자, 금융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연구하 부구조의 네트워크를 확대시킴으로써 혁신과 창의적 기업 환경을 창출
- 특히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은 휴렛패커드와 베어리언 어소시에이트(Varian Associates)와 같은 실리콘 밸리 기업들로부터 전자공학 제품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실리콘 밸리 형성에 큰 영향을 줌
 - 1950년대 동안 방위지출은 실리콘 밸리 기업의 기술하부구조를 형성시키고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에 실질적 도움
 - 냉전과 우주경쟁 기간 동안 방위당국은 지출규모와 수준에 개의하지 않고 관련 기술획득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종종 자신의 기술적 요구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기술 혁신을 추구
 - 동시에 방위당국은 2차 부품공급자 제도를 요구함으로써, 지역 내 기술 확산과 함께 대체 부품 공급자로서의 신규기업 창출에 기여
 - 그러나 실리콘 밸리의 1세대 기술혁신 물결은 1969-71년 방위지출 삭감과 함께 종식
- 방위지출의 삭감에 따른 실리콘 밸리의 경기침체는 방위기술의 상업적 적용과 개발을 자극하는 계기
 - 특히 인텔사의 창립자인 밥 노이스에 의해 1959년 개발된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는 1960-70년대 반도체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옴
 - 쇼클리 반도체사를 시작으로 3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1960대동안 실리콘 밸리에 발달
 - 쇼클리 반도체사(Shockley Semiconductor)는 이후 패어차일드(Fairchild)와 인텔(Intel),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Advanced Micro Devices) 그리고 내셔널 반도체사를 포함해 수많은 분사 기업을 발생시켰으며, 오늘날 실리콘 밸리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 이 시기임
 - 실리콘 밸리의 기술물결은 1971년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발명으로 더욱 확장되었고, 퍼스널 컴퓨터에 의해 인도된 다음 단계 기술물결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확립
 - 특히 일본 등 외국 반도체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은 실리콘 밸리 반도체 산업을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한 특수 칩(chips)으로 이동시킴

- 실리콘 밸리의 제 3세대 기술물결은 퍼스널 컴퓨터가 주도
 - 이미 방위분야와 직접회로(IC) 기술물결에 의해 확립된 기술적 토대는 제3세대 기술물결을 위한 풍부한 산업 환경을 창출
 - 자가 조립 컴퓨터클럽(Home-brew Computer Club)에서 만나던 젊은 인재들은 결국 애플(Apple)사를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컴퓨터 회사를 탄생시킴
 - 이 기간 동안 실리콘 밸리는 폭발적인 성장하여 1975년 830개였던 기업수를 1990년 3000개로 증가시켰으며, 고용자수도 10만 명에서 26만7천여 명으로 증가
 - 또한 초기 퍼스널 컴퓨터 산업도 선 마이크로시스템스(Sun Microsystems)와 같은 기술혁신 기업에 의해 보다 정교한 워크스테이션 개발로 이어짐
- 실리콘 밸리의 반도체와 컴퓨터 하드웨어 산업도 냉전종식에 따른 방위삭감과 글로벌 경쟁 증대로 1990년대 초 또 다시 경기침체가 찾아옴. 이러한 경기침체를 타개한 제4세대 기술물결이 바로 인터넷 혁명임
 - 1993년 인터넷의 상업적 개발과 월드 와이드 웹(www)의 창출로 실리콘 밸리는 인터넷 혁명의 리더가 됨
 - 그 결과 넷스케이프(Netscape), 시스코(Cisco), 3Com 등과 같은 인터넷 관련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져 1992년과 1998년 사이에 소프트웨어 일자리는 150%이상 증가하였으며, 컴퓨터 네트워킹 일자리도 두 배로 증가
 - 쉘과 휴렛패커드와 같은 컴퓨터 기업과 인텔과 AMD와 같은 반도체 기업도 인터넷 시장과 함께 크게 성장
 - 그러나 인터넷 버블의 확산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시설 과잉(Overcapacity)은 2000년 이후 실리콘 밸리의 경기침체 요인이 되고 있음

2. 실리콘밸리의 혁신체계 분석

1) 클러스터 형성 계기

- 실리콘 밸리 지역이 최초의 기술혁신지역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전문화된 기술, 스탠포드 등과 같은 선도적인 연구기관과 강력한 연구베이스, 연방정부 방위지출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특히 이 지역의 초기 경제적 성공은 터먼 교수와 같은 리더십있는 비저너리와 모험심 많고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던 연구공학도 출신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있었기 때문
 - 이들은 혁신기업과 대학연구소 간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연구결과의 시장상업화에 성공, 지역 내 산업클러스터의 기반을 제공
-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성공의 기반을 제공한 방위비 지출은 주기적 예산삭감에 따라 경기 침체의 요인이 됨
- 베트남 전쟁이 끝난 1970년대 초, 그리고 냉전종식 이후의 1990년 초 방위지출 삭감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는 정보기술의 상업화와 새로운 시장개척이라는 과제를 안겨줌
- 1980년대 중반이후 실리콘 밸리는 퍼스널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을 통해 다시 번영을 구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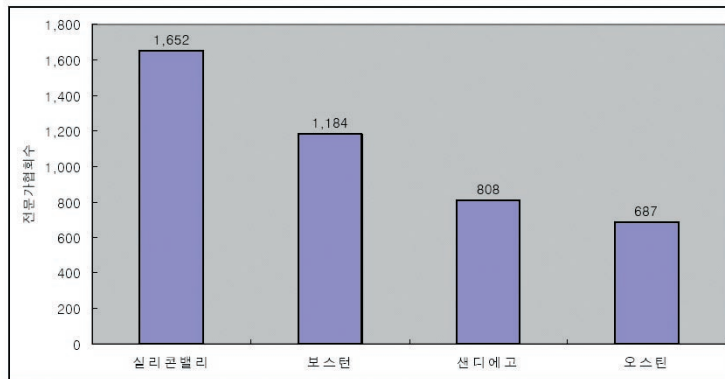
2) 지역혁신체계 특성

- 실리콘 밸리는 개방적 지역네트워크에 기반한 산업체계를 구성함
- 실리콘 밸리의 네트워크기반 산업체계는 특수한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 사이에서 공동학습과 유연한 적응을 증진시킴으로써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
- 실리콘 밸리 기업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비공식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다른 기업으로부터 시장변화와 기술 정보를 학습
- 네트워크 체계 속에서 기업간 그리고 기업내부 조직경계선, 기업과 무역협회·대학 등 지방 조직간의 조직경계선은 매우 희미하게 존재, 상호 침투 가능
- 특히 지역의 조밀한 사회네트워크와 개방된 노동시장은 실리콘 밸리의 기업가 창업정신과 실험 정신을 고무시켜 무수한 신규기업을 창출
- 또한 지역네트워크와 개방된 노동시장을 토대로 한 수 많은 신규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공은 주요 기업본사의 대부분을 새로운 정보기술의 창출과 확산의 중심지인 실리콘 밸리에 위치시키는 결과를 낳음
 - 특히 휴렛패커드와 인텔사 등 실리콘 밸리 내에 위치한 기업본사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 기업 활동을 분산시킴으로써 회사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 나아가 지역의 사회, 기술적 상호의존을 공식화함으로써 실리콘 밸리의 산업체계를 강화
- 산업체계 형성과 관련하여 인지적 거리가 중요 요소로 작용

- 실리콘 밸리는 스탠포드 대학 부지 내에 위치한 인터스트리얼 파크에서 출발했듯이 연구중심대학과 매우 근접해 있는 공간중심 밀집형 클러스터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지리적 근접성은 주체들간의 대면적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또한 한 지역혁신체계가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에 대한 탐구(exploration)와 이용(exploitation)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호간 이해를 막지 않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인지를 보장하는 정도의 인지거리를 지닌 조직 단위들은 지역혁신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기업조직과 노동시장 조건면에서 실리콘 밸리의 기업은 위계질서 부재와 탈집중화 등 수평적 기업조직 형태를 띠고 있음
 - 주요 부서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고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상호작용적 대화 환경이 조성
 - 특히 실리콘 밸리의 엔지니어들은 한 기업에 대한 로열티보다는 기술과 동료 엔지니어, 과학자들에 강한 로열티를 갖고 있음
 - 실리콘 밸리 중소기업의 평균이직률이 35%에 이르며, 1980년대의 평균재직기간도 2년 정도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기업특성을 엿볼 수 있음
- 실리콘 밸리의 높은 이직률과 기업 실패율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형성을 낳으면서 실리콘 밸리의 전반적인 역동성에 기여
 - 실리콘 밸리의 '유연한 리사이클링(flexible recycling)' 형태는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이 새로운 기업의 창시자에 의해 새로운 방법으로 결합되면서 혁신과정을 촉진
- 지역문화 측면에서 실리콘 밸리는 개방적이고 실험적 정신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
- 실리콘 밸리의 개방된 지역문화는 지역화된 혁신네트워크의 정착과 촉진 그리고 자극제가 됨
 - 특히 다문화적인 공존 속에서 상호 번영하는 실리콘 밸리의 개방적인 지역문화는 외부자극과 새로운 기술혁신의 도전으로부터 실리콘 밸리를 더욱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지역으로 만들고 있음
 - 즉 실리콘 밸리 지역문화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물결에 따른 시공간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축되는 과정을 보여줌
- 실리콘 밸리 환경(habitat)을 특징짓는 지속적인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위기의

- 매 시기마다 더욱 빛을 발휘
-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의 방위삭감에 따른 경기침체 시기에는 집적회로의 개발과 상업화
 - 1985년 반도체 산업에서의 시설과잉과 일본기업과 경쟁심화 시기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과 퍼스널 컴퓨터 혁명
 - 1990년대 냉전종식 이후의 방위삭감과 PC산업의 시설과잉으로 야기된 경기침체에는 방위기술로 개발된 ARPANET를 상용화한 인터넷 혁명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지속
- 특히 실리콘 밸리의 개방체계 네트워크는 새로운 상품성장과 혁신의 과정을 촉진
- 개방체계 네트워크는 가치(value) 체인 네트워크상에 있는 기업들의 리스크와 이득을 공유함으로써 개별기업들에게 신상품 개발과 결합된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
- 2000년 이후 현재 시기에도 차세대 기술혁명 물결에 대한 실리콘 밸리의 연구노력은 계속되고 있음
- 리콘 밸리의 핵심적 고민은 과연 어떤 정책조치가 지역에 가장 바람직한 결과, 즉 지역의 번영과 실리콘 밸리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게 가장 뛰어난 삶의 질로 이끌 수 있는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산출할 수 있도록 사람, 자본, 그리고 기술을 강화하고 이들을 연계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있음
- 이를 위해 지역 및 지방제도와 정책 그리고 실천적 조치들은 자본, 자본 그리고 기술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이점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연계방식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변화하는 글로벌 조건에 적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실리콘 밸리의 혁신환경 창출과 새로운 기술혁신 물결에 대한 고민의 중심에는 1992년 지역기업, 정부, 대학 등 다양한 기반을 갖고 있는 컨소시움(consortium) 형태로 결성된 '실리콘 밸리 네트워크: Joint Venture'와 '넥스트 실리콘 밸리 리더십그룹(Next Silicon Valley Leadership Group)'이 자리 잡고 있음
- Joint Venture는 문제해결 공유와 지역 스튜어드십(regional stewardship)을 통해 실리콘 밸리의 i) 혁신경제지속, 생산성 증대, 번영확대, ii) 환경보호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livability) 조성, iii) 사람들에 대한 기회제공과 연결 등과 같은 지역문제들을 상호 확인하고 행동하도록 기업, 노동, 정부, 교육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을 동원하고 조직해 내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
 - 조인트 벤처 내에 구성된 '넥스트 실리콘 밸리 리더십 그룹'은 최근 '실리콘 밸리 비전

- 2010' 을 주제로 한 백서를 출간함으로써 실리콘 밸리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전달함으로써 차기 실리콘 밸리의 기술물결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이밖에도 실리콘밸리 지역 내에는 수많은 혁신지원조직들이 신규기업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그림 6] 미국 4대 혁신지역 전문가 협회수: 2001

자료: www.jointventure.org(2002.6).

3. 정책적 시사점

- 실리콘 밸리의 혁신체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 첫째, 지역혁신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지역적 맥락에서 창출되고 번성

- 개방적 협력 네트워크는 지역제도와 상호신뢰를 형성하는 반복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경쟁의식을 강화하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탈 집중화된 공동학습 과정의 증진과 지속적 혁신을 가져다 줌
- 이와 관련 기업의 집적 자체가 기업간 상호이득을 줄 수 있는 상호의존성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즉 한 산업체계에서의 기업집적은 정책조치에 의해 이루어 질 수도 있음

○ 수많은 구 산업지역에서처럼 개별기업의 경제적 자립이 강한 유산으로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기업 집적이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와 같이 기업을 분리하고 있는 제도적, 사회적 조직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개방적 네트워크 산업체계의 채택은 기존 기업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혁신지역의 '최초 발전'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정책조치로서 파생이 불가능함

○ 이와 관련 지역 내 선도적인 연구중심대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혁신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망아 상품과 생산기술 그리고 풍부한 인적자원이 존재해야 함

○ 여기서 정책조치는 이러한 상품기술과 관련된 사람들이 혁신활동을 하도록 동기부여 및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셋째, 혁신은 단선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확산과 동시 병행되어야 한다

○ 인터넷의 경우처럼 타지역에서 창출된 정보관련 기술일 지라도 실리콘 밸리에서는 확산과 상업화에 성공함으로써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 냄

○ 이와 같이 연구개발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곧 바로 상업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특히 기술혁신은 종종 의외의 곳에서 그리고 예기치 않게 일어나게 됨

- 인터넷 시대 속에서도 기술혁신을 위한 대면적 가치와 상호작용이 여전히 중요시 되는 것도 이 때문임

○ 또한 혁신 과정은 단순히 개인 회사에서가 아니라 기업, 대학, 그리고 다양한 제도 속에 있

는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들의 지식창출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여기서 핵심은 신뢰, 자발적 공유, 그리고 오랜 시간 호혜적 교환에 기반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형성된 암묵적 지식의 공유에 있음

- 따라서 한 나라의 발전은 혁신 창출에 머물기보다는 기업들 사이에 혁신을 과감하게 채택 하도록 하는 것, 즉 혁신의 확산결과로부터 일어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넷째, 혁신은 반복적이고, 대면적, 그리고 네트워크에 기반함과 동시에 지리적 위치에 기반하고 있다

- 지역 클러스터는 인간적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빠르게 전달하고 확산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임
- 혁신지역의 공간적 집적성과 관련하여 최적의 인지적 거리는 서로 새로운 것을 말할 만큼 크면서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작은 정도의 거리를 지칭
 - 실리콘 밸리의 경우 공간중심 밀집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기업간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함
- 네트워크경제 형성의 기본전제조건은 거래비용의 감소임. 이러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간의 농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사회적자본의 형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지리적 위치와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짐



□ 다섯째, 실리콘 밸리의 개방적 지역문화가 혁신네트워크의 정착을 촉진하고 자극하였다

- 특히 실리콘 밸리의 개방체계 네트워크는 새로운 상품 성장과 혁신 과정을 촉진하고, 밸류-체인(value-chain)상에 있는 기업에 비용과 이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개별 기업들에게 신상품 개발과 결합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음



□ 끝으로 혁신의 자원 · 중개조직의 중요성을 지적

- 실리콘 밸리의 혁신네트워크인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가 대표적 사례임
- 지역혁신네트워크는 지역 내 정보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이해와 학습을 위한 개별적 투자 필요성과 정보의 과잉유출 위험을 줄여주고, 사회 자본을 창출하여 기술 확산과 기술 이전을 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요컨대 공간적 집적성과 산업클러스터가 그 자체로 새로운 기술혁신과 호혜적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점은 지역혁신체계 형성과 관련한 핵심적인 정책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벤처캐피탈리스트와 변호사, 회계사 등을 포함하는 지식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들은 창업자와 자본가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해소시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창업기업의 자본 및 인적자원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4

라스베가스(Las Vegas) : 리조트관광도시창조의 모델

: 라스베가스

1. 개요

- 미국 네바다주(州)의 남동부 사막 복판에 있는 도시로, 인구는 47만 8,434명(2000년)이며, 관광과 도박의 도시로 네바다주 최대의 도시로 알려짐.
- 1700년대 초에 에스파냐인(人)들이 부근 지역을 발견하였고, 1855년경에 모르몬교(敎) 지도자 브리검 영(Brigham Young)이 파견한 30여 명의 교도들이 요새를 지었으나 1857년에 인디언들이 파괴하였음
- 에스파냐어(語)로 '초원'이라는 뜻의 지명은 라스베이거스계곡을 처음으로 발견한 에스파냐인들이 지은 것임.
- 19세기 말까지는 소규모의 광업과 축산업을 하는 마을이었으나, 1905년에 남(南)캘리포니아와 솔트레이크시티를 잇는 철도가 완성되면서 현대적인 도시로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1911년 3월 16일에 시가 되었음.
- 1936년에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후버댐이 완성되고, 도박장이 늘어나면서 관광·환락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어 네바다주의 최대 재원이 되었고, 연중무휴의 독특한 사막휴양지로서, 고속도로 연도에는 호화스런 호텔·음식점·공인도박장 등이 준비하며, 야간에도 관광객으로 성황을 이루어 '불야성'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음
- 최근, 라스베가스는 카지노 gambling 도시라는 어두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흥미롭고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관광 리조트 도시로 변모하는 전략을 세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하고 있음
- 라스베가스는 두 번 이상 방문하는 반복형의 여행자가 많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자료에 의하면 2002년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관광객중 처음으

로 방문한 사람은 불과 20%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과거 5년간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평균횟수는 5.3회였다.

- 바로 그러한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는 20세기 후반부터 최고의 관광리조트, 즉 데스티네이션 리조트(Destination Resort ; 방문객 중 관광객이 50% 이상을 점유하는 리조트 관광지)로 불리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 현재 라스베가스는 연간 관광객이 3,850만 명(2005)이고, 우리나라는 지난 9월 22일부터 대 한항공도 라스베가스 직항편을 개통하여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음.
- 실제 라스베가스를 방문하는 목적으로 '돈을 따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고작 4%에 불과하고 '즐거움을 위해'라고 답하는 사람의 비율은 매년 증가해서 2002년에는 79%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있음.
- 라스베가스에 인구가 유입되고 조그만 도시를 형성한 것은 불과 100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 이며,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지역이 어떻게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도시가 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자료가 될 수 있음.

2. Las Vegas의 도시개발

1) Las Vegas(LV)시

- LV는 casino 중심의 전형적인 관광도시임; 연간 관광객은 4,000~4,5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체제기간은 2.5일이며, 이들이 쓰는 돈은 500불/인 정도, 그리고 이들이 Casino에서 잃는 돈은 평균 280불/인 정도임.
- casino 관광객의 45%가 외국관광객이고, 이중 80% 이상이 아시아계 관광객이며 이중 70%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이나, 중국의 Macao가 Casino도시로 급성장하면서 중국인 도박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함.
- 이러한 변화를 이미 오래전에 예측하고 LV의 이미지를 개선하기위해 10년 전부터 도시발전계획을 전향적으로 개편하여 LV를 세계적인 convention 도시로 전환하고 아울러, 가족 중심의 leisure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었음. 현재 연간 약 240회 이상의 convention을 유치; 이중에는 국제 물류회의, 국제전자전기회의(CRS), 미국의사협회

(AMA)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convention이 포함됨. (CRS회의는 약 20여만명의 방문객 유치)

-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LV는 convention도시로, 가족중심의 leisure 도시로 그리고 hi-tech 기업중심의 고급도시로 발전하면서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음. LV는 현재; 183천개의 객실 (금년 내 6000객실 추가), 300여개의 convention hall과 부대시설, 200여개의 가족 hotel 과 고급 motel, 고급식당과 recreation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음.
- convention과 leisure, game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국제선, 국내선을 대폭 증편하고, 특히 남가주일대의 고객유치를 위해 Anaheim에서 LV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임. 한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어 KAL이 주 3회 인천-LV를 운행하고 있음.
 - LV는 업종전환으로 크게 성공,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게 된 배후에는 McCarren이라는 여시장의 leadership이 있었음. LV시는 매카렌 시장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공항 이름을 McCarren International Airport로 명명하였음. 한사람의 leadership이 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2) North Las Vegas 시

- LV 북쪽에 위치, LV에 인접한 신흥도시로 LV가 커지면서, 주변지역으로 확장되었고, 이를 계기로 NLV가 LV교외의 주거지역으로 성장
- LV가 최근 지속성장하면서 시세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물부족으로 한계; 물절약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주택개발업자에게 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LV와는 경쟁, 보완관계를 유지; 기능적으로는 LV의 bedtown역할을 하나 주변에 각종 hi-tech 기업이 입주하면서 LV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견지하고자 노력.



논산을 국방클러스터 중심으로*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충청남도는 그동안 국방대학교의 논산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논산은 육군 훈련소, 육군 항공학교 등과 함께 동일 생활권내 3군 본부와 군수사령부, 자운대 등 군사관련기관이 집중돼 있어 연고지 배치원칙 차원에서 보면 국방대학교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 무엇보다 국방대학교의 논산 이전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논산지역이 지닌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 전자기술과 항공, 로켓, 로봇 등 정밀기계 및 신소재 분야의 첨단기술에 의존하는 국방산업은 기술혁신과 산업성장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국방산업은 국가예산의 10여%에 달하는 국방예산과 연계돼 시장 규모가 크고, 안정성과 성장 추세가 높은 특성이 있다. 국방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연구 및 기술개발의 비중이 높고 산업간 연계와 융합 활동이 활발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대량생산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국방산업의 성장이었다. 현대 전쟁이 점차 정보와 기술전쟁으로 변모하면서 군사적 목적의 정보·통신, 항공, 로봇 기술, 첨단 소재분야의 연구와 기술개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방산업의 확대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혁신과 신기술제품 생산의 확대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중도일보(2007. 10. 1)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국방산업은 대부분 전문지식과 인적기반, 첨단기술과 지식의 집적도가 높은 대학의 인근 지역, 그리고 온난한 기후와 쾌적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 여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래서 국방산업이 집중된 산업지대를 “해가 뜨는 지역” 또는 “군사(대포) 벨트”라 부르기도 한다. 미국 서부의 “실리콘 벨리”, 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 트라이앵글”, 그리고 보스턴 “루트 128” 등 첨단산업지대들이 모두 대표적인 군사산업 클러스터라 할 수 있다.

국방산업 클러스터는 아무 곳이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논산은 군사산업의 핵심 기술인 정보·통신 및 신소재분야의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충남대학교 등 전문 과학 기술인력 양성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협력센터를 비롯하여 군수품 조달을 총괄하는 군수사령부, 우리나라 군사 전략의 총 본산인 계룡대 등이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전문가 집단 간 교류와 협력이 용이하기 때문에 군사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논산에는 이미 군사산업 부문의 산-학-관간의 연계와 협력기반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군수분야 중소기업의 이전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 국방산업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은 국방도시로서 논산시의 위상과 군사관련 전문 인력의 집적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논산지역에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대전과 충북지역의 군사관련 기술 및 산업과 연계하여 초광역적 군사산업 벨트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군사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행정도시와 주변 도시 간 상생발전이 가능하려면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행정도시란 단순히 중앙정부 기관의 이전을 위한 신도시가 아니다. 행정도시란 단핵구조의 국토공간의 개편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중추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이다. 행정도시가 이 같은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와 주변도시 간 연계와 보완을 통한 경쟁력을 지닌 거대도시권의 형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초기단계부터 행정도시 중심의 대도시권 형성을 공언하여 왔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행정도시와 주변도시 간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 간 상생발전이란 한 도시의 성장이 주변 도시의 성장 발전에도 기여하여 발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관계를 의미한다.

행정도시와 충청권 내 주변도시 간 상생발전은 도시 서비스 공급 및 인프라 시설의 건설과 관리, 그리고 경제와 산업발전에 있어서 협력과 공조 등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행정도시와 주변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호혜적이고 기능 보완적인 관계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기본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행정도시 성장이 주변지역의 인구와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흡입하여 주변도시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공동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행정도시의 건설로 주변 도시나 지역이

공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도시가 처음부터 자족적인 고용기반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행정도시가 기존의 수요 대응형 주거 신도시 건설과 같은 주택 건설에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용과 경제기반의 조성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都市는 인구 50만 명에 필요한 고용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구체적 고용기반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1만 4천 명에 불과하다. 자족적인 고용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앙행정기관의 10배에 달하는 15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기반이 확보돼야 한다.

행정도시가 현재와 같이 주거지 건설에 우선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행정都市는 주변 인구를 흡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변 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상생발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선도 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모범도시가 될 행정도시와 충청권 내 주변도시들은 상호 수평적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도시 간 수평적인 보완관계가 형성되려면 어느 정도 도시시설 및 서비스 수준의 평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충청권 내 도시들은 도시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모범도시를 지향하는 행정도시와는 너무 큰 격차가 예상된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행정도시와 주변도시 간 상생발전의 시너지는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주변도시들은 행정도시의 종속 도시로서 자족적 발전 잠재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행정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과 충청권내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도시 주변도시의 기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시책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행정도시 주변도시의 획기적인 개선 사업은 행정도시 건설의 근본취지를 살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도시와 주변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주변도시도 국가 중추기능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 중추기능을 모두 행정도시에만 집중 배치할 경우 행정도시 중심의 대도시권 발전 잠재력을 확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시 간 수평적 연계와 보완성을 촉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의 도시 경쟁력은 개별 도시 자체의 자원과 역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변 도시와 지역이 지닌 잠재력과 매력이 결합될 때만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행정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은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행정도시가 고립 섬과 같은 도시가 되어서는 국토 공간의 개편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깨달았으면 한다.

지방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정종관 |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팀장

올해 노벨 평화상을 앨 고어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공동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가 인간안보와 세계평화에 핵심 사안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앨 고어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루었다.

한편 IPCC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기후변화 예측을 통해 인류의 대응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인류 생존의 위기로 다가온 급박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크게 완화, 적응,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완화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인데, 그러자면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적응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응정책을 포함한다. 그리고 협상은 완화와 적응에 대해 국제적인 감축노력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대응능력을 인정받고 국제적인 위상 확보를 담고 있다.

*이 글은 중도일보(2007. 12. 3)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이러한 종합적인 흐름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중순 IPCC 총회에서 기후변화 평가에 관한 종합보고서가 승인을 받은 이래, 오는 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제13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3)를 통해 2013년부터 적용되는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번 당사국 총회 결과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저탄소 경제를 지향하는 미래의 움직임에 대해 신속하고도 확실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지금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확실한 해법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의 강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기온의 상승은 해수면 상승과 함께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짐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에너지 산업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여기서 생산된 제품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남은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산업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국 대비 14%를 점하고 있어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 규제가 강화되면 주요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로 이어지는 법.

신기술 개발로 저탄소 고효율의 제품 개발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탄소펀드와 탄소거래 등의 새로운 상품 시장영역도 나오게 된다. 그 이외에도 온난화 대응 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태양광, 풍력, 조력 이외에 바이오에너지를 들 수 있다. 온난화는 결국 땅 속에 묻힌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탄소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한다. 따라서 식물에서 얻는 에너지는 태워도 광합성 과정을 통해 다시 흡수되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OPINION

충남 지역은 농경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유휴지에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채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극단적이기는 하나 에너지 사용량이 초과하여 심각한 탄소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탄소포집과 저장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된다.

이러한 지구위기 상황에서도 사전에 대비한 국가나 지방은 선점한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국제 환경협상 게임에서 계속 승자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 지방, 기업, 주민 모두 총력전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사업화나 연계 정책의 추진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길로 안내하게 될 것이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거는 기대



성기훈 | 충남발전연구원 이사 겸 중도일보 상임고문

지난 12월 21일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아산, 서산, 당진 지역을 포함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과 그 중심에 충남도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며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차지하는가는 국내외 대부분 수출기업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국가적으로도 21세기 핵심 발전전략과 결부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대련, 청도항과 최단거리일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대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53%를 생산하는 대중국 교역 및 환적항으로서 최적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반경 100km 이내에 서울, 인천, 대전, 군산이 위치하고 있어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확충되면 전국이 3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여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최소한의 물류비용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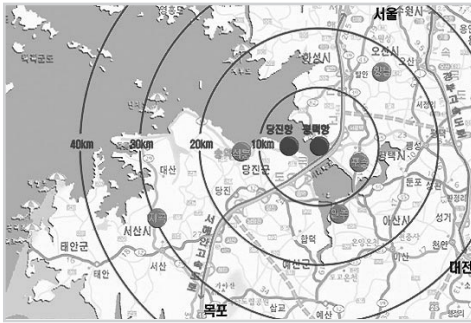
입지적 장점 이외에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주변의 산업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관계기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돼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향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경제권의 중요 거점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역할 차별화, 급속하게 치솟고 있는 지가의 안정, 환경 보호,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의 교육·의료·문화 수준 향상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앞서 지정된 부산, 광양,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이 접근성과 교육, 의료 등 제반여건이 미흡해 외국기업의 유인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어두워진 서해안에 희망의 빛으로 떠오른 황해경제자유구역, 충청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 당진~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

— 재정경제부, 오늘 오전 대구 경북, 전북 새만금 3곳 추가지정 —



충남도 최대 현안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12월 21일 확정됨에 따라 충남도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국방대학교 논산 유치에 이어 21일 충남도에 또 하나 낭보가 들어왔다. 바로 충남도 최대 현안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충남지역 균형 발전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9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대구 경북, 전북 새만금 등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충남과 경기도 잇는 6814만㎡에 7조원 투입

이번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규모는 충남도에서 당진의 석문지구와 아산의 인주지구, 서산의 지곡지구 등 3개 지구 4190만㎡와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와 화성 향남지구 등 2624만㎡를 포함해 총 6814만㎡다.

이 중 5006만 m^2 가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국비 475억원과 지방비 4139억원, 민자 6조 5382억원 등 6조 999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 개발된다.

5개 지구별 개발 컨셉은 당진 송악·석문지구는 (송악)상업·업무의 국제 및 복합도시, (석문)친수공간의 생태도시 ▲아산 인주지구는 레저·휴양의 관광 및 자족도시 ▲서산 지곡지구는 첨단 자동차의 산업도시 ▲평택 포승지구는 첨단산업, 국제물류·업무, 주거복합도시 ▲화성 향남지구는 BT산업 글로벌 메카 등이다.

이에 대한 차별화 요소는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적지로 개발(R&D, 물류, 입지경쟁력 강화) ▲외국인 정주환경(교육, 주거, 의료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충 ▲동북아 부가가치물류 기능의 강화(수입 중국부품 + 국내첨단부품의 조립가공 → 수출기지화) ▲국제적 수준의 R&D기능 확충과 첨단생산 기지화를 통해 국가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이다.

고품격 주택단지 및 다양한 교육, 의료, 관광 레저 시설 마련



또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이 물류(항공, 항만)와 국제금융비즈니스 기능 중심인 데 반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생산 기능을 특화시켜 기존 구역과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주거시설과 교육의료시설, 관광 레저시설도 마련된다. 주거 시설로는 각 지구별로 장단기 체류형태에 따른 맞춤형 주거 시설 및 자연 친화형 고품격 주택단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송악단지는 업무주거형 주택 및 자연 지형을 활용한 저층의 블록형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석문단지는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중저층의 블록형 주택과 별장형 주택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주 지구도 골프장 등 위락시설과 수변공원 주변의 저층 저밀의 단독주택 및 주상복합 형태의 업무주거형 주택이 공존하도록 조성한다.

교육과 의료시설로는 외국인 주거단지와 연계해 초중고교가 복합된 외국인 학교를 송악과 석문, 인주 등 4곳에 설치하고 송악단지에 외국인 종합병원과 석문 지구에 전문 병원이 설치된다. 관광 시설로는 인주지구에 샵오토 및 기존 유원지와 연계해 18홀 골프장을 건설해 인근 태안 기업도시에 건설되는 108홀 골프장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원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관리 등에 대해 충남과 경기 양 지역간의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을 조율하기 위해 협의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지역 균형 발전 기대...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인프라 조성 및 입주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파급효과로 전국적인 생산유발액은 총 54조 4330억원에 달하며 부가가치 유발액 18조 5810억원, 고용유발 효과 총 33만 5756명 등으로 예상했다.

특히 충남지역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생산유발액은 총 13조 3280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3조 9420억원, 고용 창출효과도 6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했다.

충남 최대 현안인 황해경제자유 구역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충남도는 국방대 논산 유치와 함께 균형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같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충남 서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외자 유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 글은 디트뉴스24(2007년 12월 21일자)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 맨손의 자원봉사자 50만명… 태안, 기적을 만든다
- 해상사고로 원유 1만2,000여톤 유출 ‘검은 재앙’
- 봉사자 계속 몰려… 외국인들 “한국 놀라워”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 및 방제 일지

12월7일 오전 7시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이 정박중인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원유 유출 시작

오후 8시 기름띠 태안반도 해안 습격

8일 정부, 재난사태 선포

9일 오전7시30분 유조선 원유 유출 중단, 총 1만900톤(1만2,547kℓ) 유출

11일 정부, 태안 등 6개 시·군 특별 재난지역 선포

16일 방제 자원봉사자 10만명 돌파

22일 방제 자원봉사자 30만명 돌파

24일 해경, 크레인선과 예인선 선장 등 2명 구속. 유조선 선장 계속 수사중

26일 방제 자원봉사자 40만명 돌파. 성금 110억원 돌파

29일 방제 자원봉사자 50만명 돌파 예상

12월 7일 이른 아침 충남 태안 앞바다에 쏟아진 1만2,000여톤이 넘는 검은 기름은 순식간에 태안 해변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다. 백사장이 시커멓게 변했고, 양식장의 굴과 전복은 모두 폐사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이던 태안 주민들은 절망했다.

그러나 절망은 곧 희망으로 바뀌었다. 매일 수만명씩 전국에서 몰려드는 자원봉사자의 손길은 기름띠를 빠르게 걷어내며 태안의 속살을 되찾고 있다. 방제 작업 지원을 위해 온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국민이 기적을 만들고 있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손길이 태안의 해안을 닦고 또 닦았다. 버스 안에서 기말고사를 보면서 태안으로 봉사활동을 온 대학생들도 있었다. 성탄절에도 방제복 차림의 인간띠는 이어졌고, 송년회 대신 태안으로 달려온 기업과 단체들도 많았다.

충남도 집계에 따르면 태안 자원봉사자는 사고 열흘만인 16일 연인원 10만 명을 돌파한 뒤 3,4일 간격으로 10만 명씩 증가, 보름 만인 22일 30만 명을 넘어섰다. 또 연말까지 50만명을 돌파할 것이고, 방제작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원봉사의 손길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기름유출사고 직후 (위)
피해복구 후 (아래)

방제 자원봉사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1997년 일본 후쿠이(福井)현 미쿠니(三國) 마을 앞바다 중유 유출 사고의 경우 석 달간 3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몰려와 기름을 걷어냈다. 하지만 태안은 불과 보름 만에 30만 명 기록을 깼다.

태안반도가 사고 이전처럼 복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파도와 백사장은 제 색깔을 찾았고, 자취를 감췄던 고동과 게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청둥오리, 왜가리 등 철새도 개체수는 많지 않지만 다시 날아들기 시작했다.

‘태안의 기적’은 세계 기름방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고, 그 주인공은 이름없는 자원봉사자들이다. 하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 그 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태안과 보령의 59개 섬은 이제서야 방제가 시작됐다. 특히 무인도는 아직도 기름 범벅이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이유다.

인재로 드러난 원유 유출 사고의 교훈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초동대응 실패, 방제능력 재점검 및 매뉴얼 정비, 유처리제 유해 논란 등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피해어민들의 피해배상에 대해서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진태구 태안군수는 “방제가 성공해 내년 여름 해수욕장들을 가득 채운 관광객들을 다시 보고 싶다”며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일했던 곳을 내년에 다시 찾아와 특별한 감회를 맛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자원봉사신청 (041) 670-2644~7

*이 글은 한국일보(2007년 12월 28일자)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똥똥 뭉친 열정 ‘승리’ 일궜다*

- 민·관합동 정부설득... 불가 → 이전 끌어내
923명 고용 효과·경제가치도 1371억 달해 -



12월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방대 논산 이전 발표는 단순히 ‘기관이 옮겨간다’라는 명제를 뛰어 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를 비롯해 충청도에는 각종 연구소와 정부기관, 공기업 본사가 등지를 틀었지만 기대감만 높았을 뿐 현재까지 지역과 동화되지 못한 채 하나의

‘섬’으로 표류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다. 하지만, 국방대 논산 이전은 지역 민·관이 하나로 똥똥 뭉쳐 중앙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열정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국방대 이전은 2년 반 동안 행정도시와 논산을 놓고 갈등을 빚어 공공기관 지방이전대상 178개 기관 중 유일하게 이전지를 결정하지 못했었다. 국방대는 특히 천안, 아산, 연기, 등을 주장했지만 천안, 아산은 정부가 인정한 성장지역으로 이미 명분을 잃었고 연기는 행정도시와 통합 논의 중이어서 부적절한 평가가 팽배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 12월 12일자 5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대는 논산 이전 불가 사유로 ▲교통 접근성 악화로 교육기능 차질 ▲1,100여 명에 이르는 외래교수 초빙 불가능 ▲학생수 감소 ▲해외 군사외교 인사 방문시 불편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완구 충남지사의 치밀함으로 민·관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 근거와 논리를 꼼꼼히 찾아 균형발전위원장과 건교부 장관 등을 설득하는 한편, 이해가 부족하면 또다시 찾아가 보완 설명하는 등의 열정으로 마침내 국방대 논산이전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했다.

우선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되면 각 군(軍) 본부와 육군훈련소, 항공학교 등과 함께 국방산업단지(66만㎡)로 엮여 대전의 자운대,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를 클러스터화 할 수 있어 낙후된 충남 서남부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3군 사관학교까지 유치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방대 논산이전 결정은 기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인 효과도 지대하다.

충남발전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국방대 논산 이전 효과로 일단 지방세 12억 2,000만 원이 늘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된다. 또 923명의 고용효과와 87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492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게 된다.

논산시도 시유지 6만 6,000㎡를 무상 제공하며 진입도로 건설, 문화·체육 시설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에 2,000여억 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백제문화제 ‘아시아 최고의 역사문화축제’로 만든다

— 제53회 백제문화제 결산 및 추진계획 보고회서 밝혀 —



충남도는 12월 5일 이완구 도지사 주재로 공주·부여 양 지역 시장·군수, 의장, 문화원장과 행사관계자, 자원봉사자 및 백제문화제 집행위원, 자문위원, 평가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백제문화제 결산 및 제54회 백제문화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제53회 백제문화제 공식 후원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공주대학교 이찬희 교수의 평가보고에 이어 한찬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기획관리처장의 백제문화제 결산과 내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금년 행사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이찬희 공주대 교수는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73.5%가 매우 만족하였다고 답하였으며, 그중 대 백제기마군단 퍼레이드와 백제향, 인절미 축제, 사비백제의 부활 등이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년 백제문화제의 가시적 성과로는 관람객 126만 명(외국인 102천 명 포함)과 353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계획구상에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한찬희 처장은 개최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간으로 늘려 추진할 계획이며, 주제도 ‘해상왕국 700년 대 백제’로 바꿔 관람객 15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존 프로그램인 ‘백제향’과 ‘대 백제 기마군단 퍼레이드’를 대폭 보완하여 추진하고

신규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대의 불꽃놀이 쇼 ▲700m 백제성 쌓기 ▲대 백제 사신 행렬과 한·중·일 무령왕 대제 ▲5악사와 B-boy 댄스공연 ▲차전놀이 등 전통놀이 시·군 경연을 추진하여 관람객에게 흥미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완구 지사는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평이한 행사로는 관람객에게 깊이 있는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다면서, 내년 행사는 보다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남들이 못하고 안 될 것 같은 행사를 찾아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보고된 행사 외에도 백제유물 되찾기 운동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여 백제문화제를 아시아 최고의 역사 문화축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 금강환경대상 수상

— 전국최초 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수질총량관리센터 개소 —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사가 공동주최하는 제4회 금강환경 대상에 전국최초로 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과 수질총량관리센터 개소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물 통합관리에 힘써온 충청남도(수질관리과)가 선정됐다.

12월 4일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강환경대상’을 받은 충청남도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물 관리업무를 전국최초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수질총량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충남도의 우수한 공적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다원화된 물 관리체계에 따라 농림수산국 4과, 복지환경국 2과, 건설교통국 1과 및 보건환경연구원 3과에서 각각 추진하던 물 관리업무를 지난 5월 3일 전국최초로 ‘물 통합관리본부’ 발족과 함께 물 통합관리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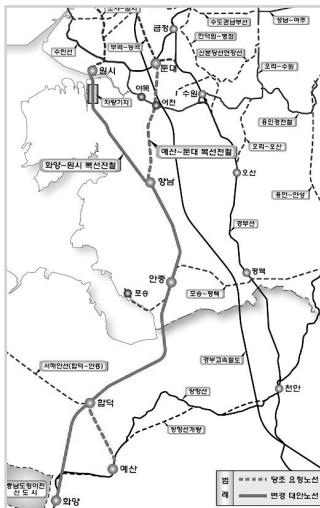
또한, ▲충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수질총량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하천 등의 수질오염 특성분석과 과학적인 근거로 대안 제시 ▲각각 다른 부서 및 기관에서 관리하던 하천과 저수지 등의 수질

측정망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 ▲3국 7과, 1연구원에서 개별 추진하던 물 관련 사업을 물 통합관리를 통해 4대 목표 42개 실천과제를 선정 ‘물 통합관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물 통합관리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저수지 수질개선 시범연구사업 ▲물 관리 관계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금강생태 탐사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상·하수도분야 국비확보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확정

- 총연장 90.18km 2017년 완공, 서해안 지역 발전 기폭제 -



충남도 홍성군 금마면 화양에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를 잇는 연장 90.18km(사업비 28,304억원)의 서해선 복선전철 철도가 내년 9월 착수, 2017년 준공 목표로 건설된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은 기획예산처에서 2006년 말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면서 당초 건설계획인 예산↔야목의 경제성(B/C 0.65)이 낮게 산출됨에 따라 시·중점을 화양↔원시로 변경하여 가며 악전고투 끝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서해선 복선전철 철도건설을 어렵게 얻어냈다.

시·중점을 변경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과정에서 충청도가 서해안 개발시대와 도청신도시건설, 당진지역 철강 산업의 부각 등을 내세우면서 철도건설의 당위성을 주장, 사업의 착수를 이끌어 내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서해선 철도건설은 호남선과 전라선이 익산에서 합류하여 장항선 홍성과 화양에서 분기, 이번 에 신설되는 서해선(화양↔원시)을 거쳐 원시와 소사를 경유, 경의선과 연결됨으로서 남북을 잇고 더 나아가 중국·러시아 횡단철도와 연결, 중국엔 유럽과 연결까지도 예상된다.

낙후된 우리도의 서남, 서북부의 활성화와 신 도청 개발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충남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현재 기반복선·노선단선 개량사업이 한창인 장항선의 복선전철화를 앞당기고, KTX 운행과 수도권 전철의 신도청소재지까지 연장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남도,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로드맵 최종 확정

— 향후 5년간 장애인복지발전에 4,350억원 투자 계획 마련 —

충남도는 11월 20일 이완구 도지사와 장애인단체장 및 기업인단체장, 관계기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지난 5일 연구용역결과 최종 보고회에서 확정유보 하였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도는 이번 최종적인 계획을 확정하기까지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투자예산의 변경 확정(4,816억원→4,350억원), 비예산사업 적극 발굴 추진, 시·군과의 사업 계획 합의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5개년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5개 분야 66개 사업에 4,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분야별로는 ▲안정된 삶을 위한 생활기반 조성분야 37개 사업에 3,948억원, ▲원활한 이동 및 접근을 위한 환경개선분야 9개 사업 129억원,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분야 10개 사업 193억원, ▲하나되는 통합교육 및 정보화 분야 6개 사업 44억원,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 신장 4개 사업 35억원을 투자 하게 된다.

이를 재원별로는 ▲국비 1,387억원, ▲도비 1,941억원, ▲시·군비 1,022억원으로 국비가 31.9% 로서 국비의존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2,000가구와 사회복지 전문가 8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외부연구진,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장·단기 장애인 복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함은 물론, 이번 결과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장애인 복지발전의 로드맵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민선4기 3년차 조직개편 ‘틀’ 확정

- 純增 없이 자체조정으로 1과 3담당 신설, 10국 45과 193담당 -

충남도는 민선도정 3차년도 도정방향에 맞는 조직개편의 ‘틀’을 확정했다.

금번 조직개편은 ‘일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하면서 기능이 쇠퇴한 일부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동시에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정원 증원 없이 군살을 빼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된 필수 불가결한 복지, 경제, 문화예술 분야를 보강하여 조직의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기구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구와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편한 것이 큰 특징이다.

주요 개편내용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충족을 위한 노인장애인과 신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T/F팀 신설 ▲문화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시설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순수문화예술 분야 기능보강 ▲활력 있는 국제통상, 대외 농어업 (FTA대책) 분야 전문 인력 등을 중점 보강하여 ‘강한 충남’ 실현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

이로써 충남도의 조직은 10국 44과 190담당에서 1과 3담당이 증설되는 10국 45과 193담당으로 늘어나지만 기존 정원으로 조정하였고, 정원도 3,337명으로 단한명의 인력증원이 없는 민선4기 3차년도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道에서는 입법예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2008년 1월중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고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전한 환경정화·피해배상 절실

- 경제적 가치산정, 가해자 명확한 책임구분 필요
- 전문 방제팀에 의한 체계적 생태복원 이뤄져야



12월 24일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과 희망제작소가 공동 주관한 '태안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피해대책 및 지역 미래발전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피해 보상 및 생태·환경 조사, 방제 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책, 향후 대응 로드맵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성수 변호사=씨프린스호 사건 당시 국제기금(IOPC Fund)에서는 어업피해보상에 있어 피해어업인 측에 대해선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선임한 서베이어의 의견(보고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상이 농후했다.

또 국제기금은 씨프린스호 사고 배상 당시 국제기금이 과학적 증거를 내세워 어민들의 청구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선례를 고려해 이런 사태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과학적 증거 수집을 도와줘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는데 관련 자료는 영문 자료 외에 별로 없고, 적용 법규 역시 국내법과 국제법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절실하다.

맨손어업 종사자 등과 같이 소득 증빙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어로소득 통계자료 등이 지원돼야 한다. 또 국내 관련 판례는 물론, 국제기금에서 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청구를 해야 한다.

▲전승수 교수=초기방제 작업에 있어 물에 기름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타르조각까지 생각해



야 한다. 연안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으니 초기방재의 정의 뿐만 아니라 평가팀을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뒤 논의해야 한다.

초기방재의 문제점과 교훈을 생각해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해안선에 기름 찌꺼기가 물려있는 게 문제인데 자원봉사 활용시 메뉴얼에 따라 연안 특성에 맞춰 제거작업이 수행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피해 범위 확산은 물론, 장기적인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초기방재시에 해안 암석 등에 고압수를 쓰는데 암석제거 때 온수의 온도에 따라 피해가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하며, 갯벌에 대한 폭넓은 규정 및 우리 지역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전체 해안선에 대한 조사에서 세척 구간, 생물의 서식지 파괴 및 복원 범위 등 해안선 특성에 맞게 방재방법, 자원봉사 투입 등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주민과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한 신탁협의회를 구성하고, 유류오염, 생태, 문화복원 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장기적 손실파악 및 지역개발 계획, 지역공동체 복원체제, 생태계 복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유류오염 방재 메뉴얼 작성, 대형유회수선 확보 및 유조선 호송선 제도 시행, 유출사고 대응 장비 개발 및 보유, 이중선체 유조선 의무화, 방재담당자 교육 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체계 구축 및 행동메뉴얼 마련 등 유류오염 방지 및 방재 체제를 구성, 운영하고, 유류오염 벌금 및 피해보상 법적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강홍순 처장=유조선의 이중선체 의무화 등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며, 해상교통관리시스템(제도, 장비, 운영인력), 위험물 운반선에 대한 감시시스템 구축, 안전한 피항지 확보, 재난시 대응 계획 및 훈련이 필요하다.

주요 해역별 오염 확산을 정확히 예측하고, 해양환경조사(생태, 지형 등) 및 민감지역을 선정

해 우선 방재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방재활동과 관련해 방재장비 및 인력을 확충하고, 해양오염사고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한편, 유처리제 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전문가 자문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상과 관련해선 신속한 피해조사와 객관성 확보, 어업소득자료의 객관성 확보, 정부에 의한 수산자원 및 환경현황조사,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와 법률 지원 등이 필요하며, 환경영향조사 및 복원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조사 및 자연친화적 복원 방법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또 국가방재계획 및 지역방재 실행계획을 재평가하고 이를 재수립해야 하며, 방재능력을 권역별로 2만~3만톤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정종관 팀장=유처리제의 사용은 정책 의사결정 문제로 현장 방재책임자는 과학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사용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기름오염도가 심한 지역은 굴삭기로, 덜한 지역은 선별기로 기계적인 토양경작법을 활용해 제거할 수 있다. 염도가 높아 방제작업 과정에서 무스 형태로 가라앉은 것은 해저관찰 및 기름 상태를 평가해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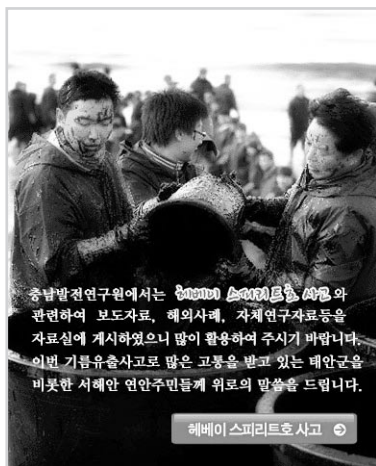
복지부의 역학조사결과 구토 증세 등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독성에서 비롯됐다는 잠정결론이 나온 만큼 방제작업이 장기화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필수다.

장기계획으로 환경생태 모니터링시 2008년부터 10년 간 사고 지역 주변 생태계의 변화, 토양 중 유류의 잔류 실태 등의 환경영향조사와 함께 훼손된 해안사구의 복구, 잔류 유류 제거 등 생태계 복원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하며, 기름유출로 해저퇴적 기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해저수생태계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요구된다.

환경자원 가치와 장기적 생태복원에 소요되는 자원의 손실가치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 산정이 중요하다. 특히 생태복원의 기준 시점, 복원 정도를 고려한 엄중하고도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 글은 중도일보(2007년 12월 25일자)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충발연, 헤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 사고 관련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지난 12월 7일 발생한 헤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충발연 홈페이지에 자료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료실은 방제관련, 환경영향관련, 배상관련, 해외사례, 관련법률, 언론보도자료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고 관련 전문가, 연구자, 공무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충발연 관계자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사고 관련 자료의 공유로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충발연에서도 이와 관련한 환경, 관광,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서해안을 살리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 www.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2007년 제2차 정기 이사회 개최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연구원 세미나 가져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12월 6일 오후 3시 대천 FUN BEACH호텔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충발연 이사장)를 비롯한 이사진과 충발연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이사회에 앞서 ' 시도연구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주현 원장의 주제발표, 참석한 이사진과 연구원간의 토론 등 충발연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충남발전연구원이 타 시도연구원과 비교해도 정책연구능력과 연구 성과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내년 초 공주 신청사 이전으로 연구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 믿고, 충남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앞으로 충남의 정책연구는 공무원, 관계기관과의 공동연구, 코칭과 매니징 역할 등 이론과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 연구에 초점을 맞춰 연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하반기 공개경쟁 신규연구원 임용 및 임명장 수여

충남발전연구원은 2007년 하반기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4명의 신규연구원을 임용하고 12월 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부서별 신규연구원은 다음과 같다.

				
성명	임재영	윤정미	이관률	이인희
직급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서	산업경제연구팀	지역정책연구팀	지역정책연구팀	문화관광연구팀
연구분야	지역경제, 기술경제	GIS, 도시계획	지역개발, 지역경제	지리학

충발연, 대발연과 함께 추계 단합대회 개최

— 예산 덕숭산 등반대회 등 화합과 단결의 시간 가져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1월 9일 예산 덕숭산 등반대회 등 추계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번 단합대회에는 연구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덕사 내의 문화재를 살펴보고 덕숭산 정상까지 등산하며, 양 연구원의

우의와 단결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충발연과 대발연은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 연구과제 수행을 계획하고,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며 올해처럼 연구원 단합대회도 매년 함께 치를 예정이다.

연말까지 충남 4개 권역별 ‘갈등관리 정책포럼’ 줄이어

— 충청남도 주관 공동 워크숍 개최 등 갈등 예방과 해결에 힘 모아 —



충청남도가 상생과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권역별 포럼을 창립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이하 ‘포럼’)의 협력과 지원으로 이뤄지는 충남의 권역별 갈등관리 정책포럼은 11월 2일 보령시 한화리조트에서 창립

총회를 가진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총 4개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공공정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 갈등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권역별 포럼 현황을 살펴보면 ▲북부권역(천안, 아산, 연기, 예산) ▲서남부권역(공주, 논산, 계룡, 금산) ▲중부권역(보령, 서천, 청양, 부여) ▲서해안권역(서산, 태안, 당진, 홍성)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 권역별 포럼을 총괄하는 중심도시를 시·군 하나씩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 창립총회에서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된 조성국 청양 이장협의회

장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서로의 입장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우리 지역의 갈등사안들을 논의하고 보다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천적 포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날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상임공동대표 권경득)과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의 공동주최 및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주관으로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의 창립총회와 연계하여 ‘전환기 지방정부 갈등이슈와 해법 찾기’란 주제로 행자부 관계자, 충남도 갈등관리담당관, 보령시·서천군·청양군·부여군 관계자, 학계,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의 2007년도 제3차 워크숍이 최병학 박사(포럼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의 ‘지자체 갈등관리의 의미와 방향’이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 이선우 교수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으로써의 Policy Dialogue’, UNDP금강습지사업관리단 최진하 단장의 ‘갈등이슈 지역에서 지역공동체간의 입장 차이’란 주제발표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으로 ‘포럼’과 충남 권역별 갈등관리 정책포럼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 포럼 운영 방안, 갈등관리 기법 교육,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등 충남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 연구원 협의회, 실무 워크숍 가져

- 지자체 연구원의 발전과 전략,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전국 시도 연구원 협의회(회장 김용웅, 現 충남발전연구원장)가 주최한 실무 워크숍이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안면도 오션 캐슬에서 행정자치부 안경원 사무관, 지자체 연구원 실무책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연구원의 발전전략”, 연구원 경쟁력 제고 및 합리적 평가 방안, “연구원 경영합리화와 복지 향상” 등의 주제로 1박 2일간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원발전연구원 염도민 부원장은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 및 주요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현재 전국 시·도에서 출연한 총 15개 지자체 연구원이 설립되어 있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연구원의 위상이 결정되는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하면서 “각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연구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조직 개편, 전문적 연구를 위한 인력 확보와 자원의 활용,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네트워킹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도 연구 분과와 경영 분과로 나뉘 실무책임자간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는데, 일부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원이 열악한 근무 조건과 복지, 비합리적 조직 구성, 과도한 연구 과제 수행에 따른 양질의 연구가 힘들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구원의 발전과 정보 공유를 위해 실무워크숍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연구원 신청사 상량식



지난 10월 12일 오후 4시, 공주시 금홍동 지방공무원교육원 내에 들어설 충남발전연구원 신축공사현장에서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발연 신청사 상량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수연수원 등 기관장 및 관계자도 참석하여 상량식을 축하

하며 신축공사 현장을 함께 둘러보았다.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개원 이후 처음으로 독립 청사를 갖게 되었으며,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2,710.76m²) 규모로 2008년 2월 준공과 함께 3월중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위해 지역역량 강화를

- 관 주도 탈피, 마을리더 육성 교육, 시민참여 활성화 시급 -



란 주제로 10월 5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열렸다.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살고싶은도시만들기지원협의회」가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살고싶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방안”이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의 도시지역은 양적성장과 중앙정부 의존적 발전 과정에 익숙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관련전문가·대학·지방연구원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능동적·자발적 실천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충남대학교 박재묵 교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은 주민과 지자체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은 만큼, 올바른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고유의 토착적 의제 발굴 ▲관주도의 추진기구 운영 탈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공동학습을 통한 전략 공유 ▲지역 공동체의 복원 또는 창출 등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마을 리더 육성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데,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는 “우리나라 농촌은 정책의 취지를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할 뿐더러 기존 교육이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충남지역 농촌지역 주민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을 리더 육성 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농촌지역주민의 97.8%와 담당 공무원의 88.9%가 마을리더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존 교육방식에 대해 농촌지역주민은 ‘주입식, 일방적인 교육’이었다는 평가가 45.3%, 스스로 고민하고 발표할 수 있는 ‘토론식, 참여식 교육’이었다는 평가는 28.3%에 불과하여 기존 교육방식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마을리더 역량배양이란 대상지역의 주체들의 공동실천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능동적인 실천 학습을 통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협성대학교 이재준 교수는 시민참여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면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등 파트너십이 강조된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시민교육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경기도 도시대학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은 물론 정체성 고취와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 지방이 더 절실하다

— 충청권지역혁신협의회, 충청권 도시재생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충청권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과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12월 7일 오후 1시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열렸다.

대전·충남·충북지역혁신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충청권의 도시재생” 국제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비롯한 관계자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안건혁 교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1주제 “도시재생의 세계적 추세”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토마스 베리 (Tomas Barrie) 교수의 ‘미국 중소도시의 재생 전략과 사례’ 및 일본 토호쿠대학 마사테루 히노 (Masateru Hino) 교수의 ‘일본지방도시의 최근 사례로 본 도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제2주제 “충청권의 도시재생” -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박사 등의 ‘대전·충남의 도시재생 방향과 전략’ 및 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박사 등의 ‘충북의 도시재생 방향과 전략’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실상 국내 도시재생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

비사업이란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안건혁 교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추진 결과는 다른 지방 도시에서의 인구와 산업의 유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로 이어져 자생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별 유행처럼 변진 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지역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근 지역과의 불균형과 공동화를 부추기는 등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결국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복합적 측면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이 지방도시에 적극 투입되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토호쿠대학 마사테루 히노(Masateru Hino) 교수 역시 “일본의 지방도시도 더 이상 외부 자본의 유치와 경제성장 논리에 의존하는 지역 개발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간 특성을 고려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유연하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방도시의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계획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토론회” 참가

— 행정자치부, 지역혁신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주최 —



11월 29일(목요일)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조연설과 행정자치부 동영상 상영으로 식전행사가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토론회와 3세션으로 나뉘어 학술행사가 개최되었다. 종합토론에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성과와 전략적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계호 경남 창녕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좌장 아래 이기원 강원 인제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발표로 현재까지의 지역혁신협의회의 성과 및 앞으로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약 4시간에 걸쳐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지방분권·균형발전 평가”, “해외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사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 모색” 등을 주제로 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아래 국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주었다.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충남기초지역혁신협의회 공동 주최 —



11월 22일(목)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충남지역혁신협의회를 비롯한 충남의 13개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웅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강신정 충남기초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용문 국장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해”라는 주제 아래 특강을 시작으로, 최계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의 “지역혁신리더의 역할”, 김용승 충북 증평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지역 속으로 주민 속으로”라는 주제로 증평군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협의회 위원들의 역할과 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충남지역혁신협의회를 비롯하여 충남지역의 13개 기초지역혁신협의회가 약 4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어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각 협의회의 애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앞으로 협의회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충남 인적자원개발 R-Pack사업 협약 체결

-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14개 참여대학, 기업체대표 간의 협력체계 구축 -



11월 5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14개 참여대학 및 기업체대표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 인적자원개발 R-Pack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충남 인적자원개발 R-Pack사업'은 지역인력 수급전망과 대책, 교육사업, 직업교육 훈련 및 대학 교육의 특성화·지역밀착화 등 영역별 정책과제 발굴 등의 사업을 충청남도, 대학,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RHRD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금번 R-Pack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3억 1천만 원이 투자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금번 협약식 행사는 충청남도 이완구 지사를 비롯한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문규 충청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30명이 참석하였으며, 대전·충남지역 총장협의회 공동 회장인 순천향대학교 서교일 총장, 남서울대학교 공정자 총장을 비롯한 14개 대학 총·학장과 충청남도기업인연합회장, 삼성전자, 현대 오일뱅크 등 도내 대기업도 협약에 참여하여 '충남 R-Pack사업기관 교류협력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충남도는 행·재정의 지원, 사업홍보 및 인적자원 수요·공급을 담당하고, 유관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학)는 충남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 지역 내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한 자문 등 사업의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양대학교 등 14개 대학은 지역 인력의 산업 Mismatch 해결을 위한 전략적 인재육성 프로그램개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지역 내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분 및 활용, 지역의 수요 및 공급여건을 고려한 특화산업지원형, 취업능력개발형, 기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충청남도기업인연합회, 삼성전자, 현대오일뱅크 등 기업체는 본 사업을 후원·지원하고, 우수한 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지역사회 기업 및 단체 후원을 유도할 예정으로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과 대학, 그리고 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사회 인적자원개발의 혁신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3월, 충남발전연구원이 제2의 개원을 알립니다



이전주소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지방공무원교육원내

문의 충남발전연구원 총무팀

Tel. 042-820-1190



원고모집

열린충남은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충남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기고 등
참신한 내용과 알찬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열린충남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논단 : 한글파일, A4, 15~20페이지 내외 (글자크기 12Point, 줄간격 160%)
- 기고 : 한글파일, A4, 2페이지 내외 (글자크기 12Point, 줄간격 160%)

| 보내실 곳 | 전화 042-820-1125 팩스 042-820-1129 이메일 cdipr@cdi.re.kr

